

2015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전문지원기관 연차보고서

연구기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목차

CONTENTS

Chapter I

일반 현황 / 1

Chapter II

2015년 주요 업무 내용 / 11

1. 정책 점검평가 업무

- 1.1.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시행계획 점검평가15
- 1.2.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25

2. 조사연구 업무

- 2.1. 농어촌 영향평가제도 지원43
- 2.2. 농어촌 주민 정주민족도 조사49
- 2.3. 삶의 질 및 지역발전지수 구축60
- 2.4. 삶의 질 향상계획 심층연구70



3. 정책 현안 발굴 및 홍보

- 3.1. 이슈리포트 발간85
- 3.2. 삶의 질 정책 우수사례집 발간92

4. 정책 토론회, 컨퍼런스 개최

- 4.1. 삶의 질 향상 정책 컨퍼런스 개최99
- 4.1. 농어촌 삶의 질 향상 정책 대토론회 개최104
- 4.3. 전문가 정책세미나 개최110
- 4.4. OECD 국제 컨퍼런스 참석 및 현장 시찰117

5. 네트워킹 및 정책 지원 기반 구축

- 5.1. 정책지원 네트워크 및 현장모니터링단 구성운영127
- 5.2. 삶의 질 통계DB 구축 및 기타 업무 지원134



CHAPTER

I



일반 현황



❖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소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삶의 질 향상 위원회)’는 농어업인 등의 복지 증진, 농어촌의 교육 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에 관한 정책을 총괄·조정하고, 기본계획을 심의하며, 그 추진 실적을 점검·평가하기 위하여 설치된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인 등의 삶의 질 향상, 도시와 농어촌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농어업인 등의 복지증진과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주요 기능과 활동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대한 심의

농어업인의 삶의 질과 관련한 중앙행정기관 간의 협의 및 의견 조정

기본계획의 추진 실적에 대한 평가

- 2004. 3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공포
- 2005. 4 「제1차 농림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 발표
- 2009.12 「제2차 농림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 발표
- 2010. 7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개정
- 2012. 4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전문지원기관(한국농촌경제연구원) 지정
- 2014.12 「제3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 발표
- 2015. 6 2014년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시행계획 추진실적 및 2015년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시행계획 발표



❖ 전문지원기관 개요 및 연혁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46조)」에 따라 삶의 질 향상 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전문지원기관 역할을 수행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위원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국립·공립연구기관, 국가 및 지자체가 출연·보조한 연구기관 등을 전문지원기관으로 지정하고,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 전문지원기관으로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역할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정책의 실효적 추진을 위한 지원 체계 구축

- 농어촌 환경 변화와 주민의 수요 다변화 등을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관련 정책의 효율성과 실효성 증진
- 현장 중심의 정책 추진 상황 모니터링과 성과 평가 체계 마련

삶의 질 향상 위원회의 전문 지원기관으로서 관련 업무 지원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계획 심층평가,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 실태 점검·평가, 농어촌 영향평가 제도 운영 지원
- 농어업인 삶의 질 실태에 대한 다차원적 분석과 관련 정보 제공, 정책 과제 발굴, 관련 정책 홍보, 교육 및 컨설팅 지원 등

□ 전문지원기관(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혁

- ▶ 2010년 「농어촌서비스기준 운용 방안 및 농어촌 통계 기반 구축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수행
- ▶ 2011년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 등 업무위탁용역」 수행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계획 심층평가 실시
 - 2011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 실시
 - 농어촌 영향평가 전문평가 실시
- ▶ 2012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 위원회의 전문지원기관으로 지정

 -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12-217호(2012년 4월 19일)
 - 2014년 12월 31일까지 전문지원기관 관련 업무 수행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전문지원기관 업무위탁용역」 수행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계획 심층평가 실시
 - 2012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 실시
 - 농어촌 영향평가 전문평가 실시
- ▶ 2013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전문지원기관 업무위탁용역」 수행

 - 농어촌의 삶의 질 실태와 주민 만족도 파악
 - 2013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 실시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계획 심층평가 실시
 - 농어촌 영향평가 전문평가 실시
- ▶ 2014년 「제3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 수립 지원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전문지원기관 업무위탁용역」 수행

 - 농어촌의 삶의 질 실태와 주민 만족도 파악
 - 2014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 실시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계획 심층평가 실시
 - 농어촌 영향평가 전문평가 실시
 - 삶의 질 정책 컨퍼런스 개최(2014년 11월 21일)



▶ 2015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위원회 전문 지원기관으로 재지정(2015년 ~ 2019년)

-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15-85호(2015년 3월 17일)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삶의질정책연구센터 출범(2015년 7월 1일)
- 삶의 질 정책지원 네트워크 출범(2015년 7월 21일)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전문지원기관 업무위탁용역」 수행

- 2015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 실시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시행계획 점검·평가 지원 및 평가지표 개발
- 농어촌 영향평가제도 지원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계획 심층연구 실시
- 농어촌의 삶의 질 실태와 주민 만족도 파악
- 삶의 질 향상 정책 컨퍼런스 개최(2015년 7월 21일)
- 삶의 질 향상 정책 대토론회 개최(2015년 12월 29일)

❖ 삶의질정책연구센터 개요

삶의질정책연구센터는 「제3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 계획」 제5장 ‘삶의 질 정책 추진기반 강화’에 근거 ’15년 7월 1일 전문지원기관 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내 조직으로 출범

「제3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

V. 삶의 질 정책 추진기반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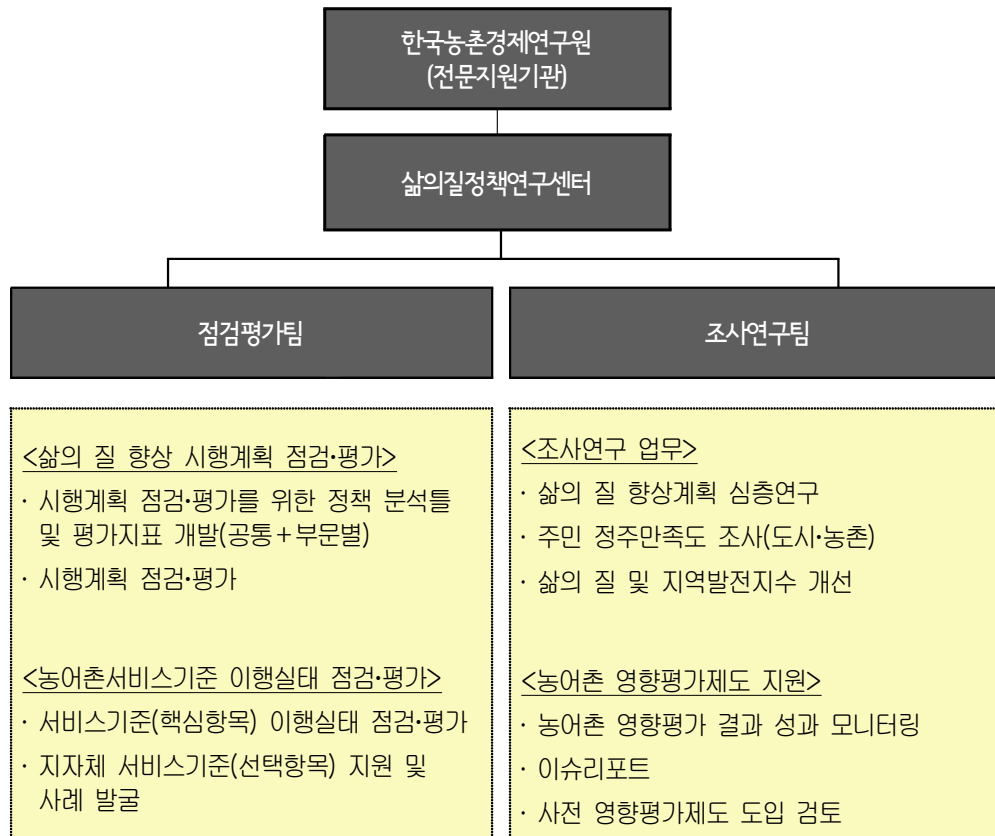
① 범부처 정책 협업 활성화

□ 전문지원기관을 통해 삶의 질 정책 네트워크 구축

- 전문지원기관(KREI 지정, ’ 12.5.~)을 ‘삶의질정책지원센터’ 로 확대하고 분야별 국책연구기관, 시·도 연구원 등과 상시 협력체계 구축(’ 15.3.~)

❖ **삶의질정책연구센터 주요 업무 및 조직 구성**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시행계획의 점검·평가
-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
- 농어촌 영향평가제도 지원
- 삶의 질 정책지원 네트워크 및 현장자문단 운영
- 기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의 업무 지원





❖ 제3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5개년 기본계획 ('15~'19)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특별법」에 근거를 둔 5년 단위 법정계획으로서 보건·복지, 교육, 지역개발, 일자리 등 분야별 정책에 대해 농어촌 공간 관점으로 통합 조정하여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종합계획의 성격

□ 제3차 기본계획의 정책 방향

농어촌 주민과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 향상 정책 추진

- 농어촌 맞춤형 정책을 통해 공공서비스 사각을 해소하고, 정주체계별 기능 강화 및 농어촌 자원을 활용한 경제 활성화 촉진
- 지역 공동체를 중심으로 현장과 소통하는 정책기반 조성

<삶의 질 정책 기조 변화>

구 분	과 거	미 래
이 념	도시 수준의 생활여건을 위한 도·농간 격차 완화	농어촌다움·농어촌 가치 중시, 주민체감 증진
정책 대상	농어업인, 농어촌 주민	지역 공동체, 농어업인, 농어촌 주민
정책 범위	복지, 교육, 의료 등 필수사회서비스 확충	안전, 환경 등 편안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전 략	농어촌 지원 확대 부문별 정책 강화	농어촌 맞춤형·특화 정책, 분야 간 연계·통합 지원
사회 서비스	HW 정비, 인프라 구축	SW 강화, 사각지대 해소
공간정비	권역·마을기반 조성, 유형별 차등 보조	중심지 기능 및 마을과의 연계 강화, 先역량 강화와 역량 단계별 지원
산업·일자리	도시 자본 및 투자 유치, 1차 산업 경쟁력 강화	농어촌지역자원 활용 및 지역 순환, 1·2·3차 산업 연계
정책추진주체 및 전달체계	중앙정부 중심 지방정부 협력, 관(官)주도	지역·공동체 중심 거버넌스, 민간역할 및 중간지원조직 강화
정책평가 및 환류	하향식 ▶ 상향식	쌍방향 네트워크

□ 비전 및 추진기반

활력 있는 공동체를 기반으로 누구나 살고 싶은 행복한 농어촌 구현

[중앙] 범부처 연계·통합 정책 추진 강화

[광역·기초] 지역의 삶의 질 정책 실행력 강화

[현장] 지역공동체 참여 확대 및 역량 강화

□ 부문별 목표

1. 보건·복지

- 농어촌 보건복지 서비스 질 제고와 복지 체감도 증진

2. 교육

- 교육 인프라 확충 및 교육의 질 제고를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농어촌 교육

3. 정주생활기반

- 공동체 주도의 살기 좋고 편리한 정주기반 및 생활권 구현

4. 경제활동·일자리

- 농어업농어촌 자원 융복합을 통해 부가가치 및 일자리 창출

5. 문화·여가

- 다양한 문화여가를 누릴 수 있는 여건 조성

6. 환경·경관

- 농어촌다움이 유지보전되는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경관 조성

7. 안전

- 자연재해 및 범죄안전사고에 안심 할 수 있는 안전한 농어촌 조성



CHAPTER

II



2015년 주요 업무 내용





1. 정책 점검 · 평가 업무

1.1.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시행계획 점검·평가

1.2.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

1.1.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시행계획 점검·평가

❖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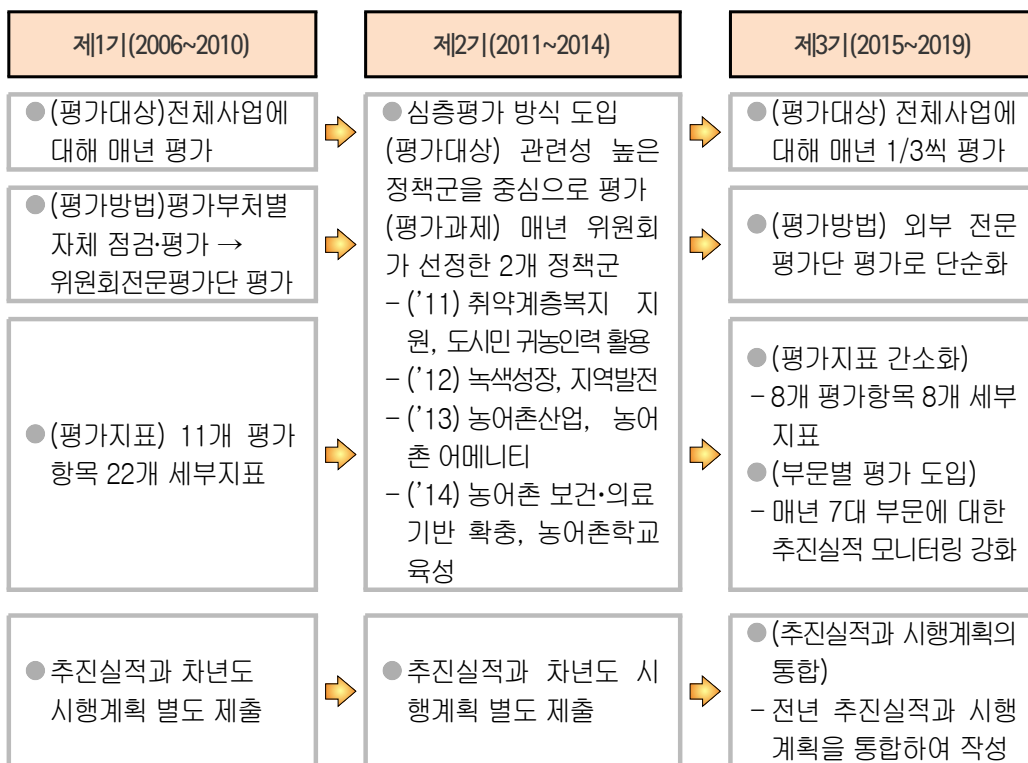
- (목적) 제3차 기본계획 기간 중 18개 부처·청에서 추진되고 있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정책 추진의 효과성·효율성 및 주민 체감과 만족도를 점검·평가하고, 개선 대책과 신규 과제를 도출
- (경과) 제1차('05~'09), 2차('10~'14) 기본계획 기간의 시행계획 점검·평가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보완한 제3차 시행계획 점검·평가 계획 수립
 - 제1차 삶의 질 기본계획 기간 시행계획 점검·평가 실시
 - * 시행계획서 상의 전체 개별 사업별 추진 실적 평가로, 제1차 기본계획을 단위 사업별로 정착시키는 데 기여
 - * 개별 사업 평가에 대한 부처의 부담, 평가 결과에 대한 환류체계 미흡, 과제별 평가로 7대 부문별(보건복지, 교육여건 등) 종합적 성과 파악 곤란
 - 제2차 삶의 질 기본계획의 정책군 단위 시행계획 추진 실적 점검 및 심층평가 실시
 - * 개별 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평가의 한계를 개선코자, 관련성이 높은 사업들로 구성된 정책군을 대상으로 평가(위원회가 선정한 연도별 2개 정책군 실시)
 - * (예시)'14년 : 농어촌 보건·의료기반 확충, 농어촌 특성을 반영한 학교 육성
 - * 정책군별 심층평가로 평가 결과가 개별 사업을 구속하지 못함에 따라 담당 부처와 과제 담당자의 무관심 유발
 - 제3차 삶의 질 기본계획 기간 시행계획 점검·평가 계획 수립
 - * 국회 등 대외적으로 평가체계 미흡성이 지적됨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 당시 시행계획에 대한 점검 및 평가 실시 계획 반영('14.12)

- (법적 근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특별법」 제9조,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 주요 추진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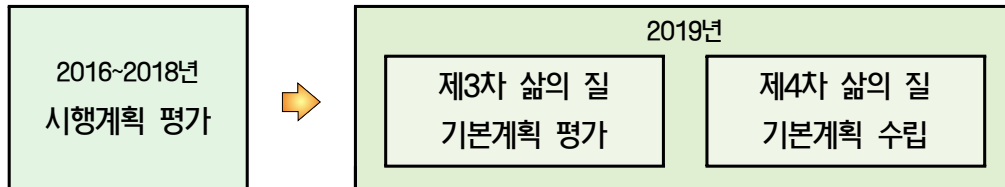
□ 기존 평가의 장단점 보완

- 제1기와 제2기 평가의 장단점을 보완하고, 평가자료 제출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
 - 기본계획상의 7대 부문별 성과목표 달성도와 시행계획상의 개별 과제 평가를 병행 실시
 - 평가에 대한 각 부처 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계획 상의 185개 과제 중 매년 1/3씩 평가, 차년도 평가 대상 사업 사전 제시



○ 중장기 평가체계 마련

- '18년까지 3개년에 걸쳐 전체 과제를 평가 후 2019년에는 기본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실시와 제4차 기본계획 수립



□ 세부 평가 방안 마련

<평가대상>

- '15년 시행계획 185개 과제 중 61개 과제 대상

<2016년 평가대상 개별과제 목록>

정책 분야	중점추진 과제	평가대상 과제
보건·복지 (6개)	<농어촌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	1-1-1-1 농어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
		1-1-1-2 두루누리 사업 활성화
		1-1-2-1 농업인 노후안정 농지연금 지원
		1-1-2-2 산지 담보 연금 도입 검토(*)
		1-1-2-3 경영이양 고령농업인 소득 지원
		1-1-3-1 기초생활보장제 사각지대 해소
교육여건 (5개)	<농어촌 특성 반영 공교육 서비스 확충>	2-1-1-1 농산어촌 전원학교 육성(**)
		2-1-1-2 농어촌 학교간 연계·공동 교육과정 지원
		2-1-2-1 농어촌 거점별 우수중학교육성(**)
		2-1-3-1 ICT를 활용한 농산어촌 학생 학습여건 개선(**)
		2-1-4-1 농어촌 학교 통학여건 개선
정주생활기반 (8개)	<정주 공간 활성화 및 농어촌 생활권 구현>	3-1-1-1 농촌중심지 활성화 및 마을정비
		3-1-1-2 농어촌주택 정비 지원
		3-1-1-3 농어촌장애인주택 개조사업 지원



		3-1-2-1 농촌형 교통모델 발굴
		3-1-2-2 교통서비스 강화
		3-1-2-3 내항여객선 운임 보조
		3-1-2-4 국고여객선 건조
		3-1-3-1 생활권 연계협력 확대
경제활동· 일자리 (17개)	<6차산업화 기반 마련>	4-1-1-1 지역단위 6차산업 활성화 지원
		4-1-1-2 6차산업 모델 정착
		4-1-1-3 어촌 6차산업화 지원
		4-1-1-4 농업인의 제조·가공활동규제완화
		4-1-1-5 지역특화발전특구 신규 규제특례 발굴
		4-1-2-1 6차산업화 지구 조성
		4-1-2-2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
		4-1-2-3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
		4-1-3-1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4-1-3-2 수산물전자직거래 활성화
		4-1-3-3 로컬푸드 확산
		4-1-3-4 수산정보이용 활성화
		<창업 촉진 및 역량 강화>
	4-2-1-2 소규모농업인 창업 및 소득화 지원	
	4-2-1-3 산림분야 6차산업 지원	
	4-2-2-1 6차산업 경영체의 맞춤형 지원 강화	
문화·여가 (10개)	<문화·여가 인프라 구축>	5-1-1-1 농어촌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5-1-1-2 농어촌 작은 도서관 조성
		5-1-1-3 농어촌 작은 영화관 조성
		5-1-1-4 농어촌 체육 공간 조성
		5-1-1-5 지역문화지수
		5-1-2-1 지역문화 전문 인력 양성기관 지정
		5-1-2-2 어르신 생활체육 지도사 배치
		5-1-2-3 문화 이모작 조성(*)
		5-1-2-4 지역문화 컨설팅 기반 구축
		5-1-2-5 학교 문화예술교육 확대

환경·경관 (8개)	<농어촌 어메니티의 체계적 관리>	6-1-1-1 주민 자율적 경관보전활동확대
		6-1-1-2 경관보전 직불제 개선
		6-1-1-3 조건불리지역 활성화를 위한 직불금 지원
		6-1-1-3 조건불리지역 수산 직불제
		6-1-2-1 농업유산 지정·관리
		6-1-2-2 농촌 경관 및 공간계획 기반기술 구축(*)
		6-1-2-3 자생식물원 및 생태 숲 조성
		6-1-2-4 농어촌 생태관광 활성화
안전(8개)	<자연재해, 기후변화 대응체계 강화>	7-1-1-1 수리시설 안전관리
		7-1-1-2 소화천 정비
		7-1-1-3 어항시설 보강
		7-1-1-4 농경지 침수피해 예방 대책
		7-1-2-1 산악기상 관측망 구축
		7-1-2-2 산불 예방·방지 대책
		7-1-2-3 산림 재해 모니터링
		7-1-2-4 산사태 취약지역 관리 강화
합 계		61개

(*) 5억 원 이하 사업

(**) 지방비로만 추진되는 사업

○ 개별 과제 평가와 함께 7대 부문별 평가 병행 실시

- 지표 달성도는 '16년도 시행계획 수립 시 기 제출

<7대 부문별 평가지표>

7대부문	점검·평가 항목	현행 성과지표	성과목표	
			2014	2019
보건 · 복지	농어업인 사회안전망강화	① 농어업인 국민연금 가입율(%)	63	70
		② 농지연금 가입자 수(명)	3,957	9,000
	보건의료서비스 확충	③ 응급의료기관 부재군지역(개)	12	5
	계층별 복지서비스 강화	④ 농어촌 국공립어린이집(개소)	580	630
	보건·복지 만족도(*)	⑤ 농어촌 보건의료 만족도(%)	('13)48.9	55.0
		⑥ 농어촌 복지여건 만족도(%)	('13)44.4	48.0



교육 여건	농어촌 공교육 확충	⑦ 농어촌 거점중학교(개교)	50	('17)80
		⑧ 농어촌학교 ICT 기기보급률(%)	48	('17)100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및 주체 육성	⑨ 농어촌 특성화 프로그램(개)	-	10
	농어촌 학생 교육복지	⑩ 진로상담교사 배치율(%)	('12)17.4	95
	농어촌지역과 학교 연계	⑪ 농촌유학 지원시설 수(개소)	16	25
		⑫ 읍·면 내 평생교육 거점시설 운영률(%)	('13)21	40
교육 만족도(*)	⑬ 농어촌 교육여건 만족도(%)			
정주생활 기반	정주 공간 활성화	⑭ 농어촌생활권 중심지육성(누계, 개소)	297	650
	기초생활 인프라 확충	⑮ 면단위 상수도 보급률(%)	71	82
		⑯ 농어촌 하수도 보급률(%)	78	85
		⑰ 농어촌 광대역 통합망 구축률(%)	81	90
	주거여건 개선	⑱ 최저주거기준 이상 가구(%)	88.3	90
		⑲ 농촌 주택개량 융자지원(누계, 만동)	1	6
⑳ 스테이트 주택 철거(누계, 천동)		50	187	
㉑ 빈집(폐가) 정비(누계, 천동)		121	161	
경제활동 · 일자리	6차산업화 기반 마련	㉒ 농가소득 대비 농외 소득률(%)	31	36
		㉓ 농가 다각화율(%)	12	20
		㉔ 6차산업 사업자 인증 수(개)	379	1,500
	농어촌 관광 체계화 및 품질 제고	㉕ 국내 관광 중 농촌관광 비중(%)	4.5	9.0
	농어촌 일자리 지원	㉖ 도농협력 일자리 연계(누적, 건)	13,000	100,000
		㉗ 마을단위 공동 경영체(개)	('12)2,600	4,500
경제활동·일자리 만족도(*)	㉘ 농어촌 경제활동·일자리 만족도(%)			
문화 여가	문화 인프라 및 인적기반	㉙ 농어촌 시·군 생활문화센터 조성(개소)	16	138
		㉚ 농어촌 문화마을 지정(누계, 개소)	2	50
	소외지역 문화·여가 지원	㉛ 읍·면별 연 2회 이상 찾아가는 문화프로그램 실시율(%)	('13)34.7	50
		㉜ 분기별 1회 이상 전문공연 실시 시·군 비율(%)	('13)31.2	50
	주민의 능동적 문화 참여	㉝ 문화 관련 동호회 참여율(%)	('13)1.9	4
	문화·여가 만족도(*)	㉞ 농어촌 문화·여가 만족도(%)		

환경 · 경관	농어촌 어메니티 관리	㉔ 국가중요농어업유산 지정(개소)	4	19
		㉕ 자생식물원 및 생태 숲 조성(개소)	55	74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㉖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설치(누계, 개소)	1,000	('17)3,950
		㉗ 마을 도랑 살리기 추진(개소)	-	300
	지속가능한 농어업생산 기반 조성	㉘ 친환경농업지구 조성(개소)	1,143	1,250
		㉙ 가족분뇨 자원화율(%)	89.5	91.0
	대체에너지 및 바이오 에너지 개발	㉚ 목재펠릿 생산량(천톤/년)	89	107
		㉛ 바이오에너지 생산용 소재 개발(종)	10	15
	환경·경관 만족도(*)	㉜ 농어촌 환경·경관 만족도(%)		
	안전	자연재해 및 안전영농기반	㉝ 수리시설 보수·보강(누계, %)	47
㉞ 상습침수 농경지 배수 개선율(누계, %)			56	66
농어업 작업 안전		㉟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률(%)	60	70
		㊱ 어업인 안전보험 가입률(%)	40	50
생활 안전		㊲ 마을별 방범용 CCTV설치(%)	30	50
보행·교통안전		㊳ 농업용 기계사고 발생건수	1,100	900
		㊴ 1만 명 당 보행 사망자 수(명)	0.6	0.5
안전 만족도(*)		㊵ 농어촌 안전 만족도(%)		

(*) 농어촌 삶의 질 실태와 주민만족도 조사 결과 활용(출처: 농림축산식품부)

<평가 방법 및 추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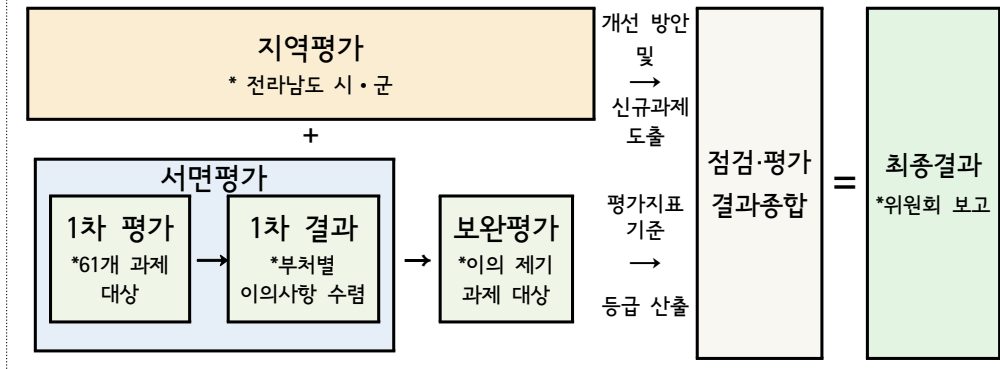
- '18년까지 3개년에 걸쳐 전체 과제를 평가 후 '19년에는 기본계획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실시
 - '15년 시행계획 185개 과제 중 61개 과제 대상
- 과제 단위의 서면평가와 정책·지역군 단위의 지역평가를 병행하여 과제 단위의 개선안뿐 아니라 정책군 단위의 개선안 도출
 - (서면평가) 평가지표를 기준으로 과제별 자료를 평가하여 등급을 산출하는 과제단위 평가
 - (지역평가) 농어촌 인프라가 취약한 지역(전남, 경북, 강원도)을 '18년까지 연차 점검, 삶의 질 정책의 추진 현황과 성과를 주민 체감도 중심으로

조사·평가

- 기본계획 수립 참여 전문가, 분과위 민간위원 등 삶의 질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를 중심으로 점검·평가단 구성

< 평가 및 추진체계 >

서면평가와 지역평가를 병행하되, 이의제기·보완을 통해 투명성, 객관성 보강



<서면평가 계획>

- (목적) '15년 시행계획의 추진 상황 및 성과를 점검·평가하여 우수·개선필요 사업을 선정
- (평가 대상) 시행계획 점검·평가 대상 61개 과제를 중심으로 과제 단위별 평가
- (평가 방법) 삶의 질 향상정책 추진의 효율성·효과성을 정량·정성 지표를 이용하여 과제 중심으로 평가 실시 및 지역평가 주안점 도출
 - 평가위원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1개의 과제당 3명의 평가위원 배정
 - 평가 그룹 내 점수 편차가 큰 경우 분과장이 평가 결과를 조율
 - * 예) 평가위원간 평가점수 차이가 20점 이상일 경우
- (보완평가) 서면평가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과제에 대한 소명 기회 및 평가자료 미흡 과제의 보완 기회를 제공
 - 해당 과제의 서면평가 평가위원이 보완 자료를 반영하여 재평가

〈평가 지표〉

구분	평가 항목	평가 기준
1. 계획 (35)	1-1 사업목표 및 내용의 적합성(15)	·제3차 기본계획상의 부분별 목표와 비전에 대한 사업목표의 적합성
	1-2 추진방식의 합리성(10)	·세부 추진체계의 현실적합성
	1-3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의 적절성(10)	·성과지표의 적절성 및 목표치의 적절성
2. 집행 (15)	2-1 집행 및 예산 확보 (투융자 10/ 기타 0)	·예산집행 실적 및 내년도 예산확보
	2-2 일정관리 (투융자 5/ 기타 15)	·추진일정 준수
3. 성과 (50)	3-1 성과목표달성도(20)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 정도
	3-3 삶의 질 향상 기여도(20)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정도
	3-4 기타정책효과(10)	·정책 환류 노력도, 언론보도 등

* 투융자사업은 재정사업을 의미하며, 기타는 정책사업 등을 의미함

<지역평가 계획>

- (목적) 현장 중심으로 삶의 질 정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선 방향 도출
- 개별 사업 평가 중심의 서면평가를 보완하기 위해 정책·지역군 단위의 종합적 평가를 수행
 - 삶의 질 정책에 대한 주민 만족·체감에 대한 현장 조사 및 주민 인터뷰를 통해 정책 개선 방향, 신규 과제 등을 도출
- (추진 방식) 7대 부문, 8개 평가 대상 정책군을 기준으로 지역평가 실시, 삶의 질 추진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
 - 부문별 1~2개 대상지를 선정하여 대상지에 대한 현장 조사 수행
 - 지역의 과제에 전문성을 가진 평가위원이 주민 및 서비스 수행자를 대상으로 인터뷰 진행
-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삶의 질 과제 성과가 주민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



- 관련 사업의 현황 및 추진 실적을 파악하고 이를 종합한 평가 대상 정책군의 성과를 제시
- 지역에서 수행한 과제에 대한 주민 체감과 만족을 조사하고 정책 개선 방향, 신규 과제 등 도출

<추진 일정>

구분	세부 내용	일정	비고
평가지침 수립	· '15년도 시행계획 평가지침(안) 마련	'16.1.26	사무국
	· '15년도 시행계획 평가지침 송부	~'16.1월중	사무국→각 부처
추진실적 평가	· 점검·평가단 확정	~'16.3.17	사무국
	· '15년도 시행계획 평가보고서 제출	~'16.3.18	각 부처→사무국
	· 점검평가단 전체회의	3.31	점검·평가단
	· 서면평가(1차 평가)	~'16.4.8	점검·평가단
	· 서면평가 결과 통보	'16.4.8	점검·평가단 사무국→각 부처
	· 이의신청 및 보완자료 제출	4.11~4.15	각 부처→사무국
	· 보완평가	~'16.4.25	점검·평가단
	· 평가결과 통보	'16.4.29	사무국→각 부처
	· 삶의 질 위원회 보고 및 결과 발표	'16.5월 초	삶의질위원회
	· 우수사례집 발간 등		
평가결과 활용	· 평가결과 보완사항을 보완하여 향후 평가 반영	수시	사무국

* 평가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평가 결과 및 환류>

- 주민 체감과 만족을 현장에서 평가하고 이를 근거로 개선 방향 및 신규 과제 도출
- 평가 결과는 관계 기관에 통보하여 정책 수립·집행에 반영
 - 서면평가 및 지역평가를 통해 정책 개선과제 제안
- 개선 필요 과제는 제도 개선 대책을 마련하여 5월 위원회 개최시 보고
 - 그 이행 결과는 차년도 시행계획 평가시 반영하여 재평가 검토

1.2.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

❖ 개요

- 정부는 주민들이 어느 지역에 거주하든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최소한의 삶의 질 수준을 충족하도록 ‘농어촌서비스기준’이라는 국가적 정책 목표를 제시함.
 - 정부는 2010년 7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이하, 「삶의 질 특별법」)을 개정하여 2011년 1월부터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음.
 - 더불어 「삶의 질 향상 특별법 시행령」에 농어촌서비스기준의 항목과 세부 내용 및 항목별 서비스기준 목표치를 설정하여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고시’로 공표하였음.
 -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한 후 실질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운영세칙’에 의거, 2011년부터 범부처 협의체인 ‘농어촌서비스기준 협의회’를 자문기구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음.
- 농어촌서비스기준은 2011년 1월부터 시행해 왔으며, 매년 각 부문별, 항목별 서비스기준의 이행실태를 점검·평가해 오고 있음.
 - 2015년도에 제3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이 새로이 시작됨에 따라, 농어촌서비스기준도 기존에 지적되어왔던 한계점 등을 고려하여 개편함. 개편을 통해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실효성을 높여 제도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제3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맞춰 제시된 농어촌서비스기준 개편의 주요 방향은 다음과 같음.
 - 핵심항목과 선택항목으로 이원화하여 운용함. 핵심항목은 중앙정부가 제시·관리하는 농어촌서비스기준으로서 모든 농어촌 시·군이 적용하는 ‘국가 최소 기준’으로 운용함. 선택 항목은 지자체가 지역의 여건과 발



전전략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제정·운용함.

- 삶의 질 향상 정책과의 연계 강화를 위해 삶의 질 향상 계획과 농어촌서비스기준 간 부문 구성을 매칭하도록 함. 따라서 기존의 9개 부문 32개 항목의 농어촌서비스기준을 7대 부문 17개 핵심항목으로 변경함.

〈2015 농어촌서비스기준 점검·평가 연구 담당기관〉

구분	연구기관	역할
핵심항목 (중앙정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핵심항목 이행실태 점검·평가 ·9개 시도연구원과의 협의체를 구성 ·9개 시도연구원과 선택항목 관련 협동연구 진행
선택항목 (지자체)	경기연구원, 강원발전연구원, 충북발전연구원, 충남연구원, 전북연구원, 광주전남연구원, 대구경북연구원, 경남발전연구원, 제주발전연구원	·선택항목 선정·제정 ·선택항목 이행실태 점검·평가

❖ 주요 추진 내용

□ 농어촌서비스기준 핵심항목 이행실태 점검·평가

- 핵심항목은 도시, 농어촌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삶의 질 서비스임. 따라서 농어촌 내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적용하는 ‘국가 최소 기준’으로서 중앙정부가 제시·관리함.
- 핵심항목은 제3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의 보건·복지, 교육여건, 정주생활기반, 경제활동·일자리, 문화·여가, 환경·경관, 안전 등 7개 부문, 17개 세부 항목으로 구성되며, 연도별로 현재 서비스기준 이행실태가 어떠한지 점검함. 또한 중기 목표치를 현 시점에서 달성하고 있는 시·군에 대한 점검도 함께 실시함.

〈핵심항목 및 목표치〉

부문	핵심항목	국가최소기준	'14년 (%)	'19년 목표(%)
1. 보건·복지	1) 진료서비스	시·군 내에서 내과, 한방과, 정형외과, 산부인과 등 중요 과목 진료가 가능하다.	76.8	80
	2) 응급서비스	응급환자 발생 시 기본적인 응급장비가 마련되고 전문 인력이 동승한 차량이 30분 이내 도착하여 응급처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71.8	97
	3) 노인	도움이 필요한 노인은 주 1회 이상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74.1	80
	4) 영유아	일정한 수요가 있는 지역에서는 읍·면내에서 영유아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71.0	80
2. 교육여건	5) 초·중학교	지역여건에 맞는 농어촌 학교를 육성하고 통학 지원이 필요한 학생에게 적절한 통학수단을 제공한다.	98.1	100
	6) 평생교육	읍·면내에서 평생교육 거점시설에서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다.	21.1	40
3. 정주생활 기반	7) 주택	주민 누구나 최저주거기준 이상의 주택에서 거주한다.	88.3	95
	8) 상수도	주민 누구나 상수도를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마실 수 있다.	62.9	82
	9) 난방	읍지역에서 도시가스를 이용할 수 있다. 도시가스 보급이 어려운 지역에서는 LPG 소형저장탱크 등 난방비 저감정책을 추진한다.	50.8	70
	10) 대중교통	마을 내에서 대중교통을 하루 3회 이상 이용할 수 있다. 대중교통 운행이 어려운 지역은 준 대중교통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도서지역의 경우 모든 본도에 1일 왕복 1회 이상의 여객선이 운항된다.	90.4	100
	11) 광대역 통합망	농어촌 어디에서나 광대역 통합망을 이용할 수 있다.	77.3	90
4. 경제활동·일자리	12) 창업 및 취업 컨설팅·교육	시·군 내에서 사업체 창업 및 취업에 관한 전문적인 컨설팅 또는 교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	100
5. 문화·여가	13)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	시·군 내 문화예술회관 등 문화시설에서 월 1회 이상 문화 프로그램과 분기별 1회 이상 전문 공연 프로그램을 관람할 수 있다.	92.0	100
6. 환경·경관	14) 하수도	농어촌 어디에서나 하수처리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79.4	85
7. 안전 (생활 안전)	15) 방범설비	범죄 예방을 위해 마을 주요지점과 주요 진입로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한다.	32.7	60
	16) 경찰 순찰	범죄취약 지역은 마을별로 1일 1회 이상 순찰을 실시한다.	100.0	100
	17) 소방 출동	화재 발생 신고 접수 후 5분 내에 소방차가 현장에 도착한다.	45.4	55



○ 2015년 핵심항목 이행실태 점검 종합 결과는 다음과 같음.

- 보건·복지 부문의 경우 진료서비스의 항목은 상대적으로 목표치인 80%에 현재 근접해 있음. 보건복지 부문에서 이행실태가 상대적으로 낮은 항목은 영유아 항목임.
- 교육여건 부문은 평생교육 항목이 상대적으로 낮은 이행실태를 보이고 있음. 농어촌 주민들의 평생교육을 위한 시설 및 프로그램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정주생활기반 부문에서는 상대적으로 난방비 저감을 위한 노력이 낮은 이행실태를 보이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광대역 통합망 항목, 주택과 대중교통의 항목에서 높은 이행실태를 나타내고 있음.
- 경제활동·일자리 부문의 창업 및 취업 컨설팅항목은 올해 개편안에 처음으로 포함된 항목임.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전체 농어촌 시·군의 67.3% 지역에서 관련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문화·여가 부문의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 항목의 경우, 90% 이상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남.
- 환경·경관 부문의 하수도 항목은 목표 설정치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근접한 수치를 나타냄.
- 안전 부문의 방법설비 항목은 상대적으로 이행실태가 낮게 나와 농어촌 지역의 안전에 대한 서비스 수준이 만족스럽지 못한 상태임. 경찰순찰 항목의 경우, 이행실태 점검을 위해서는 5대 범죄 발생 행정리 수와 범죄취약 지역에 대한 순찰 실시 횟수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나 관련 자료를 얻지 못해 이행실태 점검에 한계가 있음. 소방출동 항목은 서비스기준 목표인 41.1%로 나타남.

〈2015년 핵심항목 이행실태 점검 종합 결과〉

부문	핵심항목	국가최소기준	2015년 (%)	목표치 (%)
1. 보건·복지	1) 진료서비스	시·군 내에서 내과, 한방과, 정형외과, 산부인과 등 중요 과목 진료가 가능하다.	76.8	80
	2) 응급서비스	응급환자 발생 시 기본적인 응급장비가 마련되고 전문 인력이 동승한 차량이 30분 이내 도착하여 응급처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98.4	97
	3) 노인	도움이 필요한 노인은 주 1회 이상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71.8	80
	4) 영유아	일정한 수요가 있는 지역에서는 읍·면내에서 영유아 보육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69.7	80
2. 교육여건	5) 초·중학교	지역여건에 맞는 농어촌 학교를 육성하고 통학 지원이 필요한 학생에게 적절한 통학수단을 제공한다.	97.5	100
	6) 평생교육	읍·면내에서 평생교육 거점시설에서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다.	21.8	40
3. 정주생활 기반	7) 주택	주민 누구나 최저주거기준 이상의 주택에서 거주한다.	88.3	95
	8) 상수도	주민 누구나 상수도를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마실 수 있다.	67.8	82
	9) 난방	읍지역에서 도시가스를 이용할 수 있다. 도시가스 보급이 어려운 지역에서는 LPG 소형저장탱크 등 난방비 저감정책을 추진한다.	53.1	70
	10) 대중교통	마을 내에서 대중교통을 하루 3회 이상 이용할 수 있다. 대중교통 운행이 어려운 지역은 준 대중교통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도서지역의 경우 모든 본도에 1일 왕복 1회 이상의 여객선이 운항된다.	90.4	100
	11) 광대역 통합망	농어촌 어디에서나 광대역 통합망을 이용할 수 있다.	85.8	90
4. 경제활동·일자리	12) 창업 및 취업 컨설팅·교육	시·군내에서 사업체 창업 및 취업에 관한 전문적인 컨설팅 또는 교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67.3	100
5. 문화·여가	13)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	시·군내 문화예술회관 등 문화시설에서 월 1회 이상 문화 프로그램과 분기별 1회 이상 전문 공연 프로그램을 관람할 수 있다.	91.3	100
6. 환경·경관	14) 하수도	농어촌 어디에서나 하수처리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80.8	85
7. 안전 (생활 안전)	15) 방범설비	범죄 예방을 위해 마을 주요지점과 주요 진입로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한다.	35.8	60
	16) 경찰 순찰	범죄취약 지역은 마을별로 1일 1회 이상 순찰을 실시한다.	-	100
	17) 소방 출동	화재 발생 신고 접수 후 5분 내에 소방차가 현장에 도착한다.	41.1	55



□ 농어촌서비스기준 선택항목 이행실태 점검·평가

- 시·도별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 결과는 다음과 같음.
 - 부산광역시의 경우, 초·중학교 중 통학 수단을 제공하는 학교 비율 항목과 행정리 CCTV 설치 비율 항목에 대한 서비스기준 이행실태가 낮게 나타남. 통학 수단 제공 학교 비율 항목이 낮은 이유는 광역시의 경우 초·중학교의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통학 수단을 따로 제공할 필요성이 낮기 때문임.
 - 대구광역시는 주택, 대중교통, 하수도, 방법설비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서 서비스기준의 중기 목표치를 이미 달성하고 있음. 그리고 제외된 항목에서도 서비스기준의 이행실태 수치가 낮지 않아,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결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인천광역시의 경우 상대적으로 다른 광역시에 비해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특히 평생교육 항목과 상수도, 난방, 방법설비 등의 항목에서 낮은 이행실태를 보임.
 - 울산광역시는 방법설비 항목에서 다소 상대적으로 낮은 서비스기준 이행실태를 보이고 있으나, 다른 항목에서는 상대적으로 중기 목표치에 근접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경기도는 수도권에 근접한 경우로 다른 도에 비해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이행실태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상대적으로 소방출동 항목의 이행실태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 강원도의 경우, 평생교육 항목과 난방 항목에서 서비스기준 이행실태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옴. 특히 난방 항목의 경우 보완항목인 도시가스 미보급 세대 수 중, 소형 LPG저장 탱크 공급 가구 비율도 매우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정책 필요성이 나타남.
 - 충청북도는 평생교육 항목에서 낮은 서비스기준 이행실태를 나타내고 있으며 상수도 및 난방을 제외한 다른 항목에서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음.

- 충청남도도 충청북도와 마찬가지로 평생교육 관련 서비스 확충이 가장 필요함을 보이고 있음. 그리고 상수도와 난방 부문의 서비스기준 이행 실태가 다른 항목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여,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전라북도는 평생교육 항목에서 모든 시·도 중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음. 또한 난방 항목에 있어서도 다른 시·도에 비해 가장 낮은 서비스기준 이행실태를 보이고 있음. 특히 도시가스 미보급 세대 중, 소형 LPG저장 탱크 공급 가구 비율도 매우 미미하여 난방에 대한 관련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전라남도도 마찬가지로 평생교육 항목에서 낮은 서비스기준 이행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상수도 및 난방에서도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음. 또한 방법설비에서도 서비스기준 이행실태가 낮게 나와 관련 서비스 확충이 필요함.
- 경상북도는 다른 시·도에 비해 진료서비스 항목에서 낮은 서비스기준 이행도를 보이고 있으며, 다른 시·도와 마찬가지로 평생교육 항목에 대한 서비스 확충이 필요함. 또한 소방출동 항목에서 시·도 중 가장 낮은 이행실태를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경상남도는 영유아 항목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서비스기준 이행실태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그리고 평생교육 항목, 방법설비 항목에서 서비스기준 이행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 관련 서비스를 확충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제주도는 전체 초·중학교 중 통학수단을 제공하는 학교 비율을 제외하고, 상대적으로 대부분의 항목에서 서비스기준 이행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통학수단 제공 초·중학교 비율의 경우, 매우 낮은 비율로 나온 이유는 초·중학교의 지리적 접근성이 높아 통학수단을 따로 제공할 필요가 없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경기도 농어촌서비스기준 선택항목〉

부문	선택항목	선택항목 서비스 기준	점검방법
보건 · 복지	위기가정 지원	읍·면지역의 위기에 처한 가구는 생계비 등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현금 급여 및 사례관리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기가정지원 서비스 신청 수(가구) 대비 지원 수 - (긴급 복지지원 사업 지원 수 + 무한돌봄 사업지원 수) / (긴급 복지지원 사업 신청 수 + 무한돌봄사업 신청 수) × 100
	방문간호 서비스	읍·면지역에 방문간호사를 배치하여 독거노인을 정기적으로 방문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읍·면지역 방문간호사수와 독거노인 연간 방문간호서비스 횟수 - 읍·면지역 독거노인 방문간호서비스 횟수 / 읍·면지역 독거노인 대상자 수
정주생활 기반	중간지원 조직 운영	시·군단위에서 마을만들기 중간지원 조직(마을지원센터 또는 마을만들기 협력센터, 귀농귀촌지원센터 등)을 설치하거나, 마을지원 프로그램의 운영 및 인력을 지원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군단위의 중간지원조직 또는 마을관리 지원 프로그램 유무 - 중간지원조직 유무, 지원프로그램 유무
	노인주거 복지 확대	읍·면지역의 저소득 노인을 위한 적절한 노인주거복지시설을 확보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읍·면지역 거주 노인(65세 이상)수 대비 노인주거복지시설 정원 수 - 노인주거복지시설 정원 / 읍·면지역 노인인구수 × 100
경제활동 일자리	6차 산업화 활성화	6차산업화 사업을 위한 컨설팅 또는 교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차산업화 사업체 대상 컨설팅 지원 유무 - 6차산업화 인증 및 예비인증 사업체 유무, 컨설팅 및 교육서비스 유무
	지역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직판장 등을 통해 지역농산물 직거래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가수 대비 직거래 매장수 - 직판장(새벽시장, 주말시장, 로컬푸드 직매장, 지자체 온라인 등) 설치 개수 / 농가수(천명) × 100
문화 · 여가	문화 향유 기회 확대	읍·면내에서 문화 향유를 위한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읍·면별 공공/작은 도서관 설치 유무 - 도서관 설치 읍·면수 / 시·군 전체 읍·면수 × 100
	생활체육 프로그램	읍·면 내에서 체력증진과 여가선용 유도를 위한 생활체육프로그램을 활성화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읍·면(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생활체육프로그램 개수 - 적정 생활체육프로그램 확보 읍·면 수 / 시·군 전체 읍·면 수 × 100 ※ 적정 생활체육프로그램 확보 수는 별도의 각 읍·면 인구대비 기준 적용

〈강원도 농어촌서비스기준 선택항목〉

부문	선택항목	선택항목 서비스 기준	점검방법
교육여건	소규모 농어촌 학교 활성화	작은 학교 희망만들기 소규모 학교 학생들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한다.	(희망만들기 학교/대상학교) ×100
		강원에듀버스 운영 시·군에 통학버스를 지원한다.	(강원에듀버스 운영 시·군 수/총 시·군 수)×100
	평생교육 여건 기반조성	시·군별로 평생교육도시 지정, 평생교육사 배치, 행복학습센터설치 지원을 통해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시·군별로 평생교육도시(지정=1, 미지정 0), 평생교육사(배치=1, 미배치=0), 행복학습센터(설치지원=1, 미지원=0)
정주생활 기반	주거환경 개선	농어촌주택의 석면슬레이트 소재 지붕을 개량한다. * '13.12월 기준(환경부 전국 실태 조사 결과) 대비	(석면슬레이트 소재 지붕 교체 주택 수/석면슬레이트 소재 지붕 주택 수)×100
경제활동 일자리	6차산업화	6차산업화 인증사업자 확대를 통해 농어촌 일자리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6차산업화 인증사업자/새농어촌 우수마을 + 농촌체험휴양마을)×100
문화여가	문화격차 해소	모든 시·군에 영화관을 설치·운영하여 주문 문화격차를 해소한다.	(영화관 설립된 시·군 수/총 시·군 수)×100

<충청북도 농어촌서비스기준 선택항목>

부문	선택항목	선택항목 서비스 기준	점검방법
보건·복지	자살률	노인 자살비율을 감소시킨다.	충청북도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의 내부자료
정주생활 기반	석면 슬레이트	농·산·어촌 주택의 석면 슬레이트 소재 지붕을 개량한다.	'13년 환경부 전수조사 자료 및 각 지자체 협조 자료
	대중교통 취약 지역 지원 사업	농촌형 교통복지모델을 발굴 및 운영한다.	충청북도 내부 자료
경제활동 일자리	마을기업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을 활성화 시켜 농어촌 이익활동에 도움을 준다.	충청북도 내부 자료
안전	방법설비	CCTV 설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설치된 방법용 CCTV를 HD급 이상으로 개선한다.	행정리 집계 자료

<충청남도 농어촌서비스기준 선택항목>

부문	선택항목	선택항목 서비스 기준	점검방법
보건·복지	진료서비스 접근성	면지역 의료시설 접근성이 40% 이상으로 하고, 어려운 지역은 순회방문 서비스를 실시한다.	(1차 이상 의료시설이 있는 면지역 법정리 수/전체 면지역 법정리 수)×100
	노인복지	읍·면·동별로 노인복지프로그램 제공을 받을 수 있다.	(구조구급센터로부터 10분 이내 도착가능한 행정리 수/총 행정리 수)×100
정주생활 기반	주거환경	건강 및 환경피해저감을 위한 주택환경개선을 90% 이상으로 한다.	(사업추진 수/전체 주택슬레이트 정비 사업대상)×100
안전	구조구급 출동	구조구급신고 발생시 10분 이내 도착할 수 있도록 한다.	(우리 마을 주치의제 시행되는 면지역 법정리 수/1차 이상 의료시설 생활권에 속하지 않은 면지역 법정리 수)×100

〈전라북도 농어촌서비스기준 선택항목〉

구분	선택항목	선택항목 서비스 기준	점검방법
보건·복지	독거노인 돌봄	독거노인은 독거노인 돌봄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독거노인 돌봄 서비스 혜택자/독거 노인 수)×100
	노인 치매 돌봄	시·군 내에서 치매극복 종합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치매 돌봄 서비스 혜택자/중증 치매환자 노인 수)×100
교육·여건	기초학력	읍·면지역 중학교에서 기초학력 미달학생 수 감소를 위해 노력한다.	자료미비로 제외
	어울림학교	읍·면지역 초중학교는 어울림학교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어울림학교지정 초·중학교/읍·면 초·중 학교수)×100
정주생활 기반	그룹홈	주거 및 식생활 지원이 필요한 노인에게 그룹홈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그룹홈 혜택자 수/그룹 홈 수요자)×100
	석면슬레이트	농어촌지역의 석면슬레이트 지붕철거 계획을 수립·실행한다.	자료미비로 제외
경제활동 일자리	노인일자리	일자리가 필요한 노인에게 대해 일자리를 제공한다.	(노인일자리 수/일자리 필요 노인수)×100
문화·여가	통합문화이용권	소외계층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한다.	(통합문화이용권 이용금액/통합문화이용권 발급금액)×100
	문화동호인	문화동호인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농어촌지역 문화동호인 수/농어촌인구수)×100
안전	어업인 안전	어업인의 안전공제 가입률 제고로 안정적 조업활동을 보장한다.	(안전공제 가입 어업인 수/어업인 수)×100

<전라남도 농어촌서비스기준 선택항목>

부문	선택항목	선택항목 서비스 기준	점검방법
정주생활 기반	공중목욕탕	읍·면별로 최소 1개소 이상의 공중목욕탕을 설치·운영한다.	(공중목욕탕 설치 읍·면 수/전체 읍·면 수)×100
	석면 슬레이트	석면 슬레이트 지붕 주택 정비 사업을 매년 전남 총량대비 10% 이상을 추진한다.	(매년 정비(철거포함)하는 슬레이트 지붕 주택 수(동)/전남 슬레이트 지붕 주택 총수(동))×100
	교통 오지마을 100원 택시 운행	전남도내 모든 버스노선이 없는 교통오지마을의 교통편익을 증진한다.	(큰 섬과 모도의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헬기 이·착륙장 설치 현황 및 설치 계획 수/큰 섬·모도의 수)×100
안전	도서벽지 응급서비스	전남도내 모든 큰 섬 및 모도에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구축한다.	(시·군별 100원 택시 운행 수혜 마을 수/시·군별 교통오지 마을 수)×100

〈경상북도 농어촌서비스기준 선택항목〉

부문	선택항목	선택항목 서비스 기준	점검방법
보건·복지	복지 통합 시스템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복지를 통합적,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복지기반 통합사례 관리 실적 총족기준: 시·군별 지역복지기반 통합사례 관리 실적 지표 50 이상
교육여건	교육 다양성	시·군 내에서 정규교과 이외의 체험, 진로교육, 적성 교육 등 다양한 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서비스 제공 기준 총족 시·군 수/총 시·군 수)×100 시·군별 교육서비스 제공 총족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시설 및 조직 수 3개 이상 - 교육시설 및 조직 수 3개 미만일 경우 교육 프로그램 5개 이상
정주생활 기반	교통 정보	이동을 위해 필요한 대중교통정보를 적절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통정보 제공 기준 총족 시·군 수/총 시·군 수)×100 시·군별 교통정보 제공 총족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중교통정보 제공 수단 2개 이상
경제활동 일자리	귀농·귀촌	시·군 내에 귀농·귀촌하는 사람들에게 농산어촌에서 경제적 자립을 위한 창업 지원 서비스가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귀농·귀촌 관련 서비스 가능 시·군 수/총 시·군 수)×100 총족기준: 귀농·귀촌 관련 서비스 1개 이상
	농업 일자리 정보	일 자리를 원하는 구직자와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농업인을 연결시켜주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자리 공급 가능 시·군 수/총 시·군 수)×100 총족기준: 일자리 공급 서비스 1개 이상
문화여가	생활체육	농어촌 주민 누구나 30분 이내에 있는 체육시설에서 규칙적인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체육시설 및 체육교실 운영 읍·면 수/총 읍·면 수)×100 체육시설, 체육교실 중 한 항목이 100%일 경우 기준 총족으로 간주



〈경상남도 농어촌서비스기준 선택항목〉

부문	선택항목	선택항목 서비스 기준	점검방법
보건·복지	진료서비스 (찾아가는 산부인과)	시·군(읍·면·동) 내에서 내과, 한방과, 정형외과, 산부인과 등 중요과목 진료가 가능하여 병의원이 없거나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의 임산부에게 맞춤형 서비스와 출산을 돕는다.	(찾아가는 산부인과 이용 출산 건수/그 지역의 출산 건수)×100
교육여건	평생교육 (기초수급자 자녀 멘토링)	읍·면 내에서 평생교육 거점시설에서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어 대학생 멘토링 대상 기초수급자 자녀에게 주 1회 학생 개별 방문 지도를 제공한다.	(멘토링 지원학생 수/멘토링 지원 대상 학생 수)×100
정주생활 기반	주택 (독거노인 공동생활)	주민 누구나 최저주거기준 이상의 주택에서 거주하여 홀로 사는 어르신 가운데 공동생활을 원하는 분들에게 공동생활가정을 제공한다.	(공동생활 독거노인 수/공동생활을 원하는 독거노인 수)×100
경제활동·일자리	창업 및 취업 컨설팅 · 교육(농가도우미)	시·군 내에서 사업체 창업 및 취업에 관한 전문적인 컨설팅 또는 교육서비스와 출산 등 곤란에 처한 농가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위해 도우미를 지원 받을 수 있다.	(농가도우미 지원 가구 수/출산 여성농업인 수)×100

〈제주도 농어촌서비스기준 선택항목〉

부문	선택항목	선택항목 서비스 기준	점검방법
보건·복지	의료시설 접근성	30분 이내에 읍·면지역에 위치한 의료 시설을 방문할 수 있다.	(일반 병원, 한방병원, 산부인과, 치과, 물리치료 등 1차 진료 가능한 의료시설이 있는 읍·면 수/총 읍·면 수)×100
	노인 방문 의료서비스	노인 가정방문 의료서비스를 월1회 실시한다.	행정시별 노인 가정방문 의료 서비스 프로그램 운영여부
교육여건	원어민교사 배치	읍·면지역 소규모 학교에 원어민교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원어민교사 프로그램 운영 여부
	농어촌 학생의 교육복지 프로그램	농어촌 고교학생에게 통학버스를 지원하거나 교통비를 지급한다.	통학버스 내지 교통비 지원
경제활동 · 일자리	귀농·귀촌 창업 지원 및 구인구직 서비스	읍·면지역에 귀농·귀촌인이 농산어촌에서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창업 및 구인구직 지원 서비스가 있다.	행정시별 서비스 운영 여부
	사회적 경제조직 운영 지원 프로그램	지역의 사회적 경제 관련 조직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을 매년 5가지 이상 운영한다.	행정시별 사회적 경제조직 수 증가율/지원프로그램 실시여부
문화여가	문화체육 시설 여부	농어촌 주민 누구나 도보로 30분 이내에 체육시설을 방문하여 체육활동을 할 수 있다. 읍·면지역에 위치한 문화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읍·면별 문화예술회관 또는 지방문화원, 체육시설 운영 여부 점검
	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	전문 문화시설(예: 문예회관, 미술관, 소극장)에서 개최되는 문화 프로그램에 월 1회 이상 참여할 수 있고, 분기별 1회 이상 전문공연 및 기획전시 프로그램을 관람할 수 있다.	(공연프로그램 공연 횟수 + 전시프로그램 전시 일수)/12 * 1 이상일 경우 해당 기준 달성한 것으로 간주



2. 조사·연구 입무

- 2.1. 농어촌 영향평가제도 지원
- 2.2. 농어촌 주민 정주만족도 조사
- 2.3. 삶의 질 및 지역발전지수 구축
- 2.4. 삶의 질 향상계획 심층연구

2.1. 농어촌 영향평가제도 지원

❖ 개요

- 삶의 질 향상 특별법 제45조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차원의 중장기 계획 및 소관 중요 정책이 농어촌지역의 경제·사회·문화·환경 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농어촌에 대한 영향평가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 정책의 차별적 영향을 보다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체계적으로 수렴하여 삶의 질 정책 개선 및 발굴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 전문지원기관(KRED)에서는 제2기 삶의 질 계획 기간 동안 연구 차원에서 2011년부터 영향평가 전문평가를 수행함.
 - 정책 수립과 실행에 있어 농어촌 인지적 관점의 중요성을 미흡하나마 부각시키는 효과가 있었으나 정책 입안 단계에서 사전적인 점검 기능은 미비했다고 평가됨.
 - * 영향평가 전문평가 대상 과제
 - ’11년: 방과후학교, 여성경제활동
 - ’12년: 평생학습, 응급의료
 - ’13년: 에너지복지, 정신보건센터, 이주여성 긴급지원, 주택바우처
 - ’14년: 장애인복지정책, 폐기물관리정책
- 이에 제3기 삶의 질 계획에서는 농어촌 영향평가의 기능을 강화하고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사전영향평가 도입 가능성을 검토한 후 농어촌 영향평가제도의 개선 방향을 설정함.
 - 첫째, 기존에 운영된 영향평가에 대한 진단을 통해 문제점을 발굴
 - 둘째, 사전영향평가 제도의 도입을 위하여 유사 관련 제도를 검토하여 농어촌 사전영향평가제도의 도입 방안 및 가능성을 타진



- 셋째, 농어촌 영향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기본 방향과 세부 운영 방안을 제시하여 향후 제3차 삶의 질 계획 기간 동안 추진할 예정

❖ 주요 추진 내용

□ 기존 영향평가 운영 진단의 주요 내용

- 정책 수립과 실행에 있어 농어촌 인지도적 관점의 중요성을 미흡하나마 부각시키는 효과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계획에 미처 담지 못하거나 새롭게 현안이 되는 정책 분야에 대해서도 농어촌 영향평가를 통해 도·농간 차이를 부각시키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등의 성과
- 기존 정책의 도·농 간 형평성 확보의 필요성을 부각시키기는 했으나, 정책 입안 단계에서 사전적인 점검 기능은 미비
 - 연구과제 형태로 수행되어 영향평가 대상 과제 선정 등의 절차가 명확히 정립되지 못함.
 - 전문영향평가 결과가 실제 정책으로 피드백 되지 못한 점도 한계

□ 사전영향평가제도 도입을 위한 관련 제도 검토 내용

- 농어촌 사전영향평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 확보를 통해 명확한 평가 절차 명시가 필요함.
 - 유사 제도인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는 2차에 걸쳐 법적 근거를 확보하여 제도화 함.
 - * 「여성발전기본법」(2002), 「성별영향분석평가법」(2011년)
- 자체평가 및 심층평가(또는 전문평가) 과정을 지원하는 관련 전문가 그룹이 풍부하게 존재해야 사전영향평가를 수행할 수 있음.
 - 또한 이러한 전문가 그룹의 평가 활동을 지원기구를 통해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음.

- *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중앙(1개소) + 도(16개소) / 200~300명 규모 컨설팅 집단 존재
- 풍부한 이론적 자료 축적, 통계기반 구축이 선행되어야 사전영향평가가 가능
 - 도·농 간 격차를 보여주는 다양한 분야의 실증 자료 확보가 바탕이 되어야 함.
- 제도 운영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 형성이 선행될 필요
 - 특히 정책 환류 실적이 만들어져야 제도 수용성 확보 가능
 -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자체 연구 차원에서 운영하던 건강영향평가를 실효성 부족 등의 이유로 최근에 폐지
- 결론적으로 제도 도입 방안을 검토한 바에 따르면 제3기 삶의 질 계획에서는 사전영향평가 도입을 즉각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임.
- 그러나 농어촌에 차별적인 영향을 주는 정책이나 사업에 대한 방향을 수정해 줄 수 있는 기능은 여전히 요구되고 있음.

▣ 농어촌 영향평가제도 개선 기본 방향

- 사전영향평가가 원활하게 도입되기 위해서는 위에서 제기한 바와 같이 법적 근거의 확보, 농어촌 인지적 관점에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풀 확보, 풍부한 이론 연구와 자료 수집, 전문가 및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이루어져야 함.
 - 도입 과정에 요구되는 사항들을 충족하기 위해서 농어촌 영향평가제도를 다음과 같이 개선하고자 함.
- **(단계적 접근)** 사전영향평가 도입을 최종 목표로 하되, 단기적으로는 영향평가 저변 확대에 주력하여 시범사업 중심으로 추진함. 중기적으로는 합리적이고 타당성 높은 영향평가의 틀을 구축하고 장기적으로는 관련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법적 근거를 확보
 - 사전영향평가 틀, 방식, 관련 전문가, 제도적 근거가 부족한 초기에는



- 전문가들을 활용하여 해당 사안에 대하여 정성적 사전영향평가 방식을 도입
- 차후 농어촌 사전영향평가의 전문가 저변이 확대되고 자료 축적과 기술적 합리성이 확보되면 제도적 기반을 확충하여 사전영향평가를 도입
- **(체계적 영향평가 틀 구축)** 영향평가의 시의성과 적절성을 높이고, 객관적이고 타당한 영향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체계적인 영향평가 절차를 마련
- 체계적인 영향평가 절차를 수행하기 위해 전문지원기관이 중심이 되어 업무를 수행하고, 정책지원 네트워크와 ‘농어촌 영향평가 자문단’을 활용하여 영향평가 결과가 해당 정책에 환류 될 수 있는 완결적인 시스템을 구축
- **(전문가 풀 확대)** 제3차 삶의 질 계획 기간 초기에는 전문가 중심 평가 방식을 유지하되, 제도 운영 경험을 축적함으로써 이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유도
- 이를 통해 농어촌 인지적 관점을 가진 다양한 전문가 풀을 확보하고 전문가 집단의 농어촌 영향평가의 공감대를 형성
 - * 성별영향평가의 경우에도 자체평가에 대해서는 실효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며, 실질적인 내용은 전문가 중심의 심층평가(특정영향평가)를 통해 수행
- **(참여 기관 확대)** 전문지원기관 중심으로 운영되던 평가 방식을 개선하여 영향평가 참여 기관을 확대하여 전문성을 확보
- 삶의 질 정책 네트워크에 참여한 국책연구원 및 도 연구원을 우선 활용하며, 차후 중요 사안에 대하여서는 해당 부문의 전문성을 지닌 연구기관에게 영향평가를 위탁하여 삶의 질 정책 네트워크로 유인
 - * 성별영향평가: 지자체별 평가센터 운영
 - * 문화영향평가 역시 공모 절차를 거쳐 기관 선정 후 수행

□ 농어촌 영향평가제도 체계 구축 내용

○ 전문지원기관은 주요 사안에 대하여 시기적으로 농어촌 영향평가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조치 내용이 정책에 환류되도록 다음과 같은 방식의 영향평가 절차를 구축

1) (영향평가 대상 후보 과제 발굴) 전문지원기관에서는 농어촌에 차별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이나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수행하여 이슈 발굴 및 선정

- 이슈 탐색 범위는 중앙행정기관이 추진하는 정책으로서 도시와 농어촌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조사

- 구체적으로 ① 학계 및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당해 연도 농어촌에 차별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슈 수집(설문조사 등), ② 전문가에게 원고 의뢰(정부 부처의 당해 연도 업무보고의 정책 추진 방향을 검토 등)하여 핵심 정책 키워드를 수집

- 전문지원기관에서는 ‘농어촌 영향평가 자문단’을 구성하고, 중요도 및 시의성을 평가하여 이슈를 선정

* 농어촌 영향평가 자문단은 사무국, 민간 전문위원 등 10여명으로 구성

- 전문지원기관에서는 해당 이슈에 대한 전문가를 섭외하여 농어촌 인 지적 관점에서 해당 정책에 대하여 분석 자료 생성을 위탁하고, 농어촌 영향평가 자문단에 평가 근거 자료를 제시

- 이때 농어촌 영향평가 자문단은 해당 자료를 근거로 선정된 이슈가 농어촌에 차별적인 영향을 주는지를 평가하는 ‘영향평가 검토서’를 작성(사전 영향평가 개념을 도입)

- 생성된 분석 자료와 영향평가서를 바탕으로 정책 제안, 이슈리포트 발간 등 후속조치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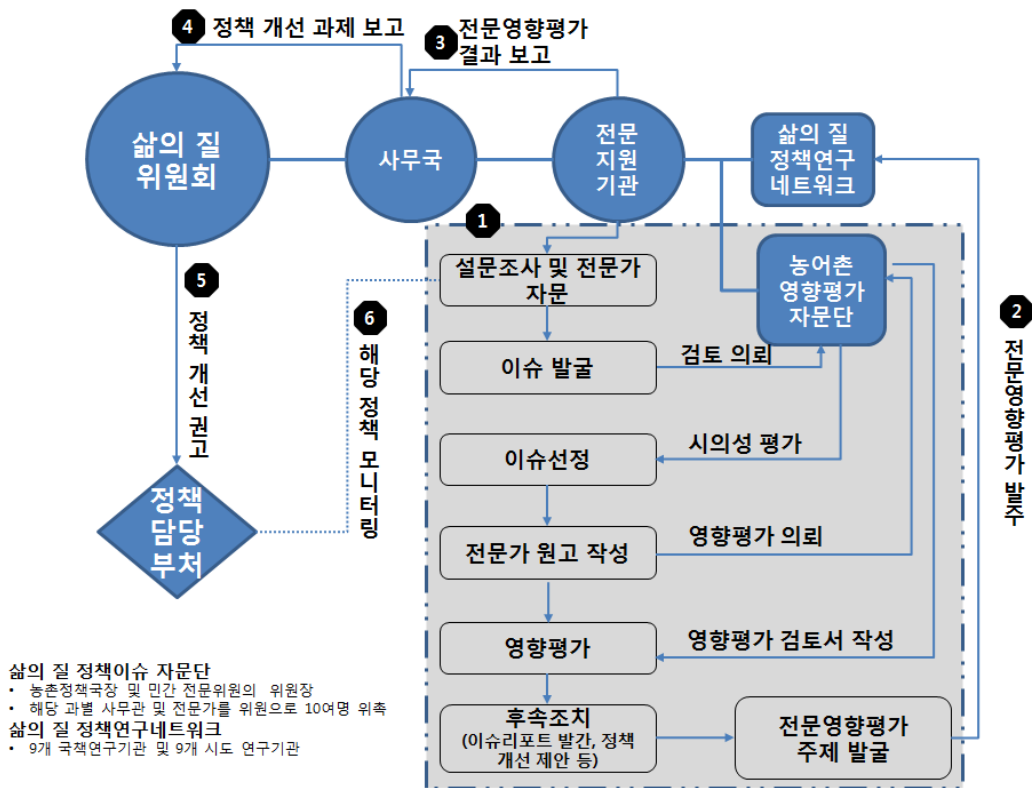
2) (전문영향평가 수행) 해당 이슈의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한 경우는 삶의 질 정책 네트워크 참여 연구기관 등을 통해 전문영향평가 수행

* 삶의 질 정책 네트워크는 9개 국책연구기관 및 9개 시도 연구기관이 참여

3) 전문지원기관은 해당 사안에 대한 정책 개선을 취합 정리하여 사무국에 보고

- 4) 사무국은 해당 정책이나 사업에 대한 개선점을 삶의 질 위원회에 보고
- 5) 삶의 질 위원회는 정책 개선 사항을 해당 부처에 권고하여 농어촌에 차별적인 사항을 개선토록 함.
- 6) 최종적으로 전문지원기관에서는 해당 정책이 개선되었는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농어촌 영향평가 운용 프로세스〉



2.2. 농어촌 주민 정주만족도 조사

❖ 개요

- 농어촌지역의 정주환경을 구성하는 다양한 삶의 질 여건에 대한 주민 인식을 파악하고, 농어촌 주민들이 실제 체감하는 삶의 질 만족도를 조사
 - 농어촌 주민 대상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전반적인 삶의 질 만족도 및 삶의 질 정책 영역별 만족도와 현황 인식에 대한 조사를 실시
- 도시와 농어촌지역의 삶의 질 여건 및 주민 만족도 비교·분석을 통해 농어촌 주민 삶의 질 현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삶의 질 정책 추진에 따른 성과 점검 및 향후 정책 과제, 지원 사업 발굴에 활용
 - 「농어촌 정비법」에 근거하여, 전 지역의 ‘동’을 도시로, 전 지역의 ‘읍·면’을 농촌으로 구분하여 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표본 추출을 통해 조사 대상자 선정

❖ 주요 추진 내용

□ 조사 개요

- 조사 대상 및 방법
 - 도시 주민 1,269명, 농어촌지역 주민 1,775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수행
 - 2015년 10월 15일부터 11월 15일에 걸쳐 조사 전문 업체를 통해 전화 인터뷰 조사에 해당하는 CATI(Computer Assisted Telephone Interview)를 활용하여 조사 수행



<조사 개요>

조사 대상	→	▪ 전국 17개 광역시도 거주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표본 수	→	▪ 총 3,044명
표본 오차	→	▪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본오차 ±2.32% Point ▪ 무한 모집단 기준
조사 방법	→	▪ CATI (Computer Assisted Telephone Interview)
표본 추출	→	▪ 지역별 인구 비례 할당 표본 추출(Quota Sampling)
조사 기간	→	▪ 2015년 10월 15일 ~ 11월 15일

○ 조사 항목

- 농어촌과 도시 주민 간 삶의 질 만족도, 삶의 질 향상 정책 8대 부문별 중요도와 8대 부문 세부항목별 만족도, 농촌으로의 이주 의향과 이주 이유 등에 대해 10점 척도를 사용하여 조사 실시

〈농촌도시 주민의 정주만족도 조사 항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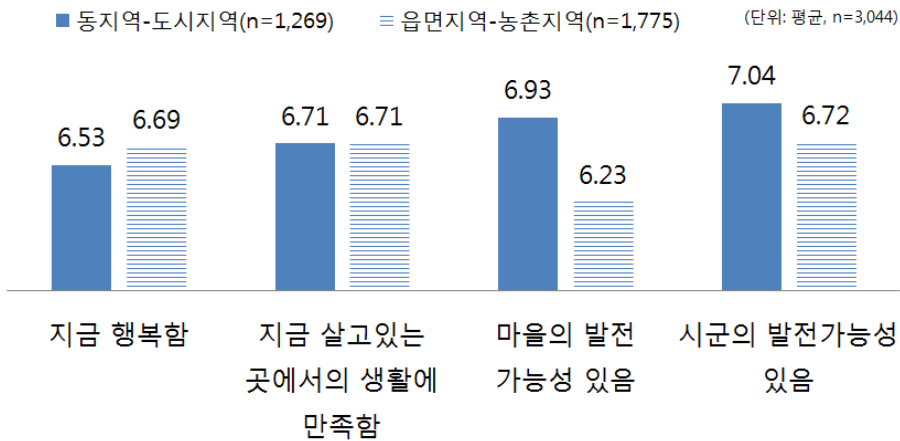
구분	세부 항목
삶의 질 만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괄적 의미의 삶의 질 만족도 (행복감) - 정주 여건을 고려한 삶의 질 만족도 - 전반적인 정주만족도(전반적인 생활여건에 대한 만족도, 거주하는 시·군 및 마을의 발전 가능성 인식)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정책 8대 부문별 중요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요도에 따른 1~3순위 ※ 8대 부문: 3기 정책의 7대 부문(보건·복지, 교육, 정주 생활기반, 경제활동·일자리, 문화·여가, 환경·경관, 안전), 지역사회
8대 부문별, 마을에서의 삶의 질 여건에 대한 만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대 부문별로 2~4개 세부 여건에 대한 만족도 ※ 8대 부문: 3기 정책의 7대 부문(보건·복지, 교육, 정주 생활기반, 경제활동·일자리, 문화·여가, 환경·경관, 안전), 지역사회
이주 의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주 의향 - 이사하고자 하는 지역 및 그 이유
응답자 개인 및 가구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주 지역, 기간 - 성별, 연령, 학력, 직업, 건강상태 - 자가용 차량 소유 유무 - 가족 구성 및 가구 소득 - 주택형태, 주택점유형태 - 가정생활에 대한 만족도 - 귀농·귀촌 여부

□ 전체 삶의 질 만족도 조사 결과

- 전반적 삶의 질 만족도에 대한 조사 결과 농어촌지역 주민이 도시지역 주민에 비해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자신이 지금 느끼는 행복감에 대한 조사 결과, 10점 만점 평가에서 도시지역이 6.53점, 농촌지역이 6.69점으로 농어촌지역이 소폭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의 생활 만족도에서는 도시지역과 농어촌지역 모두 6.71점으로 동일한 것으로 나타남.

<삶의 질 만족도 및 지역발전가능성 조사 결과 - 동/읍면 구분>



- 이전 연구 결과를 통해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만족도 변화 추이를 살펴본 결과, 긍정적으로 응답한 주민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남.
 - ‘나는 지금 행복하다’라는 질문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한 비율이 2014년 조사 결과 40.9%인 것에 비해, 2015년 조사 결과는 42.4%인 것으로 나타나 1.5%p 증가함. 또한 만족도 평균 점수에서도 2014년 조사 결과 6.08점에서 2015년 조사 결과에서는 6.69점으로 상승
 - ‘마을의 발전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한 응답자의 비율이 2014년도 조사 결과 27.7%에서 2015년도 조사 결과 33.9%로 상승함. 만족도 평균 점수 역시 2014년도 조사 결과 5.06점에서 2015년도 조사 결과 6.23점으로 상승

〈삶의 질 만족도 평균 점수〉

구 분	나는 지금 행복하다	나는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의 생활에 만족한다	우리 마을은 앞으로 더욱 발전할 것이다	우리 시·군은 앞으로 더욱 발전할 것이다	비 고
2012년	3.25	-	3.23	3.71	5점 척도
	(65.0)	-	(64.6)	(74.2)	
2013년	3.38	3.36	3.11	3.53	5점 척도
	(67.6)	(67.2)	(62.2)	(70.6)	
2014년	6.08	6.34	5.06	6.26	11점 척도
	(55.3)	(57.6)	(46.0)	(56.9)	
2015년	6.69	6.71	6.23	6.72	10점 척도
	(66.9)	(67.1)	(62.3)	(67.2)	

주1: 95% 신뢰수준에서 조사의 표본오차는 2012년 ±5.2%p, 2013년 ±3.8%p, 2014년 ±3.59%p.

주2: 2012년, 2013년 조사는 질문 시 5점 척도(1~5점 부여), 2014년 조사는 11점 척도(0~10점 부여) 사용하였음에 유의.

주3: 괄호 안은 100점 만점 환산 점수(2014년의 경우 (평균점수×100)÷11로 계산).

□ 삶의 질 정책 8대 부문별 만족도 조사 결과

- 8대 부문별로 삶의 질 여건에 대한 만족도(평균 점수)를 조사한 결과 지역 사회 부문을 제외하고 모든 영역에서 과거에 비해 만족도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부문 평균 점수는 5.84점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2014년도 평균 점수 5.26점에 비해 소폭 상승한 수치임.
 - 2012년부터 진행된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정책 부문별 만족도 조사 결과의 추이를 확인해보면, 지역사회 부문을 제외한 보건·복지, 교육, 주거생활환경, 지역경제, 문화·여가, 환경·경관, 안전 부문은 지속적으로 만족도 점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만족도 점수가 가장 높은 부문은 안전(6.61)과 주거 및 생활환경(6.01) 부문으로 조사되었고, 보건·복지(5.91), 환경·경관(5.90), 지역사회(5.77) 부문이 평균 보다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교육(5.48), 지역사회(5.77), 지역경제(4.77), 문화·여가(4.69) 부문은 평균 보다 낮은 점수를 받았고, 특히 문화·여가 부문이 가장 낮은 만족도 점수를 받은 것으로 조사됨.

<부문별 삶의 질 여건에 대한 만족도 평균 점수의 변화>

부문	평균 점수				세부 항목		
	2012	2013	2014	2015			
보건 복지	2.8	3.61	5.69	5.62	6.19	필요할 때 병의원이나 약국을 어렵지 않게 이용할 수 있다.	
				5.16	5.91	5.81	지역에서 이용 가능한 의료서비스의 범위(종류)와 수준이 양호하다(2015신규).
				5.74		5.65	아이들을 위한 양육·보호가 잘 지원된다.
				5.88		6.02	노약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가 잘 지원된다.
						5.92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응급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교육	2.5	3.39	4.94	5.27	5.72	학생들이 좋은 수준의 학교교육(공교육)을 받을 수 있다.	
				4.68	5.48	5.49	학생들이 방과후교육, 각종 보습학원, 예체능학원 등 학교정규과정 외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2015 신규).
						5.26	어른들이 필요한 것을 배울 수 있는 평생학습을 받을 수 있다.
주거 및 생활 환경	3.3	3.02	5.29	5.78	6.52	주택 상태가 대체로 양호한 편이다.	
				4.97	6.01	5.75	도시가스·상·하수도, 도로, 쓰레기 처리 등 기초 생활 인프라가 양호하다.
				4.82		6.10	생필품 구입, 목욕탕, 아이용실 등 생활서비스 이용이 편리하다.
				5.57		5.70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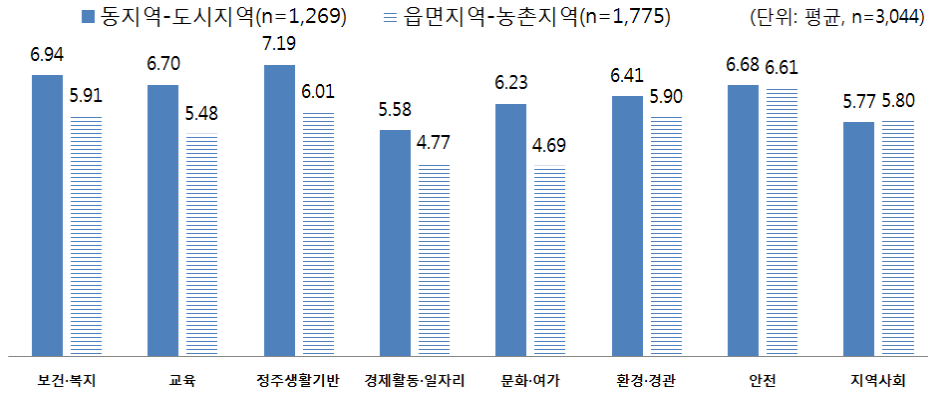
지역 경제	2.1	2.92	4.28	4.15	4.77	4.62	지역에서 적절한 소득 기회(일자리 및 일거리)를 구할 수 있다.
				4.55		4.89	최근 1년간을 볼 때, 지역의 경제활동 여건이 전반적으로 좋아졌다.
				4.29		4.83	농업과 농촌 자원을 활용한 농산물 가공·판매, 농촌관광 등 다양한 소득 기회가 만들어지고 있다.
문화 여가	2.2	2.52	3.15	3.55	4.69	4.80	도서관·미술관·문예회관 등 문화·여가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2.77		4.59	문화·체육강좌, 공연·영화 등 다양한 문화·여가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
환경 경관	3.4	3.82	5.79	5.72	5.90	6.30	주변 환경이 깨끗하게 관리되고, 경관이 아름답게 잘 정돈되어 있다.
						5.04	지역의 에너지정책 노력으로 주거나 생업과 관련한 에너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2015신규).
				5.83		6.36	쓰레기·분뇨·폐수·매연·악취 등의 환경오염이 적다.
지역 사회	2.8	3.46	6.04	6.06	5.77	5.92	주민들 사이에 교류나 친목 활동이 활발하다.
				5.98		5.77	주민들이 마을문제 해결과 마을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
안전	-	-	6.53	6.73	6.61	6.70	절도, 강도 등 범죄로부터 안전하다.
				6.37		6.32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안전하다.
				6.34		6.81	홍수, 산사태 등 자연재해 위험으로부터 안전하다.
전 체	2.7	3.25	5.26		5.84		

주1: 2012년, 2013년 조사는 질문 시 5점 척도(1~5점 부여), 2014년 조사는 11점 척도(0~10점 부여), 2015년 조사는 10점 척도(1~10점 부여) 사용함에 유의.

주2: 부문별 세부 항목 구성은 각 연도마다 일부 차이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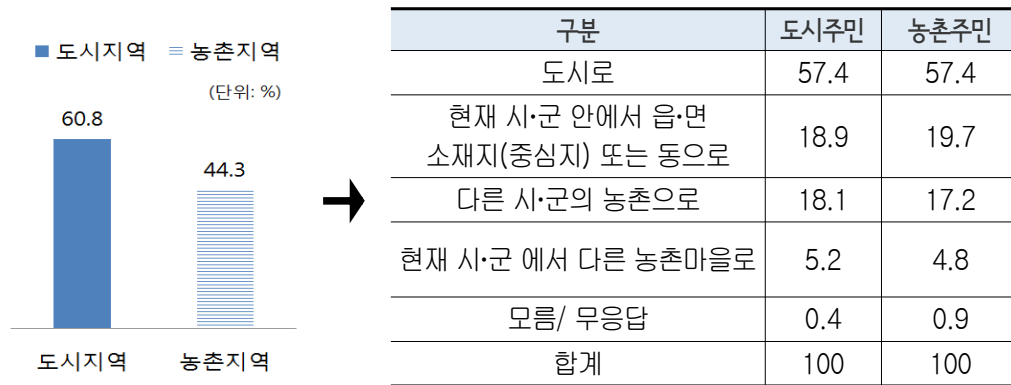
- 도시와 농어촌 주민의 부문별 평균 만족도를 비교해 보면 지역사회를 제외한 모든 부문에서 농촌 주민의 만족도가 더 낮은 것으로 조사됨.
 - 문화·여가 부문의 만족도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교육, 정주생활 기반 부문 순으로 도·농간 만족도 격차가 크게 나타남.

<8대 부문별 만족도 조사 결과>



□ 이주 의향에 대한 조사 결과

- 농어촌 주민의 경우 44.3%의 주민이 이주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이는 도시 주민에 비해 낮은 수치임.
 - 이주 의향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들 대상으로 이주 희망지역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과반수가 도시지역을 이주 고려 지역으로 응답



- 이주를 희망하는 이유에 대한 조사 결과,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응답자는 ‘도시에서 더 나은 소득기회를 찾기 위해’와 ‘교통이 불편하다’를 주요 원인으로 응답

〈이주 희망자가 이주하려는 이유〉

이주하려는 이유	응답비율(%)	
	도시주민	농촌주민
도시에서 더 나은 소득기회를 찾기 위해	12.0	15.0
교통이 불편하다	7.1	13.7
주택이 살기 불편하다	16.8	4.1
가족·직장 등과 관련된 사유로 인한 이사	12.8	6.6
체육활동, 문화·여가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좋지 않다	6.9	9.8
자녀교육 환경이 좋지 않다	5.1	9.8
기초적인 생활서비스를 이용하기 힘들다	3.5	7.6
쓰레기, 환경오염 등으로 인해 주변 환경이 좋지 않다	7.6	3.3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좋지 않다	1.9	7.9
난방비가 많이 든다	3.8	2.4
마을에 사람이 너무 없어서	3.1	2.9
도시가스, 상/하수도 등 생활 인프라가 좋지 않다	1.6	3.3
평생교육 환경이 좋지 않다	1.8	2.2
취약계층에 대한 적절한 복지서비스가 부족하다	2.2	1.4
이웃 등 주변 사람들과 관계가 좋지 않아서	1.8	1.8
강도/절도 등 치안이 불안하다	1.0	0.1
홍수/산사태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있다	0.5	0.1
기타	10.1	7.6
모름/ 무응답	0.3	0.3
합계	100	100

□ 농어촌 주민 정주만족도 조사 결과의 시사점

- 농어촌 주민들에게 농어촌의 발전 방향에 대해 인지시키고, 마을 발전의 구체적인 목표를 도출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
 - 농어촌 주민들은 도시 주민들에 비해 지역의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 낮게 평가하고 있음.
 - 농어촌 주민들이 스스로 지속가능한 마을 발전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주민들에게 농어촌 발전의 방향을 인지시키고, 주민 주도로 마을 발전의 방향과 목표를 이끌어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
- 농어촌 주민들에게 지역의 특성에 적합한 보건·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다양한 정책 필요
 - 삶의 질 향상 정책 8대 부문에 대한 중요도 순위 조사 결과, 농어촌 주민들은 보건·복지 부문에 대한 중요도를 가장 높게 평가한 반면, 부문별 세부 항목에 대한 만족도 평균 조사 결과, 보건·복지 부문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의료서비스 수준, 양육·보호 지원, 취약계층 복지지원, 응급상황 의료서비스에서 도시 주민에 비해 낮은 만족도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됨.
 - 고령화 및 소득 감소 등으로 인해 적절한 보건·복지 서비스의 제공이 농어촌 주민들이 생활을 영유하는 데 중요한 부분이 된 만큼, 농어촌지역에서도 지역의 특성 및 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적합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이 필요
- 농어촌지역에서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 필요
 - 삶의 질 향상 정책 8대 부문에 대한 중요도 순위 조사 결과, 농어촌 주민들은 보건·복지 부문 다음으로 경제활동·일자리 부문에 대한 중요도를 높게 평가하였으나, 경제활동·일자리 부문의 만족도가 낮고 도시와의 격차도 큰 것으로 나타남.
 - 이주 의향에 대한 조사 결과에서도, 농어촌 주민들은 이주를 희망하는 이유로 도시에서의 소득기회 창출을 가장 중요하게 꼽음.

- 농어촌 주민들은 농어촌지역의 일자리 부족과 소득 창출 기회의 부족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농어촌 주민의 근본적인 삶의 질 여건 개선과 농어촌의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하여 농어촌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
- 문화·여가 활동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만족도에 중요한 부분이 됨에 따라, 문화·여가를 향유할 수 있는 시설의 확충 및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
 - 삶의 질 향상 정책 8대 부문에 대한 평균 만족도 조사 결과, 농어촌지역에서 만족도 점수가 가장 낮고 도시와 농어촌의 만족도 점수 차이가 가장 큰 부문이 문화·여가 부문인 것으로 조사됨.
 -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 농촌 주민들의 문화·여가 활동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문화시설 및 문화 프로그램 등의 기반이 마련되어야 하며, 농촌 주민들이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문화·여가 시설 및 프로그램의 확충이 필요

2.3. 삶의 질 및 지역발전지수 구축

❖ 개요

-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과 지역발전 실태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을 위하여 삶의 질 현황 파악과 지역 간 상호 비교를 위한 자료 구축
 - 객관적 통계 자료에 근거하여 기초자치단체 단위에서 농어촌지역 실태 파악
 - 정책 부문별로 도시·농어촌의 지역 간 비교를 통해 정책 추진 성과를 점검하는 동시에 정책의 우선순위와 지역별로 구분되는 정책 수요 파악
 - 조사 자료의 시계열 분석을 통해 정책 추진에 따른 농어촌 현장의 삶의 질 여건 변화의 추이를 파악하고 시사점을 도출
- 삶의 질 8대 정책 부문에 대하여 각 영역에 해당하는 객관적 지표(통계 자료)를 토대로 도출
 - ※ 8대 부문: 3기 정책의 7대 부문(보건·복지, 교육, 정주생활기반, 경제활동·일자리, 문화·여가, 환경·경관, 안전), 지역사회
 - 정주생활기반: 주거, 생활기반, 기초생활서비스 공급 관련
 - 경제활동·일자리: 일자리, 소득 관련
 - 교육: 공공영역과 민간영역 포함
 - 환경·경관: 쉼터로서의 지역
 - 보건·복지: 복지 정책 대상별 지표 구분
 - 문화·여가: 문화기반과 체육시설
 - 안전: 범죄, 교통, 재난재해로부터의 안전
 - 지역사회: 사회 활력, 성장잠재력 관련

- 정책 여건의 변화와 농어촌지역의 실제 현실을 보다 잘 반영하고자 지수의 보완 작업을 지속해왔으며, 금년 연구에서도 제3차 기본계획의 내용과 관련한 지수 보완작업 수행
 - 2015년 삶의 질 및 지역발전지수에서는 ‘안전’과 관련한 지표를 추가하였으며, 지역의 기능적 특성을 고려한 도시·농어촌지역 구분과 지역 간 삶의 질 실태를 비교·분석

❖ 주요 추진 내용

□ 2015년 삶의 질 및 지역발전지수 구성

- 삶의 질 및 지역발전지수 도출을 위한 주요 절차와 내용
 - 기존 삶의 질 및 지역발전지수의 부문별 지표들에 대한 통계 자료의 갱신
 - 제3차 기본계획의 내용에 새롭게 반영된 안전 부문의 지표를 선정하고, 관련 통계 자료에 근거하여 지표 도출
 - 주민 조사를 바탕으로 부문별 지표의 가중치 계산
 - 시·군별, 세부 지표별 표준화와 가중치 적용을 통해 ‘삶의 질 및 지역발전지수’를 생성
 - 부문별 실태, 종합 실태를 분석하고 과거 지수와 비교를 통해 지역의 삶의 질 여건 변화 파악 및 시사점 도출



○ 2015년 삶의 질 및 지역발전지수 부문별 지표

〈부문별 지표와 세부 내용 및 갱신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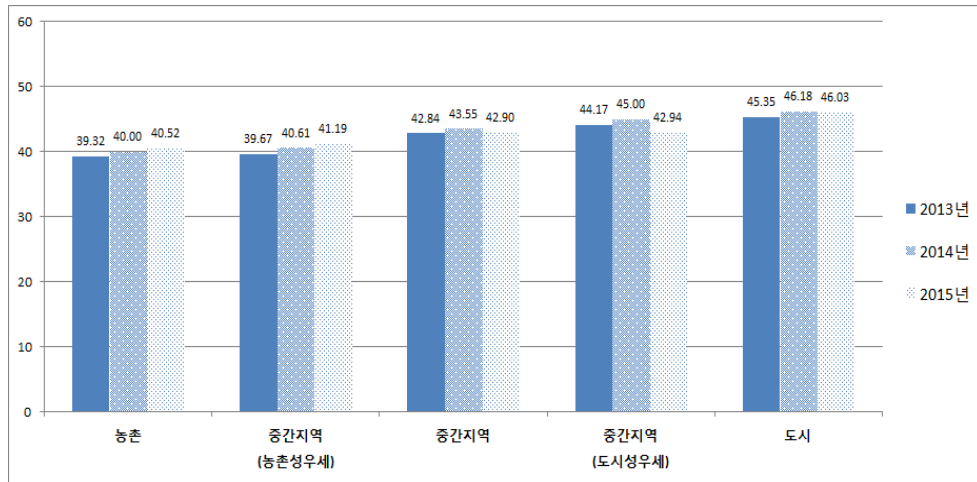
구분	지표	내용	비고
보건 · 복지	인구 천 명당 의료인 수	• (의료인 수/인구)×1,000 • 의료인: 상근의사, 비상근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갱신
	1㎢당 의료기관 수	• (의료기관 수/시·군 면적) • 의료기관: 종합병원, 병원, 의원, 보건소	갱신
	영유아 천 명당 보육시설 수	• (보육시설 수/영유아 인구(5세 미만))×1,000	갱신
	고령인구 천 명당 장기요양기관 전문 인력 수	• (장기요양기관 전문 인력/65세 이상인구)×1,000	갱신
	인구 천 명당 전문의 인원 수	• (진료과목별 전문의 인원 수/인구)×1,000	갱신
교육	1㎢당 학교 수 (초·중·고·특수학교)	• 총 학교 수(초·중·고·특수학교)/시·군 면적	갱신
	교원 1인당 학생 수	• 학생 수/교원 수	갱신
	대학 진학률	• (상급학교 진학자(4년제, 2년제 포함)/졸업자 수)×100	갱신
정주 생활 기반	노후주택 비율	• (준공 30년 초과 주택 수/총 주택 수)×100	-
	상·하수도 보급률	• (상수도 보급률 + 하수도 보급률)/2	갱신
	인구 천 명당 생활서비스 종사자 수	• (생활서비스 종사자수/인구)×1,000 • 생활서비스: 슈퍼마켓, 약국, 목욕탕, 미용실 등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서비스	갱신
경제 활동 · 일자리	고용률	• (취업자 수/15세 이상 인구)×100 • 표본조사	갱신
	경제활동인구 대비 총 사업체 종사자 수	• (총 사업체 종사자 수/경제활동인구)×1,000	갱신
	1인당 지방소득세	• 소득세할 주민세가 지방소득세로 변경됨에 따라 지표 명칭 변경	갱신
	재정자주도	• ((자체수입 + 자주재원) / 자치단체 예산규모)×100 • 자체수입: 지방세(보통세 + 목적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경상적세외수입 + 임시적세외수입) • 자주재원: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 자치단체 예산규모: 자체수입(지방세 중 지방교육세 제외) + 자주재원 + 보조금 +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세입기준)	갱신

문화 · 여가	문화기반시설 수	•문화기반시설: 공공도서관, 등록박물관, 등록미술관, 문예회관, 지방문화원	갱신
	인구 천 명당 공원조성 면적	•공원: 도시공원(어린이 공원, 소공원, 근린공원, 역사공원, 문화공원, 수변공원, 묘지공원, 체육공원, 기타공원)	갱신
환경 · 경관	주민 1인당 생활 폐기물 배출량	•생활폐기물 배출량 / 인구 •생활폐기물: 순수생활폐기물+사업장생활계폐기물	갱신
	1㎢당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대기오염물질 배출량(kg)/시·군 면적(km ²)	갱신
안전	인구 천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수	•(교통사고사망자수/인구)×1,000	신설
	범죄 안전	•시·군별 범죄안전 등급	신설
	자연재해 피해율	•연간 시·군별 자연재해 피해액	신설
지역 사회	고령화율	•(65세 이상 인구/총 인구)×100	갱신
	인구 1천 명당 순 인구 이동	•(순 인구이동/인구)×1,000 •순 인구이동: 전입인구-전출인구	갱신
	전출률	•(지역 외부로 이동 인구/인구)×1,000	갱신
	연평균 인구 성장률	•(당해 년 주민등록인구-전년 주민등록인구/전년 주민등록인구)×100 자료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외국인 등록인구 포함)	갱신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	•(자살자 수/인구)×100,000	갱신

□ 2015년 삶의 질 및 지역발전지수 종합실태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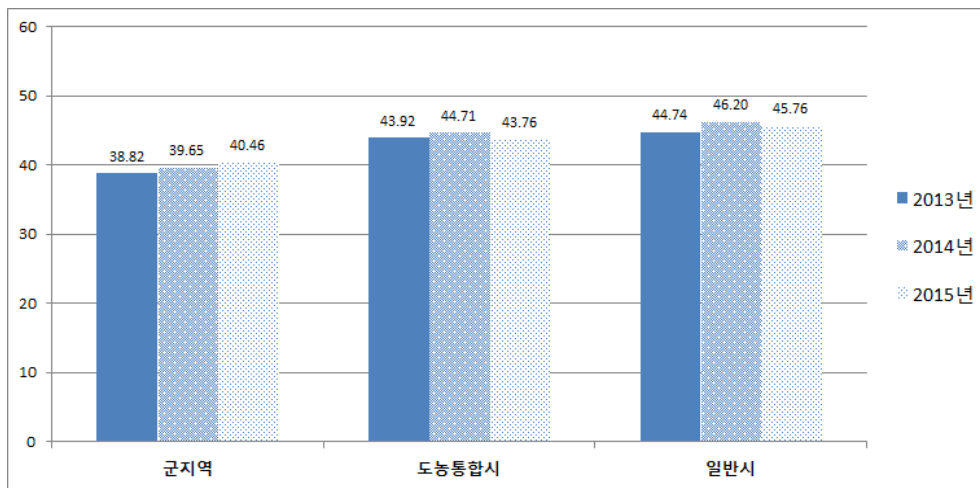
- 도·농 간 삶의 질 지수의 차이가 존재하지만 그 격차는 점점 줄어드는 추세
 - 전반적으로 여전히 도시지역의 삶의 질 지수가 농어촌지역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도·농 간 격차는 점차 줄어드는 추세를 보임.
 - 농어촌지역과 도시지역의 삶의 질 지수 격차는 2013년 6.03에서 2015년에는 5.51로 감소
 - 군지역의 삶의 질 지수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반면, 2015년 도·농 통합시 및 일반시의 삶의 질 지수는 정체하는 것으로 나타남.

<시기별 삶의 질 및 지역발전지수의 변화>



주: 안전 제외, 도시, 중간지역, 농어촌 구분

<시기별 삶의 질 및 지역발전지수의 변화(군, 도농복합시, 일반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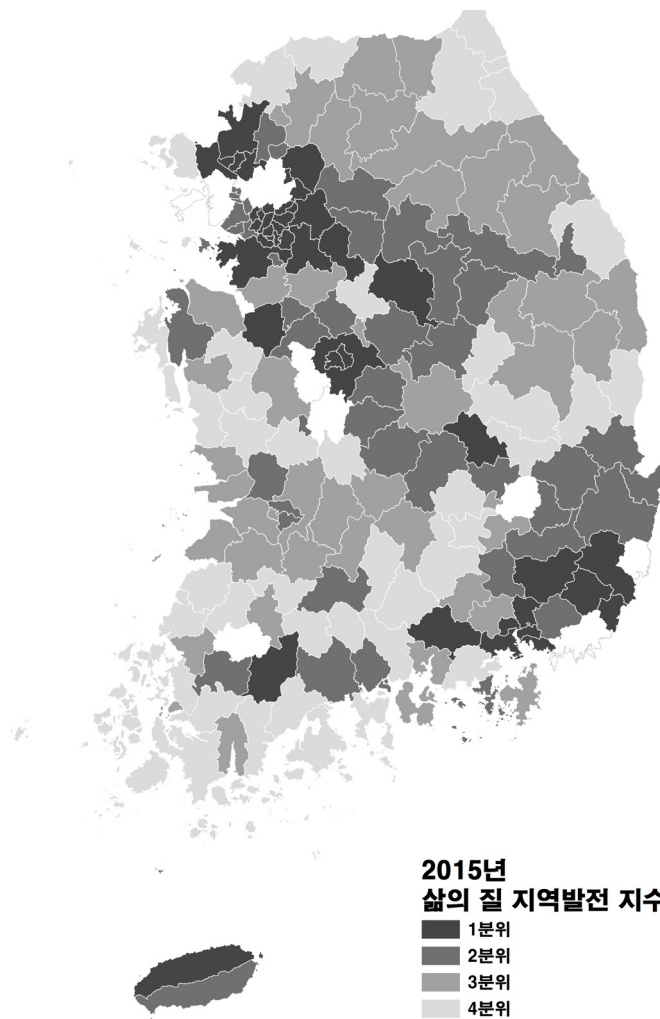


주: 안전 제외, 군, 도농복합시, 일반시 구분

- 삶의 질 및 지역발전지수의 분포를 보면 수도권과 광역시 주변 시·군의 지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삶의 질 및 지역발전지수의 상위 25%(35개 시·군)에는 도농통합시가 27개를 차지하고 있으며, 군은 2013년도 3개에서 8개로 증가

- 반면, 삶의 질 및 지역발전지수 하위 25%(35개 시·군)는 2개 지자체를 제외하고 모두 군 지역인 것으로 나타남.
- 농어촌지역 내에서도 주변도시와의 접근성, 사회·경제적 특성에 의해 정책 영역별로 시·군간 격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조사 결과, 여전히 삶의 질 및 지역발전 정도가 낮은 농어촌지역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

〈2015 삶의 질 및 지역발전지수 분포〉



□ 2015년 삶의 질 및 지역발전지수 부문별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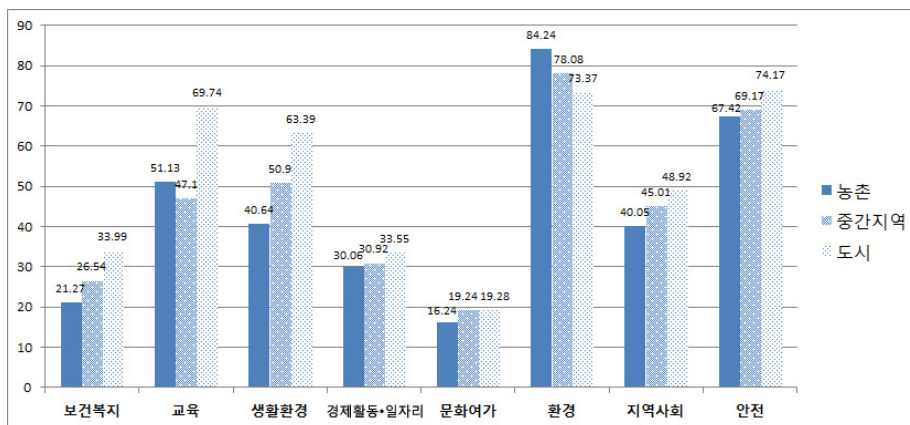
- 주민 설문조사를 통해 산출된 2015년 각 부문의 가중치는 세부 정책 영역에 대한 주민들의 중요도를 의미하며, 보건·복지, 경제활동·일자리, 정주생활기반 순으로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삶의 질 및 지역발전지수 부문별 가중치〉

구분	보건·복지	교육	정주생활기반	경제활동·일자리	문화·여가	환경·경관	안전	지역·사회
2014년	0.248	0.091	0.131	0.163	0.078	0.060	0.126	0.101
2015년	0.242	0.103	0.159	0.192	0.091	0.059	0.104	0.051

- 부문별 조사 결과 주민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영역의 삶의 질 만족도가 높지 않거나, 도·농간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남.
 - 보건·복지, 경제활동·일자리 등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영역의 절대적 만족도가 낮게 나타남.
 - 보건·복지, 정주생활기반 등 농어촌 주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영역의 지표에서 도·농 간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남.
 - 환경·경관 영역의 경우 농어촌지역이 도시지역에 비해 여건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남.

〈삶의 질 정책 부문별 도·농간 격차〉



- 보건·복지, 교육의 경우 도·농 간 격차가 보다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남.
 - 그 외 지표들은 도·농 간 격차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환경의 경우 농어촌이 도시지역에 비해 우수한 특성을 보임.

〈삶의 질 및 지역발전지수 부문별 변화〉

부문	연도	농촌	중간지역	도시	도시-농촌	중간지역-농촌
보건·복지	2013년	16.28	19.32	23.86	7.58	3.04
	2014년	18.24	22.50	27.07	8.83	4.26
	2015년	21.27	26.54	33.99	12.72	5.27
교육	2013년	43.88	35.30	32.70	-11.18	-8.58
	2014년	46.09	42.71	45.53	-0.56	-3.38
	2015년	51.13	41.10	69.74	18.61	-10.03
생활환경	2013년	43.87	59.03	71.56	27.69	15.16
	2014년	47.31	61.72	72.14	24.83	14.41
	2015년	40.64	50.90	63.39	22.75	10.26
경제활동·일자리	2013년	29.73	34.75	41.01	11.28	5.02
	2014년	31.12	35.39	34.53	3.41	4.27
	2015년	30.06	30.92	33.55	3.49	0.86
문화·여가	2013년	12.08	15.56	17.21	5.13	3.48
	2014년	13.66	17.89	18.96	5.3	4.23
	2015년	16.24	19.24	19.28	3.04	3
환경	2013년	87.99	80.63	75.74	-12.25	-7.36
	2014년	84.82	78.64	76.29	-8.53	-6.18
	2015년	84.24	78.08	73.37	-10.87	-6.16
지역사회	2013년	41.38	48.14	55.37	13.99	6.76
	2014년	38.78	43.57	48.39	9.61	4.79
	2015년	40.05	45.01	48.92	8.87	4.96
안전	2015년	67.42	69.17	74.17	6.75	1.75



○ 정주민족도 조사 결과와 비교

- 도·농 간 삶의 질 여건 격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던 정주생활기반(생활환경)의 경우 농어촌 주민의 주관적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 교육의 경우 주관적 만족도가 높지 않으며, 객관적 여건 또한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것으로 나타남.
- 문화·여가 및 경제·일자리의 경우 도·농 간 격차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주관적 만족도는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됨.

<삶의 질 영역별 농어촌주민의 중요도 인식과 삶의 질 지수>

구분		보건 복지	정주 생활기반	경제 일자리	안전	교육	문화 여가	환경 경관	지역 사회
주관적 만족도	만족도	5.91	6.01	4.77	6.61	5.48	4.69	5.90	5.80
	순위	3	2	7	1	6	8	4	5
삶의질 지수 도농격차	격차	12.72	22.75	3.49	6.75	18.61	3.04	-10.87	8.87
	순위	6	8	3	4	7	2	1	5

□ 결론 및 시사점

- 삶의 질 및 지역발전지수로 본 농어촌 삶의 질 여건은 도시와의 격차가 감소하는 등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추세를 보임.
 - 삶의 질 정책 영역별로 도시(일반시, 도농복합시)지역과 농어촌(군) 지역의 격차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일부 영역의 경우 농어촌지역이 도시지역에 비해 삶의 질 여건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

- 보건·복지, 생활환경 등 농어촌 주민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삶의 질 영역에 해당하는 정책의 발굴과 추진은 여전히 중요한 과제
 - 주민 조사에서 정책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된 주요 영역에서 도·농 간 격차 확대
 - 보건·복지와 농어촌 정주환경과 관련하여 농어촌 주민이 처한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 도·농 간 격차를 완화시킬 수 있는 관련 정책 및 사업의 발굴 시행이 필요
- 지역의 현황과 여건을 고려한 농어촌 삶의 질 개선 정책 추진이 필요
 - 농어촌지역이라고 할지라도 사회·경제적 요인에 따라 성장하는 지역과 그렇지 못한 지역 간의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남.
 - 정책 영역별로 삶의 질 및 지역발전지수의 지역 간 편차는 다양한 지리적 특성을 보임.
 -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농어촌지역의 삶의 질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책 영역별, 지역별로 차별화된 정책 수단과 추진 방식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
- 삶의 질 및 지역발전지수의 현실 반영률 제고
 - 삶의 질 및 지역발전지수의 중요한 목적은 농어촌지역 여건에 대한 객관적 인식에 있으며, 이를 위하여 도·농간 비교를 통해 농어촌지역의 상대적 위치를 점검
 - 지역의 실제 특성에 입각하여 농어촌지역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지역 분류를 통해 실제 농어촌지역의 삶의 질 여건을 살펴볼 수 있도록 지수를 도출하는 것이 중요함. 이를 위해 농어촌지역 구분 방식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

2.4. 삶의 질 향상계획 심층연구

❖ 개요

- 제2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11~'14)기간에 실시한 과제별 심층평가 방식에 대한 개선 필요성 대두
 - 전문지원기관 중심의 연구 구조는 분야별 전문성 확보 및 범부처 정책으로서 저변 확대 측면에서 한계를 가짐.
 - 삶의 질 위원회에서 연도별로 선정한 2개 정책 과제군에 대한 심층평가만 이루어져 삶의 질 향상정책 전반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함.
- '15. 7. 21 국책연구원과 시도연구원 총 17개 기관이 참여한 '농어촌 삶의 질 정책지원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공동업무 협약'이 체결됨.
- 정책지원 네트워크는 제3차 기본계획 기간 동안 다음과 같은 과업을 수행
 - 삶의 질 향상 정책 주요 과제에 대한 심층연구
 - 부문별 삶의 질 정책 우수 사례 발굴 및 관련 부처 간 협업과제 등 발굴
 - 삶의 질 시행계획의 점검·평가 참여
 - 기타 삶의 질 정책 자문 및 성과 확산 참여
- 각 연구원이 전문성을 가진 분야의 정책을 농어촌의 관점에서 살펴봄.
 - 연구 주제에 대한 농어촌의 실태 및 현황을 구체적 자료 및 조사를 통해 제시
 - 정책의 추진 실태는 참고로 제시한 삶의 질 시행계획의 사업들을 참고하되 연구자가 관련 있다고 생각하는 다양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검토
 - 정책 형성 및 집행 과정에 대한 평가보다는 정책 성과를 주민 체감, 사례, 통계 자료 등 구체적 증거자료로 분석
 - 심층연구를 통해 얻은 결론에 기초하여 구체적인 정책을 제안

<연구기관별 심층연구 수행 내역>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연구제목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동진	농어촌 정신보건 서비스 실태와 개선 방안
한국교육개발원	전인식	농어촌 특성을 반영한 공교육 활성화 방안
산업연구원	김선배	도·농파트너십 구축을 통한 6차산업 활성화 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박성정	농어촌 여성의 6차산업 창업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박주영	농어촌 문화 향유 현황과 개선 과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박창석	주민참여를 통한 농어촌 자연자원 관리방안
국토연구원	김창현	농어촌 자연재해 취약지역 실태와 관리방안

❖ 주요 추진 내용

▣ 농어촌 정신보건 서비스 실태와 개선 방안

- **(배경)** 농어촌지역은 도시지역에 비해 정신건강 문제가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농어촌지역의 정신질환 평생 유병률과 1년 유병률은 도시에 비해 높은 편이고,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노인 인구의 비율이 높고 자살자 수가 많음.
 - 농어촌지역의 정신건강 문제의 심각성에 비해 정신건강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등 관련 인프라는 도시에 비해 매우 열악한 수준임.
- **(주요 내용)** 농어촌의 정신보건 현황을 유병 현황 및 서비스 공급 현황,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측면에서 도시와 비교해 살펴봄.
 - 지역별 우울 평균점수는 도시(5.98점)에 비해 농어촌(6.81점)이 높았음.
 - 2000년부터 2011년 사이에 인구 10만 명당 자살자 수가 25명 이상 증가한 지역은 남자의 경우 27개 군 지역, 여자의 경우 7개 군 지역이었고 이는 대도시 및 중소도시(남자 12지역, 여자 1지역)에 비해 매우 높은 수치임.



-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 기관(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사회복지시설, 정신보건센터, 중독통합관리센터)은 대도시 지역에 편중되어 있음. 전체 85개 군 중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군은 48개에 이르며, 중독통합관리센터는 군 지역에는 전무한 실정
 - 농어촌지역의 정신보건사업에 대한 예산 집행은 주로 보건소에서 직접 집행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으며 14.3%만이 협력기관 전액 집행으로 나타났음. 정신보건센터를 보건소에서 직접 운영할 경우 기존의 보건소의 인력을 활용하여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정신보건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위탁기관에 비해서 정신보건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데 어려움.
 - 대도시에 비해 프로그램이 과도하게 치매사업에 편중되어 있고, 질적 수준이 높지 않으며, 위기관리, 생애주기별 정신건강 증진사업 모두 도시지역에 비해 지표 충족률이 매우 낮음.
 - 도시에서 나타난 노인의 정신건강 문제는 경제, 갈등, 건강 등 다른 요인으로 설명이 가능하였으나, 농어촌지역에서는 이러한 요인들을 고려하여도 초고령자의 우울 위험이 9.0배로 상당한 수준으로 나타남.
 - 농어촌지역 주민 사이에서는 인구학적 특성 및 경제적 요인이 자살 생각의 위험을 높이는 데 기여하지 않으며, 신체적 건강은 우울과 함께 자살 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음.
 - 사회적 지지는 도시지역 뿐 아니라 농어촌지역에서도 정신건강의 문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는 요인으로 확인됨.
- **(정책 제언)** 지역사회의 정신건강 문제 해결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자원 보유 여부에 따라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을 다양화하고, 사업운영체계 또한 도시와는 다른 농어촌 특성을 반영하여 모델화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 자살문제는 생애주기별 특성과 지역적 특성이 고려될 필요가 있고, 지역사회별로 특화 사업을 개발하여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함.
 - 지역사회의 정신건강 문제해결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자원 보유 여부

에 따라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을 다양화하고, 사업운영 체계 또한 도시와는 다른 농어촌 특성을 반영하여 모델화할 필요가 있음.

- 지역사회 내에서 정신보건사업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군 단위별로 적어도 1개소의 센터가 설치되어야 하며, 재정자주도가 낮은 지자체에서의 센터 설치를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 배분의 원칙을 변경하여 지역취약성 인지적 예산 배분 formula를 구성할 필요가 있음.
- 지역사회에서 사업을 수행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 및 연계 프로그램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인접한 몇 개 군을 연계하여 사업수행 체계를 공동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음. 이 과정에서 광역시도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해야 함.

□ 농어촌 특성을 반영한 공교육 활성화 방안

- (배경) 도시와는 다른 특성을 가진 농어촌 초등학교 교육의 실태를 엄밀히 살펴보고 새로운 시도로 농어촌 특성을 반영한 초등학교 교육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주요 내용) 농어촌 초등학교의 교육여건을 도시와 비교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 농어촌 및 도서지역에는 전체 초등학교의 40% 이상이 있지만 학생 수는 약 16%에 불과하며, 소규모 학교가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남.
 - 초등학교 단계에서는 학업 성취도에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 사교육 참여 여부, 학교의 평균적인 사회·경제적 수준이 유의한 영향을 미침.
 - 농어촌지역 초등학교는 수업 분위기 및 수업 태도가 도시지역에 비해 나쁘고, 각종 학습·심리적 요인도 낮은 것으로 나타남.
 - 교사와 학생의 인식 간 차이가 크고 변화 양상도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
 - 초등학생의 자기주도 학습시간과 독서 향유 정도는 감소한 반면, 컴퓨터 및 인터넷 사용은 증가 추세



- 농어촌 학교의 초등학생이 도시지역의 학생에 비하여 검소의식이 약하고, 친절·양보와 책임·협동 의식도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 학교 교육활동은 교육의 여건이나 성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관심이 부족

○ (정책 제언) 농어촌 초등학교의 교육여건을 고려하면 농어촌 초등교육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개선해야 함.

- 농어촌 소규모 학교를 지원하고 특성화하기 위한 운영 방안 필요
- 점차 심화되어가는 가정 배경의 격차를 보완하기 위한 교육적 배려가 필요
- 농어촌지역 학교의 교육 과정 요인 악화를 막기 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
- 초등학생의 방과 후 시간 활용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
- 농어촌 학교 교사의 전문성 및 직무역량의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
- 가정의 사회·문화적 환경 및 부모의 지원 부족과 학교 및 학급 풍토의 격차, 교사 요인의 차이 등과 같은 낙후지역에 속해서 받는 영향으로 인한 저소득층 학생의 이중고를 고려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
- 학교 교육의 목적은 인지적, 정의적, 심동적 영역의 고른 발달이 이루어진 전인(全人)의 양성으로 학업 성취 이외에도 학교 교육을 통해 길러져야 할 다양한 성과 영역 역시 중요
- 학교 교육의 성과로서 학생의 인성, 창의역량, 자기주도 역량, 사회역량 등을 포함하고 이에 대한 책무를 강조하여 학생의 전인적인 성취에 보다 관심을 가지도록 해야 함.

□ 농어촌과 도시의 파트너십 구축을 통한 6차 산업 활성화 방안

○ (배경) OECD를 중심으로 농어촌지역 발전 및 산업 육성 전략으로 부각되고 있는 도·농파트너십 활성화와 우리나라 농어촌지역 발전 및 농어촌산업 육성을 대표하는 6차산업 육성 정책의 핵심 전략 및 주요 내용을 상호 비교하여 보다 효율적인 정책 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주요 내용) 6차산업 활성화 정책은 농어촌 산업 육성 및 농어촌지역 발전을 위해 매우 유용하고 필요한 사업이지만, 영세한 다수의 지원 대상에 다수의 지원 프로그램을 매칭해야 하는 복잡한 구조적 문제점을 보유
 - 클러스터 관점에서의 6차산업 활성화 정책구조 평가에서도 6차산업 활성화 정책은 정책적 필요성 및 정책 목적과 사업 내용 간의 정합성은 양호하지만 사업의 성과 제고 등 효율성에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평가
 - 6차산업 활성화 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산업 및 지역발전 패러다임으로 강조되고 있는 도·농파트너십 전략의 관점에서 제기된 이슈를 중심으로 지원 프로그램을 정비하고 체계화해야 함.
 - 지금까지는 중앙정부가 공급자 중심으로 시장 형성에 노력해 왔으나, 향후에는 6차산업 추진 주체가 스스로 시장을 개척하고 확대할 수 있도록 시장 형성 및 창출을 위한 기반 조성사업에 지원하도록 해야 함.
 - 도의 농정당국, 도 농업기술원, 테크노파크, 창조경제혁신센터, 중소기업청, 대학교 산학협력단, 6차산업활성화센터 등의 실질적 지원 및 연계 활성화 방안 마련이 필요
 - 6차산업 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통해 귀농·귀촌자의 활용, 지역사회 맞춤형 사회적기업 육성, **Family Doctor** 제도를 차용한 코칭 및 컨설팅 체계 구축 등 교육, 창업보육, 인재 매칭 등의 시스템 구축을 포함한 다양한 인력 교류 및 양성 방안 마련이 필요
 - 농어촌과 도시의 비즈니스 서비스 연계를 위해서는 6차산업 추진 주체가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고 품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
 - 지역별 특산품 품목으로 접근하는 것이 6차산업 주체로서 농업 경영체, 농어촌 주민을 동원하는 데 유리한 점이 있지만, 지나치게 세분화된 지역 생산 농산물 품목 중심으로 치우치는 것은 사업의 효율성 및 성과 제고 측면에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음.
- (정책 제안) ‘농어촌산업 발전권’ 내에서 지역별로 기존 특화된 1차, 2차, 3차 산업의 유기적 연계를 통한 부가 가치 창출 및 융복합을 촉진시키기 위



한 ‘전략적 6차산업’ 시범사업 필요

- ‘농어촌산업 발전권’ 단위에서 6차산업 활성화 지원 시스템 구축을 제한하는 것은 6차산업의 지원 대상과 지원 프로그램이 너무 많은 구조적 복잡성을 해소하면서 농어촌지역에서 산업 발전의 임계규모 확보(규모의 경제 창출) 가능

□ 농어촌 여성의 6차산업 창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

- **(배경)** 농어가 인구 및 농어업 주 종사 인구 중 여성 비율이 50%를 상회하고 있고, 여성들의 장점이 발휘될 여지가 많은 2, 3차산업이 발전하면서 농어업에서 여성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증대되고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음. 이에 농어촌에서의 6차산업의 여성 참여 실태를 살펴보고, 6차산업과 관련하여 농어촌 여성들의 창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과제를 도출할 필요가 있음.
- **(주요 내용)** 농어촌 여성의 6차산업 참여 실태를 6차산업 참여율, 사업 규모, 정부지원 활용, 성공요인 등을 중심으로 남성과의 비교를 통해 살펴봄.
 - 경영주의 성비는 남성이 여성보다 8~9배 정도 많아, 여성이 6차산업의 성장과정에서 경영자로서의 역할은 아직 미약
 - 농가 단위에서 6차산업에 참여하는 편이고, 농업법인을 통한 참여는 남성보다 저조한 편
 - 6차산업화 경영 농가의 6차산업화 정부지원 사업에 대한 인지도, 이용 경험 및 경영 애로사항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분석해 본 결과 여성의 비율이 모두 낮게 나타남.
 - 6차산업 창업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65인) 결과, 창업과정 컨설팅 지원이나 창업자금 지원, 경영 역량 강화, 마케팅·브랜드·디자인 지원은 30~40%대의 이용률을 보이고 있으나, 수출 지원, 연구개발(R&D) 지원, 출원, 인증 및 평가 지원은 수혜 경험이 10% 초반으로 낮았음.

- 6차산업 창업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6차산업 창업 여성에 대한 지원제도 중 판로 및 판매 확대 지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창업자금 지원, 실무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전문적 교육, 창업 이후 지속적인 경영컨설팅 등이 중요하다고 응답

○ **(정책 제안)** 농어촌 여성의 6차산업 참여와 성공적 사업체 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이 필요함.

- 여성 6차산업 사업체들의 우수한 상품을 상시 홍보, 판매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매장 등 판로 지원이 필요
- 담보가 부족한 여성을 위한 여성대출제도 등 여성들을 위해 자금 수혜의 장벽을 낮춰주는 것이 필요
- 정보 접근성과 교육 기회가 적은 여성을 위한 연수 기회, 특화 프로그램을 지원
- 사업 단계에 맞게 지속적으로 경영 지원과 자문을 해 줄 수 있는 컨설팅 강화

▣ **농어촌 문화 향유 현황과 개선 과제**

○ **(배경)** 문화·여가 기반의 측면에서 농어촌과 도시의 격차에 대한 문제 제기는 지속되어 왔음. 농어촌의 문화·여가 여건에 대한 폭넓은 검토를 통해 농어촌 문화 향유 지원 정책의 추진 방향을 제시하고 농어촌 주민의 문화 향유 증진을 위한 개선 과제를 도출할 필요가 있음.

○ **(주요 내용)** 농어촌 주민의 문화 향유 현황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 농어촌 주민의 문화 향유 현황 분석 결과, 농어촌 주민은 도시 주민에 비해 문화 향유 수준이 낮은 편이지만 문화 향유에 대한 욕구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농어촌지역의 단위면적당 문화시설의 개수가 도시에 비해 훨씬 낮음. 농어촌 주민 역시 문화 향유 시설 접근성을 멀게 체감하고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도도 낮은 수준임.

- 농어촌 주민의 경우 문화 향유에 대한 욕구(need)는 있으나 접근성 등 기회 측면에서 제약이 존재함. 따라서 농어촌지역의 문화 향유 제약 요인을 해소하고 생활·지역 속 문화의 일상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 (정책 제안) 농어촌 주민의 문화 향유 현황과 지원 정책을 분석한 결과 체감 효과가 높은 사업을 확대하고 부족한 영역을 보완해야 함.

- 기존의 민간·공공시설을 활용하여 다기능 복합문화기능을 강화하고 재능기부, 자원봉사, 동아리 등 다양한 주민참여 기회를 마련해야 함.
- 거점지역과 마을간 네트워크 강화 및 프로그램 연계를 통한 시설 운영 및 전문 인력, 컨설팅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 농어촌 주민(수요자)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경제적·시간적 제약을 해소해야 함.
- 농어촌 현실에 맞는 정보전달 수단으로 농어업 소식 정보채널 및 오프라인 방식(입소문, 전단지, 우편물)을 활용하여 문화정보 확산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 귀촌인, 예술인 등의 매개인력을 육성하거나 인력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함.
- 문화 향유 정책 추진에 있어 통합적 전달체계 구축, 입체적 지원 등 타부처 간 연계협력 시스템을 개발해야 함.
-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문화 거버넌스 모델을 개발하여 지역문화 주체간 네트워크, 파트너십 형성을 유도하고 효율적이고 능동적인 문화 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음.

□ 주민참여를 통한 농어촌 자연자원 관리방안: 마을도랑을 중심으로

- (배경) 우리나라 수질 정책의 목표는 물리·생물·화학적 지표를 관리하는 체계에서 물 환경의 전반적인 영역인 수생태계를 보전하는 방향으로 전향되었음. 또한 지속적인 물 관리를 위한 자발적인 주민참여가 부각되고 있음. 특히, 마을 내외에 존재하는 마을도랑은 주민 생활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농어촌 마을도랑 관리를 주민참여 중심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주요 내용)** 마을도랑 살리기 사업은 마을환경 개선, 하천 복원, 수질 개선, 수질 및 생태계 모니터링, 교육 및 홍보를 중심으로 수행되었음. 식생 조성, 마을환경 개선, 수지 개선, 교육 홍보 등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수행되었음. 특히 식생 조성 및 하천 수질정화, 하천의 쓰레기를 줍는 활동은 주민참여를 통해 수행
 - 2011년 약 50개, 2012년 약 20개, 2013년 약 40개, 2014년 약 40개 마을도랑 살리기 사업 추진
 - 각 유역 환경청에서는 수질 개선을 위해 평균 600만 원을 투자했으며 식생 조성에는 300만 원, 수질 및 생태조사에는 90만 원, 마을 환경 개선은 800만 원, 홍보 및 교육에는 약 350만 원을 투자함.
 - 우리나라 모든 농어촌 마을에 용배수호가 분포하고 있으며, 마을도랑과 함께 관리한다면 농어촌 마을의 물 환경이 더욱 효과적으로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농어촌 주민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생활 쓰레기 투기(27.7%), 생활하수 유입(16.1%), 영농 폐기물 방치(16.1%)가 가장 큰 마을 도랑 문제점으로 파악되었으며, 개선 방향으로는 생태적으로 건강한 도랑(26.1%), 수질이 깨끗한 도랑(20.4%), 마을/농경지에 물이용이 가능한 도랑(13.2%) 등을 선호
 - 선호하는 정비 사업 진행 주체로는 지방자치단체(27.3%) 및 환경부/환경청(15.4%)으로 조사되었으며, 주체 단체(조직)와 긴밀하게 협조하여야 하는 협력 단체로서 지방자치단체와 마을주민(주민협의체 등)의 연결 강도가 가장 높게 도출
 - 용배수로 정비 사업의 개선 필요성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바람직한 방향성에서는 일반적인 하천 정비 방향에서 예상되는 농업용수 이용의 안전성(25.4%), 생태적인 안정성(19.6%)뿐만 아니라 재난/재해 안전성(33.3%)에 대한 항목이 중요하게 부각됨.

- **(정책 제안)** 주민 스스로가 자발적 주체가 되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 마련 필요. 또한 당사자들이 협력체계를 구축한 (소)유역 협의회가 상설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음.
 - 지방자치단체와 마을 주민과의 소통의 장을 위한 기반 및 주기적인 모임 마련이 주민의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음.
 - 용배수로와 수질 및 수생태계의 연계사업은 비단 하류 하천의 물 환경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농어촌 마을의 친환경적 정주성과 안전성을 크게 증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마을도랑과 관련된 연계 사업의 발굴·확장의 가능성은 이·치수, 수질개선, 폐기물 등 오염원 관리, (수)생태복원, 마을경관, 소득증대사업 등 매우 다양한 사업들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 농어촌 자연재해 취약지역 실태와 관리방안

- **(배경)**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의 경우는 그 규모면에서나 정주인구를 기준으로 한 실질적인 피해 규모에 있어서 농어촌지역이 도시지역에 비해 훨씬 심각한 실정임. 이에 농어촌지역도 자연재해 피해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이 시급한 정책과제가 되고 있음.
- **(주요 내용)** 농어촌의 자연재해에 의한 피해는 도시와 그 특성이 다르며, 농어촌지역 간에서도 서로 다르게 나타나 지역 맞춤형 정책 대응이 중요
 - 자연재해에 의한 피해 내용에서 농어촌지역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도시지역에 비해 축대·담장, 축사, 비닐하우스 등 사유시설에 대한 피해가 집중적으로 발생
 - 농어촌지역 간에서도 인명과 공공시설 피해, 사유재산 피해 등이 집중적으로 나타나거나 다양한 형태의 자연재해 피해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내용이 서로 다르게 전개
 - 농어촌지역 간에서도 자연재해 피해 내용, 정주 인구의 감소, 정주 인구의 고령화, 주택 등 건물의 노후화와 불량주택의 집적 정도 등이 서로 다름.

- 농어촌지역의 자연재해 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이러한 특성차이에 대응하는 맞춤형 정책 대응이 중요
- **(정책 제언)** 자연재해 피해유형이나 자연재해 취약성의 지역 간 특성 차이를 고려하는 지역맞춤형 자연재해 대응 방안의 마련과 추진이 필요
 - 국가적 기준의 긴급성과 우선성 등에 의거하여 사업 추진 대상지역을 선정하고, 해당 지자체, 지역 주민들과 공동으로 구체적인 사업 대상지구나 구역을 결정하며,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중심으로 상호 협의·조정하여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
 - 우리나라 정주공간의 기초단위를 형성하는 공동체, 국토관리의 최첨병 혹은 파수꾼 기능을 하는 농어촌 마을을 중심으로 통합적 사업 시행이 이뤄져야 함.
 - 농어촌 자연재해 및 재해 취약성 관련 정보의 축적을 통해 체계적·계획적이며 지속성과 일관성, 그리고 객관성 있는 정책 추진의 기반을 마련하여야 함.
 - 농어촌 자연재해 예방이나 사후 피해 최소화를 위한 다양한 관련 사업이나 정책들을 통합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피드백하는 평가체계를 마련하여야 함.



3. 정책 현안 발굴 및 홍보

3.1. 이슈리포트 발간

3.2. 삶의 질 정책 우수사례집 발간

3.1. 이슈리포트 발간

❖ 개요

- 이슈리포트는 농어촌 삶의 현장에서 야기되는 이슈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홍보하는 창구 역할을 수행함. 이를 통해 삶의 질 정책 방향 및 관련 연구의 주제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농어촌 삶의 질과 관련된 주요 주제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취합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시하며, 이슈리포트에서는 주요 현안에 대한 쟁점 사항을 도출함.
- 또한 정책의 차별적 영향을 보다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현장 주체(현장모니터링단) 등의 의견을 체계적으로 수렴하여 삶의 질 정책 개선 및 발굴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음.
 - 부수적으로는 농어촌 인 지적 관점에서 삶의 질 향상 정책의 관심을 다양한 사람들에게 확산하는 계기를 제공하고자 함.
- 사안의 중요도에 따라 해당 삶의 질 정책에 대한 공동 연구 주제를 발굴하여 관련 연구자와 심층 연구를 수행함.
- 발간된 이슈리포트는 농림부 공무원, 시·군 삶의 질 담당부서 혹은 기획실, 삶의 질 정책지원네트워크(국책연구기관 및 시도연구원), 농촌 주민으로 구성된 통신원과 리포터 등에게 배포되고 있음.
- 현재까지 이슈리포트는 총 4호까지 출간됨.
 - 이슈리포트 1호는 “2015년 7월 주거급여 개편 시행, 앞으로의 과제는?”이라는 제목으로 총 3편의 글을 실음.
 - 이슈리포트 2호는 “지방교육재정 개혁, 농촌학교에 미치는 영향과 향후 과제는?”이라는 제목으로 총 3편의 글을 실음.
 - 이슈리포트 3호는 “농촌 일자리 지원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은?”이라는 제목으로 총 3편의 글을 실음.



- 이슈리포트 4호는 “농촌 보육여건 개선사업 그 효과와 향후 과제는?” 이라는 제목으로 총 1편의 글을 실음.

이슈리포트 2015. 09. 제1호

2015년 7월
주거급여 개편 시행,
앞으로 과제는?

농어촌 삶의 질
이슈 리포트
ISSUE REPORT

개편된 주거급여제도는 이렇습니다

전문가 기고

「주거급여제도」 개편 시행과 농촌주거정책의 대응 방안 최병숙 전북대학교 교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방식 개편에 따른 농어촌 자활사업의 대응방안 임태영 경일대학교 교수

현장의 소리

주거급여 개편에 따른 주거복지사업의 전달체계 변화 오재현 유원회사 인계하우징 대표

해외 선진국의 주거급여 개념에 대해 알아보시다

KREI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삶의 질 정책 연구센터

이슈리포트 2015. 11. 제2호

지방교육재정 개혁,
농촌학교에 미치는
영향과 향후 과제는?

농어촌 삶의 질
이슈 리포트
ISSUE REPORT

전문가 기고

지방교육재정 개혁과 농어촌교육의 대응 방안 최준필 한국대학평가원 원장
학교 통폐합 정책, 이대로 좋은가 장병안 광주대학교 교수

현장의 소리

현장교사가 바라보는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에 대한 단상 박한정 충남서천초등학교 연구부장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KREI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삶의 질 정책 연구센터

❖ 주요 추진 내용

□ 이슈리포트 1호 (주거급여 개편)

- (제목) 2015년 7월 주거급여 개편 시행 앞으로 과제는?
- (구성) 이슈관련 자료: 개편된 주거급여제도는 이렇습니다.
 - 전문가 기고: 주거급여제도 개편 시행과 농촌주거정책의 대응 방안(최병숙 전북대학교 교수)
 - 전문가 기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방식 개편에 따른 농어촌 자활

사업의 대응방안(엄태영 경일대학교 교수)

- 현장의 소리: 주거급여 개편에 따른 주거복지사업의 전달체계 변화(오재현 유한회사 인제하우징 대표)
- 이슈 관련 자료: 해외 선진국의 주거급여 개념에 대해 알아보시다.

- (이슈) 2015년 7월1일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에 통합급여로 제공되던 방식에서 상대적 소득수준에 따라 차별화된 급여(생계, 주거, 의료, 교육)를 제공하는 ‘맞춤형 개별 급여’로 전환됨. 이에 따라 수급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또한 생계급여와 함께 현금으로 지원되던 주거급여가 주거 형태(임대/자가)에 따라 현금과 현물로 구분되고, 담당 부처가 보건복지부에서 국토교통부로 주관부처가 변경됨. 이러한 정책 환경 변화가 농어촌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
- (내용) 본 호에는 전문가 기고 두 편과 현장의 소리 한 편, 총 세 편의 원고가 실림.
 - “주거급여제도 개편 시행과 농촌 주거정책의 대응 방향”에서는 정부의 주거정책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현 시점에서 농촌 주거 관련 정책과 사업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그 방향을 탐색함.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방식 개편에 따른 농어촌 자활사업의 대응 방안”에서는 통합급여 방식에서 개별급여로 전환되면서 자활사업 참여자의 변동이 생길 것으로 예상됨. 농어촌지역 자활사업이 어떠한 방식으로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 살펴봄.
 - “주거급여 개편에 따른 주거복지사업의 전달체계 변화”는 보건복지부 산하에서 ‘주거현물급여 집수리사업’을 수행해 온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이 주거급여가 국토교통부로 이관되면서 ‘수선유지급여 개보수공사’의 대·중·경보수 공사 중 경보수만 자활단체에 위탁하여 사업을 진행하게 됨. 이러한 전달체계 변화가 농어촌지역 자활단체뿐만 아니라 주거복지 사업에 미칠 영향을 살펴봄.
 - 개편된 주거급여제도를 소개하고, 해외 선진국의 주거급여 개념을 살펴보는 지면을 별도로 마련함.



□ 이슈리포트 2호 (지방교육재정)

- (제목) 지방교육재정 개혁, 농촌학교에 미치는 영향과 향후 과제는?
- (구성)
 - 전문가 기고: 지방교육재정 개혁과 농어촌교육의 대응 방향(최춘렬 한 국대학평가원 원장)
 - 전문가 기고: 학교 통폐합 정책, 이대로 좋은가(양병찬 공주대학교 교수)
 - 현장의 소리: 현장교사가 바라보는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에 대한 단 상(박현정 충남서면초등학교 연구부장)
 - 이슈 관련 자료: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 (이슈) 이슈리포트 제2호에서는 지방교육재정 효율화에 대한 문제를 다룸.
 - 교육부에서는 지난 2015년 7월 ‘전국 시도교육청에 지원하는 교부금 산 정 시, 학교 수보다 학생 수에 대한 산정 비율을 높이고, 학교 통폐합 시 지원하는 보조금을 대폭 확대한다’ 는 내용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법」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고, 국무회의를 거쳐 지 난 10월 공포함.
 - 개정안의 취지는 교육 성취도가 떨어지는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하여 적 정 규모의 학교를 육성하고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통해 재정지출을 줄 이고자 하는 것임. 하지만 지방교육재정 개혁은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하 는 등의 단순 방식으로, 지역 여건 및 특수성을 철저히 배제하고 있다는 반대의 의견도 대두되고 있는 실정임.
- (내용) 본 호에는 지방교육재정 개혁안에 대한 전문가 기고 두 편과 현장의 소리 한 편 등 총 세 편을 실음.
 - “지방교육재정 개혁과 농어촌교육의 대응 방향”에서는 지방교육재정 개혁이 농어촌학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대응 방안을 모색함.
 - “학교 통폐합 정책, 이대로 좋은가”에서는 농촌교육의 문제를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면서, 이러한 관점에서의 농촌학교 통폐합 문제를 살펴봄.

- “현장교사가 바라보는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에 대한 단상”에서는 농어촌지역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개선 방안을 제안함.
-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에 대해 소개하는 지면도 별도로 마련함.

□ 이슈리포트 3호 (일자리)

- (제목) 농촌 일자리 지원사업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은?
- (구성) 이슈 관련 자료: 농촌 일자리 지원 사업이란?
 - 전문가 기고: 농촌 일자리 지원 사업에 대한 재인식과 지원 개선 방향(엄창옥 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
 - 현장의 소리: 농산업 일자리지원센터 사업의 초기 성과와 과제(조용상 담양군청 계장)
 - 현장의 소리: 흥성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발전 방향 모색(이오균 흥성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 (이슈) 이슈리포트 제3호에서는 농촌의 일자리 지원 사업에 대한 문제를 다룸.
 - 농촌지역은 도시지역과 차별화된 경제적·지리적·사회적 특성들로 인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들 역시 이러한 농촌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야만 정책의 성과를 얻을 수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최근 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역 일자리 센터 사업들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음.
 - 지역 연계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여러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일자리센터 사업은 지역 간 순환체계 구축을 통해 농업·농촌 고용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 대부분의 사업들은 도·농 연계형으로 운영되는데, 담양·곡성·구례와 같이 농촌지역 간 연계를 통해 농산업 부문의 일자리 순환 센터 사업을 추진하는 사례가 있음.



- 이러한 사업들이 농업·농촌 고용문제의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써 어떠한 기능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운영과 관련한 개선과제는 무엇인지 살펴봄.

○ (내용) 본 호에서는 농촌 일자리 지원 사업에 대한 전문가 기고 한 편과 현장의 소리 두 편 등 총 세 편의 글을 실었음.

- “농촌 일자리 지원 사업에 대한 재인식과 지원 개선 방향”에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농촌 일자리 지원 사업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그 개선 방향에 대해 논함.
- “농산업 일자리지원센터 사업의 초기 성과와 과제”에서는 담양군의 농산업 일자리지원센터의 운영 현황과 그 개선점을 살펴봄.
- “홍성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의 발전 방향 모색”에서는 홍성군에서 운영되고 있는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의 역할과 과제에 대해 살펴봄.

□ 이슈리포트 4호 (영유아보육)

○ (제목) 농촌 보육여건 개선사업, 그 효과와 향후 과제는?

○ (구성) 이슈 관련 자료: 농촌 보육여건 개선사업이란?

- 전문가 기고: 농촌지역 영유아 보육의 실태와 과제(김은설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 (이슈) 농촌 영유아 보육에 대한 문제를 다룸.

- 농촌의 고령화와 인구감소는 영유아 수의 감소로 이어졌고, 이에 따라 농촌의 영유아 보육과 관련한 복지정책은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위축되는 결과를 가져옴.
-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2012년부터 농촌 영유아의 보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전국 농촌 국공립 어린이집의 확대’,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의 확충’, ‘주말 아이돌봄 확대’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제4차(’16~’20)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에서도 모성 보호 및

- 복지서비스 강화의 일환으로 보육여건 개선을 주요 추진 과제로 선정함.
- 하지만 여전히 농촌의 다문화 가정 및 조손가족의 증가에 따른 보육수요의 다양화, 시설 접근성의 문제, 교육 질적 수준의 저하 등 농촌 영유아 보육과 관련하여 산적해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심층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농촌의 영유아 보육 환경의 개선은 앞으로 농촌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라는 점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함.
- (내용) 본 호에는 농촌 보육여건 개선사업에 대한 설명글 한 편과 농어촌 영유아 보육 문제에 대한 전문가 기고 한 편을 실었음.
- “농촌 보육여건 개선사업이란?”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촌 보육여건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농촌 아이돌봄센터 지원’,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 ‘농번기 주말돌봄방 지원’등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을 살펴봄.
 - “농촌지역 영유아 보육의 실태와 과제”에서는 당면해 있는 농촌 영유아 보육의 다양한 문제점들을 짚어보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였음.

3.2. 삶의 질 정책 우수사례집 발간

❖ 개요

- **(배경)** 농어촌 보건·복지, 교육, 문화 등 생활 여건의 통합적 개선을 위해 범부처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아직까지 삶의 질 정책에 대한 홍보, 현장과의 소통이 부족
 - 농어촌 삶의 질 향상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범부처적 지원 노력 강화와 농어촌 주민·국민의 긍정적 인식 확산 유도
- **(대상 정책)** 농어촌 삶의 질 향상 정책 우수 사례
 - 중앙행정기관(18개 부·청), 지방자치단체(14개 시·도) 정책
- **(홍보 방안)** 농어촌 삶의 질 향상 정책 우수사례집 발간·배포
 - 7대 분야별로 농어촌 주민의 체감도가 높은 2~3개의 우수사례를 선정하여 스토리텔링 (보건·복지, 교육 여건, 정주생활기반, 경제활동·일자리, 문화·여가, 환경·경관, 안전)
 - 기획력 높은 기획사를 선정(수의계약), 사진, 그래픽 등을 활용하여 독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작성
 - 우수사례집은 중앙부처, 지자체, 유관기관에 배포하여 삶의 질 향상 정책 홍보
- **(선정 방법)**
 - 우수사례는 '14년도 주요 정책 중 각 부처, 지방자치단체, 삶의 질 정책 지원 네트워크에서 추천을 받아 선정
 - 추천받은 사례들은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선정
 - 심사위원회 구성(6인): 정부위원(3인), 외부위원(3인)
 - 심사 방법: 심사위원은 각 기관에서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여 서면평가 실시, 심사위원 평균 점수 기준으로 선정

- 평가 기준 : 농어촌 주민의 체감도 높은 정책을 선발하되, 농어촌 맞춤형·특화 정책, 협업과제, 주민참여형 정책에 가점 부여

❖ 주요 추진 내용

□ 농어촌 삶의 질 향상 우수 사례 선정

분야	우수사례	소관부처
보건·복지	취약지 응급의료 원격협진 네트워크 구축	보건복지부
	농지연금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고령자 맞춤형 공동시설 조성	농림축산식품부
교육	ICT를 활용한 농산어촌 교육여건 개선	교육부
	농어촌 맞춤형 교육프로그램(김제토요학교)	지방자치단체
생활권기반 구축	농어촌지역 광대역가입자망 구축 활성화 사업	미래창조과학부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	산업통상자원부
	농촌형 교통모델 발굴 사업	농림축산식품부
경제활동· 일자리	농어촌 체험 마을 및 관광	해양수산부
	충남형 6차 산업화 두레기업 육성사업	농식품부/충청남도
	SMART 두레	고용노동부/경상북도
문화·여가	작은 영화관 건립	문화체육관광부
환경·경관	주민주도형 도랑 살리기	환경부/충청남도
	국가농업유산 지정 및 유산자원 활용사업 추진	농림축산식품부
안전	농업정책보험	농림축산식품부



□ 농어촌 삶의 질 향상 우수 사례집 발간

농어촌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전문지원기관 연차보고서

발간등록번호
11-1543000-001090-01

행복한 농어촌

따뜻한 정책을 말한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정책 우수사례집

“

우수사례집

관련 부처·지자체에는
삶의 질 향상계획의
방향과 과제를 재확인하고
앞으로의 역할과 책임을
점검·분발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농어촌 주민과 국민에게는
우리 농어업·농어촌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확산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촌 할머니들이 진행하는 체험 교실 '김제 토요일마을학교'

전라북도 김제시에서 한 작은 마을, 이 마을은 해동 유목마을이다. 여인들이들의 재능은 소리로 활짝이 넘는다. 김제시 한네 초등학생들이 체험교실을 하기 위해 농가를 찾게 되었다. 체험교실을 진행하는 선생님은 백발이 성성한 할머니 주부 할머니들이다. 교실의 문을 여는사람이 여인들이들을 지도하면서 보람을 느끼고, 보람도 함께 주는 김제 토요일마을학교의 현장에 다녀와 보았다.

김제시농업기술센터
김제시농업인회

- ▶ 김제시농업기술센터
- ▶ 김제시농업인회
- ▶ 김제시농업기술센터
- ▶ 김제시농업인회

소셜
지역

김제시/김제시농업인회

2015년
14차(농촌중심, 1차)연차보고서

농어촌
공정개발 추진 4차, 4차 2015

포퓰러 일하는 마을에 여자들이 찾아오는 이유

늦은 가을에서 수확수확 내(전년 11월)의 영농보조금 지원, 추수나타
과외 국장까지도 운영한 김제시농업인회 중심의 김제시 한
농촌마을을 찾았다. 2015년 농촌진흥청이 선정한 '농촌진흥청
마을'로도 선정이 될까 여운이 어는 공적개발, 호박을 노린
소위 '전통'으로 일하며 김제시에서 일하고 있다.
김제시농업인회에서는 '해동 유목마을' 관공 주유리로 학생이 참여하는
체험교실 '김제 토요일마을학교'를 진행한다. 학생은 보조금이다
다른 학교의 친구들과 함께 김제에서 농가들 손에서 직접
생각있는 체험활동을 한다고 했다.

농어촌진흥공사 농어촌마을공동체사업(농어촌마을) 주소: 서울

특기 사업 **농어촌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김치토요마을학교**

정책 개요 지역 인구유출로 인한 고령화 사회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주류 연령 인구를 교육활동에 참여시켜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함
 - 경제고령세대의 건강한 삶을 위하여 저학력자를 위한 맞춤형 수업을 개발함

정책 내용 마을과 함께하는 토요 학교교육(마을) 프로그램 개발 및 개발사업 운영 지원
 - 지역 특성을 활용한 마을교과 및 특산물 만들기, 생채널, 마을 투어 체험 등 지역의 특색을 살린 마을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 교육프로그램, 정서지원(농어촌)센터, 김치교육과대학의 운영지원
 - 토요마을학교 인건비 지원 및 인건비 지원
 - 토요마을학교 운영 프로그램 개발 지원 및 체험활동 지원
 - 토요마을학교 교사, 체재비 운영비 지원

주요 성과 1년 개발된 총 2건의 프로그램을 7개 지역에서 사업운영
 - 1건의 학생들과 1천 500명의 인지도가 높아 130여건의 학교별 7개 마을에서 19개 프로그램으로 확대 운영
 - 참여학생수 : 사업운영 60명(7개 지역) - 1년 운영 300명(7개 지역)

지역명	소요예산	실용금액	지원기간
전라	11,400	330명(7개 지역) 4명	12월 15일(7월)~12월 15일
충청	11,400	330명(7개 지역) 4명	12월 15일(7월)~12월 15일
전남	11,400	330명(7개 지역) 4명	12월 15일(7월)~12월 15일
합계	34,200	990명(21명) 12명	

최소한 김치교육과대학(농어촌)을 운영한다

마을명	주소	주최	주요내용	시기
남동마을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예산 1리	농어촌진흥공사	김치교육과대학	12월 15일
수북마을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예산 2리	농어촌진흥공사	김치교육과대학	12월 15일
동산마을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예산 3리	농어촌진흥공사	김치교육과대학	12월 15일
대성마을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예산 4리	농어촌진흥공사	김치교육과대학	12월 15일
대성마을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예산 5리	농어촌진흥공사	김치교육과대학	12월 15일
대성마을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예산 6리	농어촌진흥공사	김치교육과대학	12월 15일
대성마을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예산 7리	농어촌진흥공사	김치교육과대학	12월 15일
대성마을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예산 8리	농어촌진흥공사	김치교육과대학	12월 15일
대성마을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예산 9리	농어촌진흥공사	김치교육과대학	12월 15일
대성마을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예산 10리	농어촌진흥공사	김치교육과대학	12월 15일

주요 성과 1년 개발된 총 2건의 프로그램을 7개 지역에서 사업운영
 - 1건의 학생들과 1천 500명의 인지도가 높아 130여건의 학교별 7개 마을에서 19개 프로그램으로 확대 운영
 - 참여학생수 : 사업운영 60명(7개 지역) - 1년 운영 300명(7개 지역)

주요 성과 1년 개발된 총 2건의 프로그램을 7개 지역에서 사업운영
 - 1건의 학생들과 1천 500명의 인지도가 높아 130여건의 학교별 7개 마을에서 19개 프로그램으로 확대 운영
 - 참여학생수 : 사업운영 60명(7개 지역) - 1년 운영 300명(7개 지역)

농어촌마을공동체사업(농어촌마을) 주소: 서울

특기 사업 **농촌마을에서도 이제 빠르고 스마트한 인터넷! '광대역가입자망 구축'**

전국에도 한우촌 등 전국에 걸쳐 2004년 초부터 '정보의 사막지대'로 선정되는 등 국내 농촌 정보화 부활에 한걸음 더 나아가 이 마을은 최근 광대역가입자망을 구축하면서 마을 주민의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켰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문화의 창고로 주목받고 있는 마을로 급부상하고 있다. 구미지역은, 농촌마을에는 어떠한 변화도 없었는지 모르겠다.

주요 성과 1년 개발된 총 2건의 프로그램을 7개 지역에서 사업운영
 - 1건의 학생들과 1천 500명의 인지도가 높아 130여건의 학교별 7개 마을에서 19개 프로그램으로 확대 운영
 - 참여학생수 : 사업운영 60명(7개 지역) - 1년 운영 300명(7개 지역)

농어촌마을공동체사업(농어촌마을) 주소: 서울

특기 사업 **농어촌지역 광대역가입자망 구축 활성화 사업**

정책 개요 도 농어촌마을공동체사업(농어촌마을)을 통해 전국 소규모 농어촌마을에 FTTH를 광대역서비스가 가능한 광대역가입자망 구축
 - 광대역서비스를 통해 농어촌마을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증진시키고, 다양한 생활문화서비스가 가능한 100% 광대역가입자망 구축 지원

정책 내용 전국 17개 시·군·구(충청남도 10개, 충청북도 7개)에 걸쳐 농어촌마을공동체사업(농어촌마을)을 통해 전국 소규모 농어촌마을에 FTTH를 광대역서비스가 가능한 광대역가입자망 구축 지원
 - 광대역서비스를 통해 농어촌마을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증진시키고, 다양한 생활문화서비스가 가능한 100% 광대역가입자망 구축 지원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사업비(국고)	30	30	34.30	34.30	58	68.1
총사업비	30	30	35	35	58	68.1

17개 시·군·구(충청남도 10개, 충청북도 7개)에 걸쳐 농어촌마을공동체사업(농어촌마을)을 통해 전국 소규모 농어촌마을에 FTTH를 광대역서비스가 가능한 광대역가입자망 구축 지원

주요 성과 1년 개발된 총 2건의 프로그램을 7개 지역에서 사업운영
 - 1건의 학생들과 1천 500명의 인지도가 높아 130여건의 학교별 7개 마을에서 19개 프로그램으로 확대 운영
 - 참여학생수 : 사업운영 60명(7개 지역) - 1년 운영 300명(7개 지역)



4. 정책 토론회, 컨퍼런스 개최

4.1. 삶의 질 향상 정책 컨퍼런스 개최

4.1. 농어촌 삶의 질 향상 정책 대토론회 개최

4.3. 전문가 정책세미나 개최

4.4. OECD 국제 컨퍼런스 참석 및 현장 시찰

4.1. 삶의 질 향상 정책 컨퍼런스 개최

❖ 개요

- 일시: 2015. 7. 21. (화) 15:00 ~18:30
- 장소: 서울 aT센터 그랜드홀
- 주제: 협업과 현장 공감으로 행복한 농어촌 구현
- 발표 내용:
 - 1) 협업을 통한 주민 보건·복지 서비스 확충
 - 2) 농촌 활성화를 위한 주민의 지역 문화 참여 확대
 - 3) 귀농귀촌인의 지역사회 활동과 농어촌 삶의 질 향상: 고창군 귀농귀촌협의회 사례
 - 4) 지자체의 삶의 질 향상 정책 지원 경험과 과제: 충남 사례
- 참석 인원: 200명



농어촌 삶의 질 향상 정책 컨퍼런스	
프로그램 PROGRAM	
13:00-14:30	시간행사 : 삶의 질 정책 현장체험과 출판식 * 현장서예인 및 정책연구소에 의한 출판 행사 * 삶의 질 향상 정책 설명 * 분야별 현장서예인 및 정책연구소에 의한 활동 방향 토론
14:30-15:00	컨퍼런스 등록 * 1부 : 개회식 및 연구기관 공동업무협약서
15:00-15:30	* 개회식 및 공동업무협약서 * 개회식 : 최재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 협찬식 : 정책연구소장과 중앙 연구기관장 협찬서 사명 * 기념사 : 이철용 농림축산식품부장관
15:30-15:40	Break Time * 2부 : 주제발표
15:40-17:00	* 기조 발제 * 제2기 삶의 질 향상 정책의 역할 방향과 과제 * 서울대학교 조홍익 교수님 삶의 질 향상정책의 위한 * 주민 생활 삶의 질 정책 방향 설정 * 협업을 통한 주민 보건·복지서비스 확충 * "민간인사이드"의 고향사랑 비서 * 농촌 활성화를 위한 주민의 지역 문화 참여 확대 * "민간인사이드"의 고향사랑 비서 * 사회적 일자리와 연계한 주민 차용적인 삶의 질 서비스 제공 사례 * 고창군 귀농·귀촌인의 생활 현장 * 지자체의 삶의 질 향상 정책 지원 경험과 과제: 충남 사례 * 충남연구원 출판예 비서
17:00-17:10	Break Time * 3부 : 종합토론
17:10-18:30	* 종합토론 * 좌장 : 이철용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정책기획처) 위원 * 토론 주제 : 협업과 현장 공감으로 행복한 농어촌 주민 삶의 질 제고 방안 * 토론자(기차순) * 장승주 국립전라북도 농촌·산촌발전국장 * 김병태 귀농농촌혁신사업단장 * 변재홍 최장(FCI) 리더 중앙회 * 송이현 부민정(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이기영 교수(경남대학교) * 이주상 대표(삼산해물대) * 장영진 기자(중앙신문)
	* 발표 질의 * 폐회 및 만찬



❖ 주요 내용

- 전문가, 현장 활동가, 정책 담당자를 초청하여 주민 체감형 삶의 질 과제 발굴 논의
- 국책연구원, 시도 연구원과의 공동업무협약 체결
- 현장자문단 및 정책모니터링단 출범

□ 주요 토론 내용

- 삶의 질 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고 통합적 조직을 만들도록 노력
 - 삶의 질 지수 기준에 충족하는 농촌사회를 만들기 위한 농림축산식품부의 노력에 대해 타 부처에서 단순히 기존 업무의 연장으로 보는 경향이 있음.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촌 지역의 복지와 안보 등에 관련된 구체적인 갈등에 개입하여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보여주어야 함.
 - 중앙정부에서는 농촌 관련 데이터를 축적, 방향성을 제시하고 좋은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야 함.
 - 부처 간 협업,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협업, 도와 시·군 간의 협업, 주민 간의 협업, 생산현장 간의 협업을 강조
- 삶의 질 개선 정책의 효과를 높이는 데 있어,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자본 투입 위주의 정책은 한계가 있으며 지방의 역할이 중요
 -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권한 이양이 필요
 - 중앙정부에서 제공한 자료와 정보를 충분히 활용하여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삶의 질과 관련하여 명확한 목표를 설정해야 함.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빈부 격차, 다문화가정의 문제, 귀농·귀촌인과 주민들의 갈등문제 등 실질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다양한 연구를 진행해야 함.

□ 분야별 토론 내용

<보건복지안전>

-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
 - 이동에 제약이 많은 고령인구 비중이 높고, 이동성·접근성이 취약하며, 서비스 제공 주체가 담당하는 지역의 범위가 넓은 농촌의 특성으로 인해 서비스 제공 등에 애로사항이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 필요
 - 고령인구의 사회복지 수요를 파악하고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서비스의 발굴이나 기존 서비스의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가 현장자문단의 주요 임무가 되어야 함.

<교육>

- 농촌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 모색
 - 학교 통폐합, 교사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교육 인프라 및 프로그램의 질적 저하 문제가 개선되지 못함. 이는 기존 인구의 유출과 귀농·귀촌으로 인한 신규 인구 유입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
 - 도시 학생들과의 교육 서비스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교육 분야의 목표
- 농업과 농촌의 다양한 가치를 함양하기 위한 교육 필요
 - 도시로의 인구 유출을 억제하고, 귀농·귀촌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현재 진로탐색 교육에서 소외되어 있는 농업·농촌 직업군과 관련한 진로 교육이 필요
 - 교육과정에서 농업·농촌의 경관, 전통문화 등의 가치를 다루어야 함.

<문화여가>

- 지역 주민들의 문화 수요를 충족시켜주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 운영
 - 작은 도서관, 영화관 등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문화·여가 인프라를 확장하고 기존 거점시설의 활용도 및 주민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 모색

- 농업·농촌은 문화·예술 창조공간으로서 가치를 지니며 이를 바탕으로 농촌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전략 마련 필요함.
 - 문화·예술인의 귀농·귀촌 등 다양한 창조계층들이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여 지역의 문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방안 필요

<경제활동일자리>

- 현재 추진 중인 6차산업화 정책·사업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 필요
 - 농업 생산뿐만 아니라 농업·농촌 관련 신규 일자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가공·서비스 부문의 육성이 필요한데, 현장에서는 다양한 문제점들이 발생하며 이에 대한 의견 수렴 필요
 - 6차산업화와 관련한 선진 사례들을 참고하면서, 도·농 간 산업의 순환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 필요
- 농업·농촌 현장과 맞지 않는 규제 개혁을 위한 논의 필요
 - 다양한 규제들이 농업·농촌 기반의 새로운 생산 활동을 방해하는 걸림돌로 작용하며 규제의 취지를 해하지 않으면서 생산 활동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 농촌마을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는 마을 공동의 소득을 증가시키는 방법이 필요
 - 공동 소득 창출은 민주적 의사결정, 소득 사업에서 나오는 소득에 대한 투명하고 공평한 분배,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가 근간이 되어야 함.

<경관·정주환경>

- 농촌 교통 인프라 개선을 위한 노력 필요
 - 노인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시스템의 개선을 위한 혁신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사업화하는 것이 필요

- 귀농·귀촌 집단에 대한 사전·사후 관리를 위한 지원 방안 필요
 - 청년 등 새로운 집단들이 귀농·귀촌에 대한 의지는 있으나 현실적으로 따를 수 있는 매뉴얼, 시스템이 부재하며, 이에 대한 대안 마련이 필요

□ 행사 사진





4.2. 농어촌 삶의 질 향상 정책 대토론회 개최

❖ 개요

- 일 시: 2015. 12. 29. (화) 13:30 ~ 18:00
- 장 소: 정부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 및 소연회장
- 주 제: 현장의 협업과 주민 참여에서 찾는 농촌 삶의 질 향상의 해법 (삶의 질 3기 계획 1년차 성과 그리고 남은 4년의 과제)
- 발표 내용:
 - 1) 농어촌의 삶의 질, 우리가 서 있는 자리 그리고 목표 지점은?
 - 2) 주민 참여를 통한 지역사회 문제의 해법 찾기: 주민 자율적 환경 정비를 매개로 한 농촌 마을 만들기
 - 3) 현장의 협업으로 주민 삶의 질 개선의 창의적 대안을 찾는다.
 - 4) 삶의 질 계획 부문별 심층연구 7개 분야 결과 발표
- 참석 인원: 180명

Detailed Programs (제2부 부문별 정책토론) 16:15~18:00

1세선 복지·교육·문화 부문 - 소연회장 2

주제 농어촌 청년인턴 서비스 실행의 개선 방안 - 농촌의 박사후박사(박사후박사) 지원 방안
농어촌 특성을 반영한 공공육아 확충 방안 - 영유아 박사후박사(박사후박사) 지원 방안
농어촌 문화 향유 기회 확대 - 박사후박사(박사후박사) 지원 방안

발표 : 김진수 교수(연세대학교)

지원해석자 : 박사후박사(박사후박사) 지원 방안(박사후박사) 지원 방안
토론 : 김진수 교수(연세대학교) / 박정민 박사(한국농촌경제연구원)
현장 : 김진수 교수(연세대학교) / 박정민 박사(한국농촌경제연구원)

2세선 경제활동·일자리 부문 - 소연회장 3

주제 도농 지역간 소득격차 해소 방안 - 농촌의 박사후박사(박사후박사) 지원 방안
농어촌 여성의 자립을 위한 지원 방안 - 농촌의 박사후박사(박사후박사) 지원 방안
농어촌 청년인턴 지원 방안 - 농촌의 박사후박사(박사후박사) 지원 방안

발표 : 김진수 교수(연세대학교)

지원해석자 : 김진수 교수(연세대학교) / 박정민 박사(한국농촌경제연구원)
토론 : 김진수 교수(연세대학교) / 박정민 박사(한국농촌경제연구원)
현장 : 김진수 교수(연세대학교) / 박정민 박사(한국농촌경제연구원)

3세선 환경·안전 부문 - 소연회장 4

주제 주민참여를 통한 농촌 자연자원 관리 방안 - 농촌의 박사후박사(박사후박사) 지원 방안
농어촌 자연재해 위험도 평가 방안 - 농촌의 박사후박사(박사후박사) 지원 방안

발표 : 김진수 교수(연세대학교)

지원해석자 : 김진수 교수(연세대학교) / 박정민 박사(한국농촌경제연구원)
토론 : 김진수 교수(연세대학교) / 박정민 박사(한국농촌경제연구원)
현장 : 김진수 교수(연세대학교) / 박정민 박사(한국농촌경제연구원)

Map (오시는 길)

오시는 길

대중교통
 KTX 오송역 : 580미터 / 발간 - 정부세종청사(세종) 청문장 하차 - 도보 2분
 무궁화 3호선역 : 500미터 / 발간 - 문화체육관광부 청문장 및 국립세종도서관 하차

서울에서 자가용 이용 시
 경부 및 중앙고속도로 ▶ 천안IC ▶ 천안신안고속도로 ▶ 정안IC(주유소인) ▶ 정안동(세종) ▶ 정부세종청사 발발 ▶ 정부세종컨벤션센터(구 행정지원센터)

연세 및 문화
 프로그림 역사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041-520-2249
 행사장 안내 : 정부세종컨벤션센터 044-330-1472

농어촌 삶의 질 향상 정책 대토론회

현장의 협업과 주민 참여에서 찾는 농촌 삶의 질 향상의 해법
 : 삶의 질 3기 계획 1년차 성과 그리고 남은 4년의 과제

일시 | 2015년 12월 29일(화) 13:30 ~ 18:00
장소 | 정부세종컨벤션센터 4층 국제회의장 및 소연회장
주최 | 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주요 내용

- 전문가, 현장 활동가, 지역 리더를 초청하여 3기 삶의 질 계획의 1년차 성과와 남은 4년의 과제 논의
- 각 부문별(보건·복지·문화, 경제활동·일자리, 안전·환경) 심층연구 결과 발표 및 정책 토론 진행

▣ 주요 토론 내용

- 삶의 질 계획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개선이 다방면으로 필요
 - 타 부처들이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연계해서 협업 형태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삶의 질 향상 위원회가 적극적인 역할과 강화된 기능을 가질 필요가 있으며, 정부 내에서의 협업의 거버넌스를 분명히 확립하고, 각 부처의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을 긴밀히 평가해야 함.
 -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생활권 단위에서의 삶의 질 개선사업이 중요함. 확대된 단위에서도 개선사업이 발굴되고 추진되어야 하며 국민들에게 소소한 행복을 줄 수 있는 사업들도 많이 다루어야 함.
 - 지자체에서 업무 추진 시 과 단위의 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각 영역별 협업에 관심을 가지고 한정된 자원을 지역 내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협업이 잘 되는 지자체를 격려할 수 있는 제도적 틀, 인센티브를 만드는 것도 3기 삶의 질 기본계획에서 고려해야 함.
 - 하드웨어적인 측면보다 가지고 있는 기존 자원을 활용하고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삶의 질을 높여나가려는 고민이 필요함.
- 수요 맞춤형 형태로 농어촌지역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
 - 조사나 분석을 통해 실질적으로 지역, 마을 단위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을 찾아내기 어려우므로 지역 주민, NGO들이 부처에 사업을 제안하는 역제안 제도가 활성화되어야 함.
 - 획일화되고 정형화된 정책보다는 지역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정책추



진체계가 필요

- 공공시스템을 통해서 공급하기 어려운 섬세한 사회적 서비스는 협동조합 형태, 마을 조합 형태, 마을 공동체 형태로 만들어져야 함.

○ 삶의 질과 관련된 객관적 지표에 대한 세밀한 조사와 분석이 필요

- 현재 농촌의 삶의 질 정도를 반영할 수 있는 주관적인 지표들을 추가하여 주관적·객관적 요소를 통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어야 함.

○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좋은 사례들이 있지만 노력에 비해 농촌에서 삶의 질이 향상된 부분에 대한 현장 체감도가 낮다는 의견도 있음.

□ 분야별 토론 내용

<복지·교육·문화 분야>

○ 지자체에서 직접적으로 교육 사업을 다루기에는 한계가 있음.

- 학교 운영 부분과 관련하여 교육청과 의견 차이가 많아 농촌 지역 학교에서 특화하여 제공하려는 프로그램들을 학교에서 운영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음.

○ 수요 맞춤형 사업이 필요

- 실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주민들의 수요와 일치하지 않는 사업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함. 이를 통해서 주민들의 사업 체감도가 높아질 수 있음.

○ 정신건강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필요

- 광활한 지역을 포함하는 농촌의 특성과 낯선 사람들에 대해 거리감을 두는 주민들의 인식에 적합하지 않은 사업들로 인하여 서비스가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없음.
- 정신건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고, 그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함. 농촌지역은 재정자립도가 낮아 정신건강에 투자하는 재정은 열악하며, 지속적인 사

업 수행에 한계가 있음.

- 농촌 주민들이 문화를 소비하는 사람이 아니고 문화를 생산하는 사람이라는 접근이 필요
 - 민간에서 이미 활동하고 있는 다양한 활동들을 발굴해서 스스로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촉진하거나 장려
 - 문화 사업을 수행할 인력이 부족하므로 어디서 인력을 끌어와 사업을 수행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농촌으로 유입되는 귀농·귀촌 인구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
- 문화 부분 접근성이 여전히 낮으며, 문화 서비스 활용에 대한 주민들과의 소통에 한계
 - 농어촌 주민의 여건과 농어촌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문화 서비스 전달체계에 관한 고민이 필요
 - 기존에 진행하고 있는 문화 서비스 사업에서 개선되어야 할 부분들이 도출되었을 때 탄력적으로 수정이 되고 이에 관한 정보가 주민들에게 전달되어 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함.

<경제활동·일자리 분야>

- 지역 내 핵심자원을 끌어내고 조직화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
 - 지역 내 핵심자원이 빈곤한 것이 아니라 있는 자원을 활용하는 역량이 부족한 것이 현실
 - 지역 간 연결보다 지역 내부에서 도시화된 지역과 농촌으로 남아 있는 지역의 관리와 교류를 통해 핵심자원 개발 역량 강화
- 농촌 내 서비스산업화를 위한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
 -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와 6차산업화에 필요한 자원들을 연결하는 연결점에 청년들을 활용하여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형태로 농촌 내 서비스산업화가 가능
- 여성 창업의 시사점과 함의에 대한 논의가 필요



- 여성 소규모 창업에서의 지역 협업, 업체의 네트워크화를 6차산업과 어떻게 연결하고 반영할 수 있을지 논의가 필요하며, 여성 창업 부문에서 품목이나 분야, 연령계층 등과 같은 특성 분석이 필요
- 현장에서 6차산업을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음.
 - 회사 운영을 위한 전문 인력을 유치하기 어려워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 6차산업을 통해 여러 업종을 융합하는 과정에서 각 업종마다 찾아가야 하는 행정부서가 다르고 인허가 자체가 까다로움.
 - 6차산업에 참여하는 주체들이 산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참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지원 업체 선정과 관리에 신경 써야 함.
- 6차산업 운영을 위한 사업 자금을 위한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
 - 기존 제조업 기반의 자금 조달 형태로는 한계가 있으며, 자금 출연보다는 투자 개념으로 자금을 운용할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
 - 유럽에서 특화되었던 양도담보(SLB), 클라우드 펀딩과 같은 새로운 펀딩 플랫폼을 통해 자금을 유치

<환경안전 분야>

- 농촌 마을 사업 시 환경·경관에서 출발해 이를 바탕으로 공동체 회복, 소득 증대를 이룰 수 있음.
- 환경·경관을 개선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참여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나 사업들과 연계되어야 함.
 - 포럼을 활성화하여 주민들이 참여해 공동체를 형성하고, 참여하는 기업의 과제 또는 자원을 함께 발굴해 마을의 발전 방안을 모색
 - 마을 신뢰도, 소속감 및 마을 활동이 높을수록 사업 참여도가 높음.
 - 마을 단위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어떤 사업을 원하는지 파악하고 원하는 사업과 정책을 맞춰 사업을 시행하되 사회경제적 부문, 기후 부문의 변화가 반영된 정책 방안을 제시해야 주민들의 참여도를 증가시킬 수 있음.

- 중간지원조직의 과잉현상으로 환경·경관 사업의 효과성이 떨어짐.
 - 중간지원조직을 농촌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종 사업에 두루 적용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포지셔닝 해주어야 하며 농어촌지역의 여러 사업들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효력성이 있음.
- 농촌지역의 재난관리는 구조적인 접근에 입각하여 공간상의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과 공간에서 주어진 자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함께 제시하고, 농촌지역의 자연재해 취약지역에 대한 유형별 조사 분석이 필요

□ 행사 사진





4.3. 전문가 정책세미나 개최

❖ 주요 내용

□ 제1차 농촌정책발전연구회

○ 회의 개요

- 일 시: 2015.09.15. 16:00 ~ 19:00
- 장 소: KREI 대전 관측상황실(지족동)
- 목 적: 농촌정책의 추진경과와 국내외 동향 등을 이해하고 관련 정보를 축적
- 주 제
 - OECD 농촌정책 체계와 동향
 - 삶의 질 측정 동향과 이슈
 - 향후 연구회 발전 방향
- 발제자 및 발제 제목
 - 박덕병 교수 “OECD 농촌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와 시사점”
 - 엄진영 박사 “최근 OECD 농촌정책 동향”
 - 심재현 박사 “삶의 질 관련 지수의 동향”

○ 참석자(13명)

농림축산 식품부	김정희 농촌정책과장, 정아름 서기관(농촌정책과), 정재원 사무관(경영인력과), 김정욱 사무관(지역개발과), 허동웅 사무관(복지여성과), 김정락 사무관(농촌산업과)
전문가	심재현 부연구위원, 엄진영 부연구위원, 정도채 부연구위원, 유은영 연구원(이상 KREI), 김정연 연구위원(충남발전연구원), 박덕병 교수(공주대), 박윤호 책임연구원(농어촌연구원)

○ OECD 회의에 대한 내용

- 10월 농식품부가 ‘OECD 농촌작업반’을 초청하여 농촌·농업 정책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심포지엄 개최
- ‘OECD 농촌작업반’ 관계자가 대한민국의 농촌정책이 짜임새 있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과, 한국의 ‘Rural paradigm’의 일관된 흐름을 인지하게 하는 것이 목표
- 한국의 농촌정책의 역동성과 적극성을 보여준 후, 외국 기관과 달리 지역개발, 산업, 보건, 교육 등 모든 분야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농식품부의 장점을 소개해 줄 필요
- 타국과 다른 한국 농촌정책의 여건 자체를 언급해 주는 것도 필요

○ OECD 및 EU의 농촌 개발에 관련한 내용

- 한국은 농촌정책과 농업정책이 분리되어 있는 경향이 크지만, EU는 농촌정책이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 농업정책이 존재
- 농식품부의 과제는 지역정책과 농업정책의 연결을 강화하는 것임. 농업정책과 연계를 통해 공간정책을 수립할 필요

○ 농촌정책의 영역 및 지역 구분에 관련한 내용

- 도시권 중심의 정책 수립에서 벗어나, 농촌의 정주생활권 측면에서 농촌정책을 돌아봐야 함. 농촌을 여분의 공간이 아닌, 자급적인 서비스체계를 가지고 있는 소생활권으로서의 강화가 필요
- 농촌의 다양성 증가로 학술적으로 농촌을 어떻게 구분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중요해짐. 공간자료의 데이터베이스화를 통해 농촌의 구분 및 그에 따른 농촌정책 결정의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

○ 향후 연구회 발전 방향에 대한 내용

- ‘농촌정책발전연구회’를 통해 농촌정책에서 나누어야 할 이슈들을 체크함과 동시에 농촌정책의 세계적 흐름 및 역사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농촌정책의 지향점 및 의제를 확인하고 주장의 근거를 만들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함.



□ 제2차 농촌정책발전연구회

○ 회의 개요

- 일 시: 2015.10.27. 16:00 ~ 18:00
- 장 소: KREI 대전 관측 상황실(지족동)
- 주 제: 농촌정책의 형성 과정과 특징을 이해하고 농촌지역의 구분에 대한 기준과 방향에 대해 논의
- 발제 제목
 - 성주인 연구위원 “우리나라 농촌정책의 형성 과정과 특징(농촌정주권 개발 및 마을개발을 중심으로)”
 - 심재현 부연구위원 “도시·농촌 그리고 농촌지역 구분에 대한 소고”

○ 참석자(16명)

농림축산 식품부	김정희 농촌정책과장, 정아름 서기관(농촌정책과), 정재원 사무관(경영인력과), 김정욱 사무관(지역개발과), 이상준 사무관(지역개발과), 김정락 사무관(농촌산업과)
전문가	송미령 부원장, 성주인 센터장, 심재현 부연구위원, 정도채 부연구위원, 류재현 위촉연구조원(이상 KREI) 윤원근 교수(협성대학교), 이민수 연구위원(전북연구원), 박덕병 교수(공주대학교), 이원호 교수(성신여자대학교), 박윤호 연구위원(농어촌연구원)

○ 농촌정책에 대한 내용

- 농촌정책의 이론적 바탕은 80년대 정주생활권 개발과 농촌지역 종합개발이라는 정책에 기반을 둬. 중심지와 연계된 정주 생활권 단위로 좀 더 종합적으로 바라보자는 논의의 바탕에 깔린 것이 ‘인간주의적 국토 인식’임.
- 앞으로 어떤 커뮤니티를 활성화한다고 했을 때, 전통적 마을에 기반을 해야 할지 또는 새로운 공간 단위를 생각해야 할지 등의 구분은 국가별로 마을과 커뮤니티 중 무엇에 포커스를 둘지에 따라 차이가 날 것임.

- 농촌정책에 의한 공간구조가 시기별로 다양하게 보이고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우리는 어떤 정책 공간단위를 찾아야 할지 이와 관련된 쟁점을 논의해 볼 필요가 있음.

○ 농촌정책의 지역 구분에 관련한 내용

- 현실적으로 농식품부의 정책 대상의 한계와 농촌에 대한 정의가 이론상으로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근원적인 정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농촌의 특성’을 정의 기준에 어떻게 반영하는가에 따라, 농촌과 도시를 세분화할 수 있음. 현재 미국과 영국에서는 이러한 세분화된 서비스 전달 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 하지만 농촌에는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함. OECD의 경우, 기준을 경제적인 활동과 토지 등으로 구성하지만 다른 기준과의 차이점 또한 연구함.
- 변수가 다양하게 반영되면 좋음. 하지만 다양하게 반영될수록 복잡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편성이 있는 지표를 설정해야 함.
- 분류 기준을 적용하는 공간단위는 단순한 행정단위인 읍·면 단위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격자베이스를 통해 세분하게 나누어야 할지를 정하여 분류해야 함. 공간단위를 어떻게 조작해야 하는가에 따라 공간이 완전히 달라지기에 우리나라의 지역 특성에 맞고 극대화 할 수 있는 기준을 채택, 분석해야 함.

□ 농어촌 복지 계획과 전망 추계 학술심포지엄

○ 회의 개요

- 일 시: 2015.11.6. 13:00 ~ 17: 30
- 장 소: 목포대학교 플라자 60 소강당
- 주 최: 한국농어촌복지연구회, 목포대학교 복지사회연구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주 제: 정부의 농어촌 복지 계획과 전망



- 주제 발표

- 조미형 연구위원 “제3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상의 농촌 복지”
- 김동진 연구위원 “농어촌 보건복지 기본계획 수립 현황과 방향”

○ 참석자(13명)

- 원내 : 조미형, 김하경, 박자경
- 원외 : 김동진(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영란 교수(목포대학교), 배충진 원장(사회복지법인 송암선교선교복지원), 정영이 사무처장(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김대성 박사(전남발전연구원), 최정민 교수(목포대학교), 진희경 교수(목포대학교), 박종규 실장(신안군청), 황송현 팀장(전남복지재단), 박소정 교수(동신대학교), 박철민 관장(진도 노인복지관), 김하영(목포대학교) 등 30여 명

○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상의 농촌 복지

- 농촌이라는 지역을 토대로 주거, 경제활동, 교육, 문화 등에 있어서 복지적 접근과 복지를 별도의 영역으로 접근하는 것은 차이가 있음.
- 복지부 농어촌 보건복지 기본계획은 별도의 영역으로서 복지에 대해서는 풍부하게 담아낼 수 있지만,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은 생활 전반적인 영역에 있어서 복지적 접근을 지향해야 함.
-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이 농식품부 계획이 아니라 관계부처 협동의 위원회 계획이라는 점에서 전 부문을 가로지르는 ‘삶의 질’이라는 키워드가 복지적 접근으로 구현되어야 함. 따라서 제4차 계획에서는 주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큰 보건·복지 부문을 보건·의료와 복지로 분리하고, 각 부문에 흩어져 있는 복지사업을 총괄할 필요가 있음.
- 농어업인에 특화된 복지는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지원, 농지연금, 경영이양직불제 등 소득 보장, 영세고령농이나 여성농업인 대상 사업 등이 해당되며, 농어촌 개발 관점에서 지역을 기반으로 제공되는, 복지부 서비스와는 다른, 농어촌지역에 특화된 사업들을 담아야 할 것
- 제3차 기본계획에서는 농어촌지역 특성을 반영한 보건의료 서비스 확

대의 일환으로 농어촌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사업 모델 개발/확산, 지역 맞춤형 정신보건센터 운영·설치, 농어업안전보건센터 등을 제시

- 이러한 사업 모델을 삶의 질 향상 정책으로 시범 운영하고, 사업의 효과가 검증되면 예산을 확보하여 본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단계적 접근이 필요할 것
- 삶의 질 계획은 별도의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 133개 과제에 투입되는 22.8조 원의 예산은 각 부처의 사업을 모아놓은 것에 불과함. 그럼에도 이 계획에 포함되면, 매년 보고와 평가 등이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각 부처에서는 실적을 내기 어려운 사업이 포함되는 것을 꺼림.
- 현 정부에서 중심을 두고 있는 부처 간 협업, 중앙 및 지방정부간의 협업 차원에서 진행될 수 있는 사업들은 삶의 질 기본계획 속에 담아서 ‘삶의 질 향상 위원회’에서 전달체계에 대한 사항을 보고 받고 평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보건복지부 농어촌 보건복지 기본계획의 방향

- 농어촌 보건복지 기본계획은 복지부의 기존 계획들과 달리 보건 및 복지 분야가 함께 포함되어 수립되는 것이 특징임. 또한 복지부 내 다른 기본계획들이 전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면 이는 농어촌만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적 특수성이 내재되어 있음.
- 현실은 복지부의 기존 사업의 공간적 범위만을 농어촌으로 좁혀 단순 정리한 과제가 대다수를 차지함. 따라서 1, 2차 계획 사업 부문 및 세부 과제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 농어촌 보건복지 증진을 위해 농어촌의 특수성이 반영된 과제 발굴이 중요하며, 농어민 체감복지가 향상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 마련 및 그에 따른 사업계획 수립이 필요함.
- 또한 기본계획이라는 측면에서 중앙의 역할과 광역시도의 역할을 고려한 사업 부문 및 과제 설정이 필요함. 중앙정부가 수립하는 기본계획에서는 큰 틀에서 농어촌 보건복지 수준 향상을 위한 계획의 방향성과 핵심과제 위주로 제안하고, 광역시도에서는 지역 특성에 맞는 과제를 추가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two-track 방식의 접근도 고려해야 할 것



- 기본계획의 전달체계에 대한 고려도 미흡함. 광역시도의 역할 및 책임성 강화가 필요하며 농어촌 기본계획 수립·추진과 관련한 거버넌스 개선이 필요함. 현재는 지역의 특수성이 고려된 과제가 발굴되지 않을 뿐 아니라 계획 추진을 위한 자체 역량 또한 부족한 상황으로 농어촌 주민들의 욕구와 전문가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한 시점임.
- 또한 계획 추진에 따른 성과 측정과 평가를 위한 준비가 부족하여 적절한 모니터링과 환류 체계를 통한 선순환 구조를 기대하기 곤란함. 타 부처 유관 계획과의 조정 기능 부재로 부처별 사업이 중복되거나 계획의 실효성이 약화되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음.

4.4. OECD 국제 컨퍼런스 참석 및 현장 시찰

❖ 개요

□ OECD 농촌발전 컨퍼런스 참석(5.18~23)_미국

○ 출장 목적:

- 미국 백악관 농촌위원회(White House Rural Council) 주관으로 개최하는 “제10차 OECD 농촌발전 컨퍼런스”에 참석하여, 농촌지역정책 분야에 있어 참석 국가들(OECD회원 및 비회원)의 최근 정책 동향과 주요 이슈, 대응 방향에 대해 파악함.
- OECD의 지역개발정책위원회(RDPC)는 도시 및 농촌지역개발 관련 정책을 논의하는 위원회와 컨퍼런스를 매년 개최해 오고 있음.

○ 출장자: 농촌정책연구부 엄진영 부연구위원, 권인혜 전문연구원

- 본 컨퍼런스 출장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안호근 국장, 이상준 사무관(지역개발과), 정재원 사무관(농촌정책과), 농촌진흥청 박미정 연구사,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 이정환 주임연구원이 공동 수행함.

○ 출장 지역: 미국 테네시 주, 멤피스

○ 출장 기간: 2015. 5. 18.(월) ~ 5. 23.(토) (4박 6일)

○ 출장 일정:

일자	지역	일정
5.18(월)	인천	- 인천 국제공항 출발 → 디트로이트 공항에서 Transfer → 멤피스 공항 도착
5.19(화)	멤피스	- 사전 컨퍼런스 포럼 - 사전 컨퍼런스 워크숍
5.20(수)	멤피스	- 개회 및 전체회의 - 제 1세션 : 경제 - 고위급 오찬 - 제 2세션 : 사회



5.21(목)	멤피스	- 3세션 : 환경 - 최근 농촌정책 토론
5.22(금) ~5.23(토)	멤피스 /인천	- 공항 도착(멤피스) → 멤피스 공항 출발 → 디트로이트 공항에서 Transfer → 인천국제공항 도착

□ OECD 지역개발정책위원회 회의 참석 및 현장시찰(11.2~6)_프랑스

○ 출장 목적

- 제34차 OECD 지역개발정책위원회(RDPC) 회의에 참석, OECD 등 최근 선진국의 농촌정책 동향을 파악하고 국내 정책개발에 참고
- RDPC : 지역 개발, 도시 문제, 농촌 개발 정책을 논의하는 위원회로서, 매년 4월·11월 개최되며, 하부 작업반으로서 도시정책 작업반·농촌정책 작업반·지역지표작업반이 있음.
- 회의와 연계하여, 프랑스의 체험농장 등 6차산업화 및 중심지 개발 등 농촌지역개발 사례 시찰

○ 제34차 RDPC 회의 개요

- 일시·장소 : 2015. 11. 2.(월) ~ 11. 5.(목), 프랑스 파리 OECD
- 제18차 농촌작업반 회의 : 11.2. 09:30 ~ 18:00
- 제6차 물 거버넌스 회의 : 11.2. ~ 3.
* 별도 사전 등록자만 참석
- 제29차 지역지표작업반 회의 : 11.3. 09:30 ~ 18:00
- 제34차 RDPC 회의 : 11.4. ~ 5.
- 주요 의제 : OECD 추진 글로벌 아젠다, 정책보고서 및 사업예산안 검토, 물 거버넌스 추진계획, 기타 지역이슈 리뷰 등

○ 현지시찰 장소

- 11월 3일: Ferme de Gally(갈리 체험농장) / Bergerie Nationale de Rambouillet (형부이에 국립농장)
- 11월 4일: Le mans (2세대 농촌 우수거점사업 대상지)

○ 출장일정

일자	지역	일정
11/1(일)	파리	- 인천 국제공항 출발 -> 파리 샤를드골 공항 도착
11/2(월)	파리	- 농촌작업반 회의 참석
11/3(화)	Saint-Cyr-l'Ecole	- 지역지표작업반 회의 참석 - Ferme de Gally(갈리 체험농장) - Bergerie Nationale de Rambouillet (형부이에 국립농장)
11/4(수)	Le mans, Chartres	- RDPC 회의 참석 - Le mans (2세대 농촌우수거점사업 대상지)
11/5(목)	파리	- RDPC 회의 참석 - 파리 샤를드골 공항 출발
11/6(금)	인천	- 인천국제공항 도착

❖ 주요 내용

□ OECD 농촌발전 컨퍼런스 참석(5.18~23)_미국

○ 컨퍼런스 개요

- 일시 : 2015. 5. 19.(화) ~ 5. 21.(목)
- 장소 : 미국 테네시주 멤피스, Memphis Cook Convention Centre
- 참석 : 미국·캐나다·멕시코 및 볼리비아·브라질 등 남미 20개 국가 등
- 주관 : 미국 백악관 농촌위원회(Rural Council) 및 농무부(USDA)
- 주제 : 현대 농촌정책을 통한 국가 발전 (농촌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농촌 문제에 대한 경제·사회·환경 부문 등 통합적 접근)

○ 전체 세션: 농촌 지역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통합적 접근

- 농촌 정책이 국가 경제발전에 큰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메시지 전달
- 국가별 정책의 큰 흐름에 대하여 한국, 미국, 일본, 폴란드의 고위급 공무원 발표 및 논의



- 경제 부문 세션(1): 일자리 창출 및 경제적 기회 창출
 - 농촌형 기업(rural firm)에 대한 이해 및 경쟁력 강화 요인 이해
 - 민간(private sector) 기업 육성, 일자리 창출, 경제적 기회 제공을 위한 정부의 역할에 대한 논의
- 경제 부문 세션(2): 도·농 연계
 - 거버넌스 체계, 농촌과 도시지역의 영역적 네트워크를 고려한 정책 전달 및 서비스 접근성에 대한 논의와 함께 규제와 정책 구조 측면에서의 문제 등을 논의
- 사회 부문 세션(1): 증가하는 시민 참여 및 신뢰
 - 농촌개발정책에 있어 시민 참여와 신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정책 사이클에 시민을 참여시킴으로써 어떻게 지역 단위에서 정책이 전달되는지 살펴봄.
 - 국가 차원에서 농촌 이슈에 대한 가시성(visibility)을 향상시킴으로써 농촌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새로운 농촌 개념에 시민을 포함시켜야 할 필요성을 논하고, 공공 부문의 참여와 공적 약속(engagement)을 통해 어떻게 신뢰 수준이 향상될 수 있는지 다룸.
 - 지역에서 공적 투자를 시행함에 있어 신뢰가 핵심인 만큼, 시민 참여는 농촌개발을 증진시키는 방법임.
- 사회 부문 세션(2): 농촌 서비스 접근성 개선
 - 적정수준의 공공·민간서비스의 공급은 거주자의 삶의 질에 있어서 필수적이고 기업의 경쟁력임.
 - 그러나 농촌지역은 다양한 요인들로 인하여 서비스 공급을 위한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등의 문제에 직면
 - 따라서, 본 세션은 농촌지역 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한 참여 주체들의 바람직한 전략 수립과 관련한 정책에 대해 논의
- 환경 부문 세션(1): 기후변화 - 농촌지역의 적응력 향상
 - 농촌지역은 대부분 농업활동 지역으로 기후변화에 매우 취약함.

- 농촌지역의 기후변화에 대한 회복력을 갖기 위한 정부, 지역사회 등의 역할과 정책적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

○ 환경 부문 세션(2): 바이오경제와 농촌정책의 연계

- 본 세션은 바이오경제가 어떻게 하면 가까운 장래에 농촌경제의 한 축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농촌경제에 있어 다각화 전략의 채택이 바이오경제 가치사슬(value-chain) 내에서 어떻게 일자리와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하고, 산업적 특화를 위한 공공의 지원과 관련, 위협요인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는 데 있음.
- 본 세션에서는 특히, 북유럽의 산림기반 바이오경제와 미국의 작물기반 바이오경제 정책에 대해 고찰

□ OECD 지역개발정책위원회 회의 참석 및 현장시찰(11.2~6)_프랑스

○ 농촌작업반 회의 참석 결과

- 향후 농촌작업반은 ‘새로운 농촌정책(New Rural Policy)’ 패러다임에 대한 회원국의 구체적 실행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작업을 진행할 전망
- 각국은 인구 감소 및 고령화, 서비스 접근성 하락 등의 농촌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정부의 역량 강화, 도농연계, 상향식 지역개발 등을 강조
-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의 역할, 식량안보와 영양에 대한 공간적 접근 등의 이슈는 지속적인 연구 진행을 통해 보완될 전망
- 농촌작업반과 다른 국제기구·작업반의 연계, 과거 전통적 농업·농촌 이슈에 대한 융복합적 분석이 이뤄지고 있어 국내 농업·농촌정책의 접근 방식에 참고할 필요
- 또한 이러한 연구들이 통계적 자료에 기반하고 있음을 볼 때 국내적으로도 농촌의 다양한 분야에 대한 통계자료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농촌의 정의에 대한 이슈 또한 지속적인 관심사로 다뤄질 전망이며, 국내적으로 국토부 등도 관심이 있으므로 논의에 적극 대응해야 함.

〈OECD 농촌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구분	구 패러다임	새로운 농촌 패러다임(2006)	새로운 농촌정책(2015~2016)
목적	형평성, 농가소득 중심	농촌 경쟁력	경제, 사회, 환경적 기반에 따른 농촌 삶의 질
주요 대상	부문별 기반	농촌경제의 다양한 부문을 모두 포괄하는 통합적 접근방식	저밀도 경제 및 차별화된 농촌, 융합의 중요성, fat-tail 효과
주요 수단	보조금	투자	상보성, 정책 마련을 위한 거버넌스 구조의 필요성
주체	중앙정부, 농민	여러 계층 거버넌스	각 단계 정부 간 도농 협력관계, 시민 참여

○ 지역지표작업반 및 RDPC 회의 참석 결과

- (지표) OECD는 웰빙 지수를 주관적 요소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개편하고자 하는 등 지역분석을 위한 통계적 기반이 진화하고 있음.
- 국내적으로도 농촌 지역을 통계적으로 비교분석하고 세분화·유형화 하는 작업이 농촌의 정의 문제와 연계하여 필요할 것으로 전망
- (일본) 일본의 심각한 고령화와 인구 감소를 위기인 동시에 기회 요인으로 보고 있으며, 위기로 만드느냐 기회로 만드느냐는 대응전략에 달려 있음을 강조
- 우리나라 농촌도 심각한 고령화와 인구 감소라는 공통적 문제에 직면해 있는 바, 이를 기회 요인으로 분석해볼 필요가 있음.

○ 프랑스 농촌지역개발 현장 방문 결과

- 형부이에 국립농장은 책임운영기관 같은 운영 형태가 특이하고, 갈리농장은 1차(생산)에서 곧바로 3차(체험·판매) 산업으로 연결되는 형태가 특이함.
- 농촌우수거점 사업지는 지역의 생활권과 특성을 감안한 특색 있는 거점 사업의 발굴이 인상 깊음.

〈Cartuna 산림박물관-농촌우수거점지역〉



〈형부이에 국립농장〉





5. 네트워킹 및 정책 지원 기반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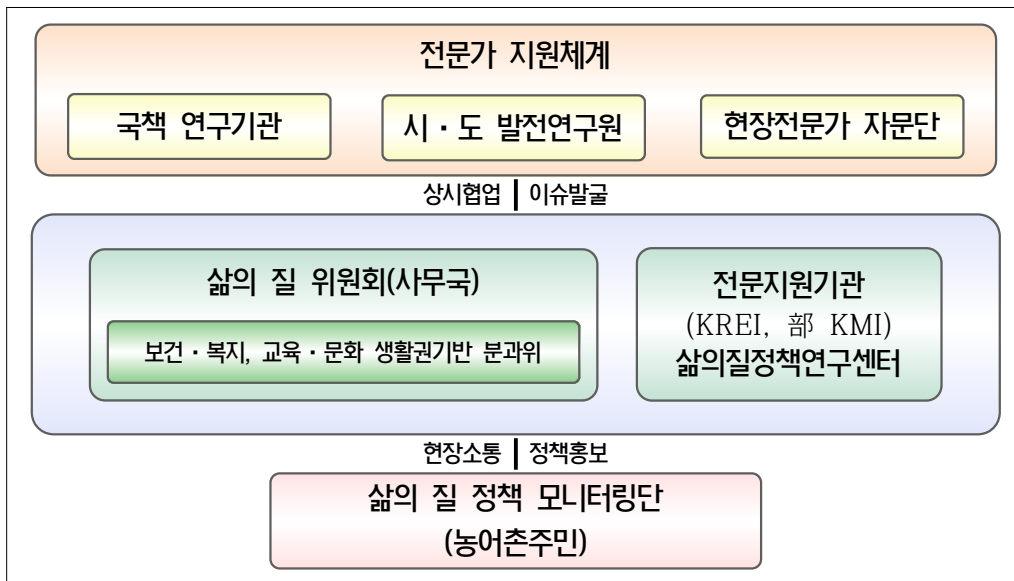
5.1. 정책지원 네트워크 및 현장모니터링단 구성·운영

5.2. 삶의 질 통계DB 구축 및 기타 업무 지원

5.1. 정책지원 네트워크 및 현장모니터링단 구성·운영

❖ 개요

- 분야별 서비스 전달체계의 전문 활동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과의 적극적 소통을 통한 농촌이슈 발굴 및 정책·연구 성과 홍보
- 교사, 사회복지사, 공중보건 의사, 구급대원 등 분야별 서비스 전달자와 지역 활동가·지자체 공무원을 통해 농촌 현장의 여론이나 정책 수요, 연구 수요 등을 시의적절하게 파악하여 대응
 - 현장자문단(57명)을 활용한 연구 자문 및 일부 사례조사 병행
 - 국책연구원(7개), 시도연구원(9개), 전문가, KREI 리포터 등이 참여한 정책지원 네트워크의 일원으로 활동
 - 각종 정책 현안에 대한 수시 의견수렴 체계 구축



❖ 주요 내용

□ 현장자문단 구성 및 운영

○ 운영 개요

구분	내용
목적 및 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전달자 및 현장 활동가의 입장에서 정책 수요와 전달상의 어려움을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연구에 반영하고 적시적인 대안을 마련해 정책당국에 제시 - 현장자문단이란 조직으로 구성하여 현장과의 소통 강화
출 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5년 7월 21일 출범식(서울 양재동 aT 센터) - 정책모니터링단(KREI 리포터)과 함께 현장네트워크를 구성
조직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 조직 정비 - 각 부처의 추천을 통해 신규 위촉 - 복지부, 교육부에서 추천 받은 7명을 신규 위촉
운영시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삶의질정책연구센터에서 운영
성과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자문, 원고 기고 삶의 질 향상 정책 컨퍼런스·대토론회에 사례발표·의견 제시 - 이슈리포트 1·2호에 기고 농어촌 삶의 질 향상 계획 심층연구 자문에 참여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정책 우수사례에 선정

○ 삶의 질 정책 현장 네트워크 출범식

- 일시/장소 : '15. 7. 21. (화) 13:00~14:30 / aT센터 창조룸
- 참석 : 삶의 질 정책 분야별 현장자문단 및 정책모니터링단(약 50여 명)
- 행사 내용
 - * 삶의 질 정책 현장자문단 위촉
 - * 삶의 질 정책 추진 경과 공유
 - * 정책 분야별 삶의 질 정책 아젠다 논의
 - * 삶의 질 정책 현장네트워크 운영 방안 논의

〈현장 네트워크 출범식 참석자 현황〉

분과	성명	소속	구분
1분과 (보건복지 정주기반, 안전)	이주상	설악산배움터	보건복지
	이지윤	정선군종합사회복지관	보건복지
	김진삼	김해시보건소	보건복지
	정인숙	무안군 만풍보건진료소	보건복지
	김수민	강릉시보건소	보건복지
	배충진	사회복지법인 송암선교복지원	보건복지
	문귀정	칠곡군 주민생활지원과 희망복지지원팀	보건복지
	김양희	효경노인복지센터	보건복지
	조영실	영광군 정신보건센터	보건복지
	구문경	양평군 행복돌봄과 무한돌봄센터	보건복지
	오재현	(유)인제하우징	정주기반
	김덕수	(주)진천주거복지센터 두꺼비하우징	정주기반
	문광현	순창군 건강장수연구소	안전
	김인남	경북 상주시 함창읍	KREI 리포터
	박현근	한농 로하스	KREI 리포터
	이동현	농업회사법인 ㈜미실란	KREI 리포터
이현복	당너머한우	KREI 리포터	
2분과 (교육, 문화 여가)	이애희	완주군청 교육지원과	교육
	박현정	충남 서면초등학교	교육
	조성희	충남교육연구소	교육
	박승규	해남교육복지네트워크	교육
	임성희	완주군청 교육통합지원센터	교육
	정지승	옥천군 평생학습지원 평생학습팀장	문화,여가
	현연희	증평군립도서관	문화,여가
	유혜정	농협 지역문화복지센터 충남당진시 순성농협	문화,여가
	전형섭	금수문화예술마을 문화바우처팀	문화,여가
	지금종	이어도사나(사회적기업) 조랑말체험공원	문화,여가
	노웅곤	나주농업회의소	KREI 리포터
	변해동	홍천군 화촌면 외삼포리	KREI 리포터
	이윤희	한빛농원	KREI 리포터
	임광혁	청아테크농산	KREI 리포터
	장석우	친환경알밤농장	KREI 리포터



분과	성명	소속	구분
3분과 (경제활동· 일자리, 환경 경관, 정주기반)	정경환	충남귀농귀촌학교 '자연에서 찾은 행복'	정주기반
	최성준	퍼실리테이터/ 농업회사법인 공장	정주기반
	정형민	농업기술실용화재단	경제, 일자리
	신성우	김천시 도농순환일자리 창출사업단	경제, 일자리
	심일호	안동시농업기술센터	경제, 일자리
	박재숙	고창 배리팜	경제, 일자리
	김용덕	한티영농조합법인	경제, 일자리
	김동수	친환경자연순환농업협회	환경, 경관
	김완주	논산계룡축협	환경, 경관
	반기민	농산촌활성화연구소	환경, 경관
	복권승	지천생태모임	환경, 경관
	박태우	하얀햇살(주)	KREI 리포터
	유영순	충남 서산시 부석면	KREI 리포터
	이종범	다알리아농장	KREI 리포터
	임충빈	서일농원	KREI 리포터

□ 삶의 질 정책지원 네트워크 구성

○ 삶의 질 정책지원 네트워크 구축 협의

- 회의 목적: 삶의 질 향상 정책지원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참여 기관 간 키포인트 및 향후 참여 기관별 역할, 업무 진행 방식 등 협의
- 회의 일시: '15. 4. 24.(금) 13: 30 ~18:00
- 회의 장소: 농림축산식품부(세종청사 5동 412호)
- 참석자: 총 24명
 - * 한국농촌경제연구원(7명): 성주인, 조미형, 심재현, 엄진영, 이제연, 권인혜, 박유진
 - * 농식품부(3명): 김정희 과장, 정재원 사무관, 금경연 주무관
 - * 시·도발전연구원(8명): 강식(경기연), 강종원(강원연), 원광희(충북연), 윤정미(충남연), 이민수(전북연), 조상필(전남연), 채종현(대구경북연), 정재희(경남연)

- * 국책연구기관(6명): 김선배(산업연구원), 김창현(국토연구원), 김태완(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주영(한국문화관광연구원), 박창석(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정광희(한국교육개발원)

○ 삶의 질 정책 네트워크 참여 기관장 협약식(MOU 체결)

- 일시: '15. 7. 21.(화) 15:00~15:30

- 장소: 서울 aT센터 그랜드홀

- 협약 기관(17개 기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토연구원, 산업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경기연구원, 강원발전연구원, 충북발전연구원, 충남연구원, 전북연구원, 대구경북연구원, 경남발전연구원, 제주발전연구원

**농어촌 삶의 질 정책지원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공동 업무 협약서**

농어촌 삶의 질 정책지원 네트워크 참여 연구기관은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에 대해 협약을 체결한다.

1. 목적

본 협약은 농어촌 삶의 질 정책 발전을 위하여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위원회 전문지원기관(이하 “전문지원기관”이라 한다)과 각 연구기관이 “농어촌 삶의 질 정책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상호 협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협력기관

농어촌 삶의 질 정책지원 네트워크에는 전문지원기관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국토연구원, 산업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경기



연구원, 강원발전연구원, 충북발전연구원, 충남연구원, 전북연구원, 대구경북연구원, 경남발전연구원, 제주발전연구원이 참여한다.

3. 협력분야

각 기관은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한다.

- 1)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 기본계획 7대 부문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심층평가 및 공동연구,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시행계획에 대한 점검·평가
- 2) 지역별 농어촌서비스기준 제정·운영,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
- 3)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정책 분야별·지역별 우수 사례 및 이슈 발굴
- 4) 기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정책 관련 지원업무 협조 및 성과 확산 참여

4. 운영원칙

- 1) 각 기관은 상호 협력에 있어 성실과 신뢰를 바탕으로 각자의 역할을 수행한다.
- 2) 원활한 협력관계 추진을 위한 세부 사항은 각 기관들이 상호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 3) 각 기관은 이 협약과 관련한 활동으로 알게 된 비밀사항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안된다.

5. 효력발생 및 수정

- 1) 본 협약의 협약 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5년간으로 하며, 별도의 해지 통지가 없을 시에는 5년 단위로 그 효력이 자동 연장된다.
- 2) 이 협약의 내용에 대한 세부 사항 또는 해석상 이의가 있는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수정과 보완을 결정한다.

2015년 7월 21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원장 최 세 균

최 세 균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원장 김 성 귀

김 성 귀

국토연구원
원장 김 등 주

김 등 주

산업연구원
원장 김 도 훈

김 도 훈

한국교육개발원
원장 백 순 근

백 순 근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원장 박 광 무

박 광 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김 상 호

김 상 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 이 명 선

이 명 선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원장 박 광 국

박 광 국

경기연구원
원장 임 해 규

임 해 규

강원발전연구원
원장 육 등 한

육 등 한

충북발전연구원
원장 정 초 시

정 초 시

충남연구원
원장 강 현 수

강 현 수

전북발전연구원
원장 강 현 직

강 현 직

대구경북연구원
원장 김 준 한

김 준 한

경남발전연구원
원장 조 문 환

조 문 환

제주발전연구원
원장 강 기 춘

강 기 춘

5.2. 삶의 질 통계DB 구축 및 기타 업무 지원

❖ 개요

- 삶의 질 관련 정책지원 기반 마련을 위해 삶의 질 향상 위원회 홈페이지 개편과 농어촌 통계DB 구축 업무를 진행
- 기존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전문지원기관」 홈페이지 콘텐츠 보강과 이용자 온라인 교류, 홈페이지 홍보 등의 추진 계획을 수립
- 현 농어촌의 실태를 객관화된 지표로 보여주고, 농어촌 삶의 질 변화를 중장기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삶의 질 관련 통계DB 구축을 시작, 일차적으로 시도 및 시·군·구 단위 통계 정보를 수집
- 향후 정책 지원을 위한 공간정보 플랫폼 구축 및 삶의 질 홈페이지 확대 개편을 논의하는 자문회의를 진행

❖ 주요 내용

□ 삶의 질 통계DB 구축

- 농어업인 삶의 질 정책과 관련한 부문별 통계 자료 목록 검토
 - 농어촌과 관련한 통계 자료 조사 및 분류(생산기관, 생산주기 등 기본적인 속성 및 생산방식)
 - 통계DB 구축을 위한 사전 작업으로 시도, 시·군·구, 읍·면·동 단위(공표단위 기준)의 121개 통계 리스트 검토 및 자료 구득

<농어촌 관련 통계 자료 목록>

통계 자료 분류	공표단위 기준 구분		
	시도	시군구	읍면동
계획일반	0	3	1
농식품 관리	6	5	6
농어업 인력·법인	2	6	12
농어업 자원 및 생산기반	7	6	5
자연환경 및 보존	5	6	5
농어촌지역 일반	7	22	17
합계(121)	27	48	46

○ 원데이터 수집 및 분류

- 시·도 14건, 시·군·구 32건의 최근년도 통계 자료 DB화
- 통계청 제공 통계 자료: 인구주택총조사, 농림어업총조사, 귀농귀촌통계 등
- 농림부 작성 통계 자료: 농림업생산지수 및 생산액,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농기계 보유 현황 등
- 기타 관련부처 통계 자료(안전행정부, 환경부, 보건복지부 등): 재정자립도, 축산분뇨 발생량, 노인 복지시설 현황 등
- 각 시·군 작성: 시·군통계연보

<통계DB 구축 목록>

구분	통계 자료	출처	년도
시도	주택보급률	주거실태조사	2014
	자가보급률	주거실태조사	2014
	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비율	주거실태조사	2014
	현재주택유형	주거실태조사	2014
	현재주택점유형태	주거실태조사	2014
	기초생활보장수급자수	통계청	2014
	표시과목별 의원수	건강보험통계	2014
	시도별 의료인력 현황	의료이용통계연보	2014
	도시가스보급률	도시가스협회	2014
	폐교한 학교수	폐교활용현황	2014
	지역별 등록장애인 수	통계청	2013
	이주여성 쉼터현황	여성가족부	2013
	이주여성 등록현황	통계청	2013
	정신보건시설 현황	정신보건사업지원단	2013



구분	통계 자료	출처	년도
시·군·구	재정자립도	재정고통계	2013
	인구수, 세대수, 인구이동	통계청	2013
	의료 및 사업장 지정폐기물 발생량	환경부	2013
	영농폐기물발생량	통계청	2013
	자연재해현황	재해연보	2013
	출생, 사망, 혼인, 이혼건수	통계청	2013
	자동차보유대수	통계청	2013
	체육시설현황	도시계획현황	2014
	요양기관수	의료이용현황	2013
	의료인력수	의료이용현황	2013
	다문화가구수	통계청	2014
	건강검진현황	건강보험공단	2013
	노인장기요양의료급여수급	건강보험공단	2014
	장기요양기관(재가,시설)현황	건강보험공단	2014
	장기요양 전문인력 통계	건강보험공단	2014
	보육센터,어린이집 설치	보육통계	2014
	등급,유형별 등록장애인현황	보건복지부 통계	2014
	상수도보급인구	환경부	2013
	귀농귀촌 세대수	통계청	2014
	영농형태별 농가수	통계청	2014
	농가인구	통계청	2014
	전/겸업 농가수	통계청	2014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지정현황	농림축산식품부	2014
	향토산업육성사업지구	농림축산식품부	2014
	농촌재능나눔	농림축산식품부	2014
	상수원보호구역지정현황	환경부	2013
	산업/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환경부	2014
	농기계보유현황	농림부	2013
	국도이용면적	농업생산기반정비통계	2014
	수리시설별 자원현황	농업생산기반정비통계	2014
	논밭별 농지면적	통계청	2014
	시·군별 논 벼 생산량	통계청	2015

○ 영향평가 추수평가 통계표 작성

- 삶의 질 정책 평가를 통해 생산된 2차 통계 자료 업데이트
- 13년 농어촌 영향평가 관련 통계 자료 수집 및 통계표 작성

<영향평가 추수평가 통계표 목록>

구분	통계표 작성	활용 통계 자료
에너지 복지정책	- 난방연료형태별 분포 - 연료비 지출현황 - 에너지 빈곤가구규모	가계동향조사(2014)
	- 저소득계층 난방연료 형태 - 에너지 지원 현황	한국복지패널(2014)
	- 도시가스 보급률 (수요가구수/공급권역내 세대수)	도시가스협회(2014)
정신보건 센터	- 도농간 정신장애 실태 비교	장애인실태조사(2014)
	- 65세 이상 노인자살률	사망원인실태조사(2013)
	- 정신보건시설 현황 (정신의료기관, 정신건강증진센터, 사회복지시설, 정신요양시설, 알코올상담센터)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 사업보고서(2014)
이주여성 긴급지원 센터	- 이주여성 등록현황 - 결혼이주여성 지역별 국적현황	지자체외국인현황(2013)
주택 바우처	- 저소득가구의 주택점유형태	한국복지패널(2014)
	- 지역별 주택유형(단독, 아파트...) - 지역별 주택점유형태(전세, 월세..)	주거실태조사(2014)

○ 공간정보 플랫폼 및 홈페이지 구축 추진

- 별도의 “삶의 질 통계정보시스템” 홈페이지 구성 및 삶의 질 홈페이지와 연동 방안 추진

예) 농업관측 통계시스템 (OASIS)



- 농촌과 관련한 유용한 통계 자료를 공간정보 형태로 시각화하여 별도의 공간정보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제공할 계획
- 현재 농어촌 실태를 보여주는 기초 통계 자료와 삶의 질 정책 7대 부문 관련 통계 자료의 시계열 데이터 구축과 관리

〈전문가 자문회의 회의록〉

- 회의 일시: 2015.11.13.(금)
- 회의 목적: 삶의 질 홈페이지 및 통계DB시스템 관련 전문가 협의
- 참석자
 - 원내 참석자: 성주인, 심재현, 민경찬, 김용욱
 - 원외 참석자: (주)이쓰리 차승훈 이사
- 유사 홈페이지 사례 설명(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 <http://ccas.kei.re.kr>)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의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KACCC)는 기후변화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적응 도구를 개발하기 위해 2009년에 설립됨. 이 곳에서는 적응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전달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음.
 - 초기화면에서 일반 이용자들을 위한 언론 정보, 국내외 이슈와 뉴스레터를 제공하며 지자체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해 구축한 ‘기후변화취약성평가지원도구’ (VESTAP)라는 별도의 통계DB 시스템으로 연결이 가능함.
- 통계시스템 사례

(기후변화 영향 및 취약성 평가지원도구 <http://vestap.kei.re.kr/>)

 - 이 지원도구(VESTAP)는 기초 지자체의 ‘기후변화 적응 세부시행계획’ 수립에 필요한 데이터를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도구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38조’와 관련함.
 - 기초 지자체 공무원들을 주 사용자로 삼고 있으며, 이들이 쉽게 해당 지자체의 취약 정보를 확인하여 활용하도록 제공하고 있음. 또한 제공

되는 자료를 지역 상황에 맞게 수정, 가공하는 기능들을 담고 있음.

- 취약성 평가 결과는 기본적으로 테이블, 차트, 맵, 메타데이터 형식으로 제공되며 읍·면·동 수준의 공간단위를 기초로 하고 있음. 따라서 시·도나 시·군·구 통계 자료의 경우에도 인구밀도, 토지피복현황 등을 반영하여 읍·면·동 데이터로 다운 스케일링하여 구축함.
- 관련 원시자료 약 2,000개 중에 455개 자료를 구축하였고, 이에 대한 메타데이터도 별도로 제공하고 있음. 통계 자료 분석과 시스템 구축을 포함하여 약 3억 4천만 원의 예산이 소요됨.

○ 삶의 질 통계DB 구축 계획

- 삶의 질 센터 통계시스템은 지표 우선이 아닌 공간단위 먼저 보여주는 것으로 지역 기반으로 지표를 수집·생성해서 활용할 예정. 지도상의 특정지역을 선택하면 관련한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몇몇 자료는 대시보드 형태로 별도 제공하도록 구축
- 공간기반의 SDI(selective dissemination of information) 형태의 플랫폼으로 구축되어야 하며, 고정된 데이터 형태가 아닌 자유롭게 자료를 올리고 내리는 것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 따라서 영향평가 데이터와 같은 매년 추가되는 자료도 센터에서 자체 업데이트가 가능하도록 DB 구조가 이루어져야 함.

□ 홈페이지 개편 및 콘텐츠 보강

○ 홈페이지 정보 업데이트

- 삶의 질 정책 연구센터 홈페이지 구축이 이루어 질 때까지 현재 시스템에서 최신 자료를 제공
- 삶의 질 위원회 구성, 업무, 연혁 등을 최신 내용으로 업데이트
- 삶의질정책연구센터 조직 구성 및 업무 내용 업데이트
- 주요 사업 성과 업데이트

<2015년 홈페이지 개편내용>

구분	주요 콘텐츠	2015년도 개편내용
소개	- 삶의 질 위원회 소개 - 전문지원기관 개요	- 위원회 활동 및 연혁 수정 - 조직구성 내용 반영
주요사업	- 사업개요 - 삶의 질 향상계획 심층연구 -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 - 농어촌 영향평가	- 팀별 업무 내용 보완 (점검평가팀, 조사연구팀) - 심층연구 네트워크 구성 및 연구 주제 반영
삶의 질 통계	- 삶의 질 및 지역발전지수 -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지수 - 농어촌 마을 패널조사 - 기타 농어촌 통계	- 2015년 자료 업데이트
자료실	- 보고서 - 이슈리포트 - 관련법 및 계획 - 세미나 토론회 자료	- 이슈리포트 추가 - 2015년 기준 주요 보고서 및 자료 업데이트
정보마당	- 공지사항 및 관련기사	- 각 부문별 관련 언론기사 스크랩 및 제공(570여 건)

○ 농어촌 관련 언론기사 제공

- 농어촌지역의 최근 동향을 파악하고 주요 이슈 발굴을 위한 농어촌 관련 신문 기사 수집
- 참고 신문: 농민신문, 한국농어민신문, 농촌여성신문, 농수축산신문, e축산뉴스
- 신문 기사 중에서 삶의 질 7대 부문과 관련된 기사들을 스크랩
- 농민신문은 보통 격일로 발행되는데, 이 날짜에 맞춰서 다른 신문들의 기사 스크랩을 같이 실시
- (16년 2월 기준)업로드 기사 수: 총 570 건
 - * 이 중 경제활동·일자리 부문이 219건(38%), 보건복지 부문이 137건(24%)순 으로 많이 나타남.
- 총 조회 수: 20,888회, 기사당 평균 조회 수: 36.6회

〈삶의 질 부문별 언론기사 업로드 현황〉

구 분		업로드 기사 수(건)
전 체		570
7대부문	보건·복지	137
	교육	31
	정주생활기반	72
	경제활동,일자리	219
	문화여가	22
	환경경관	45
	안전	44

○ 이슈리포트 제공 및 메인 이미지 변경

- 이슈리포트는 분기별로 주제를 선정하여 전문가, 현장자문단에게 원고를 위탁하고 현장인터뷰를 실시하여 잡지 형태로 발간
- 홈페이지에는 주요 이슈에 대한 인포그래픽과 원문 PDF 파일을 제공
- 분기별 홈페이지 메인 이미지 변경